

# 2005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12

농 립 부

# 목 차

## 제 1 편

### 2004년도 농업동향

제1장 경제동향 .....	3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	3
1. 국내경제동향 .....	3
가. 경제성장 .....	3
나. 물가와 금리 .....	7
다. 고용과 임금 .....	9
라. 경상수지 .....	10
2. 해외경제동향 .....	12
가. 경제성장 .....	12
나. 고용 및 물가 .....	13
다. 교역 및 경상수지 .....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	13
제2절 농촌 경제동향 .....	15
1. 농업구조 .....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15
나. 농경지 .....	16
2. 농가경제 .....	19
가. 소득동향 .....	19
나. 가계지출 동향 .....	23
다. 처분 가능 소득 및 잉여 .....	25
라. 농가자산 동향 .....	26
마. 농가부채 동향 .....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	27

사. 주·부업별 지표 .....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31
가. 개 황 .....	31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4
라. 농촌임료금 .....	35
4. 농림업 부가가치 .....	35
5. 농업생산성 .....	36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	38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38
1. 식량작물 .....	38
2. 원예·특용작물 .....	41
가. 채소류 .....	41
나. 과실류 .....	42
다. 화훼류 .....	42
라. 특용작물 .....	43
마. 인삼류 .....	44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45
가. 축산물 .....	45
나. 사료작물 .....	48
제2절 식품수급동향 .....	50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50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	50
나. 소득계층별 식품소비행태 .....	52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	53

2. 식품 수요 현황 .....	55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	55
나. 자급률 수준 .....	57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	59
3. 식품가공산업 현황 .....	61
가. 산업구조 .....	61
나. 생산동향 .....	62
다. 수출입동향 .....	64
제3절 농산물 교역 동향 .....	65
1. 농산물 수출입 동향 .....	65
가. 수출동향 .....	65
나. 수입동향 .....	67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	68
가. 농산물 교역규모 .....	68
나. 농산물 교역동향 .....	68
제3장 국제 농업동향 .....	70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70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70
가. 개 요 .....	70
나. 쌀 .....	70
다. 밀 .....	70
라. 옥수수 .....	71
마. 대 두 .....	7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72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74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	74
가. 미 국 .....	74
나. 중 국 .....	77
다. 일 본 .....	81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83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	88
가. 미 국 .....	89
나. 일 본 .....	90
다. 중 국 .....	90
라. 캐나다 .....	91
마. 유럽연합 .....	92
바. 중남미국가 .....	93
사. 기타국가 .....	94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	96
1. WTO 활동 .....	96
2. OECD 활동 .....	98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	98
나. 최근 활동 .....	98
3. FAO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	100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	103
5. APEC관련 활동 .....	104
가. 개 요 .....	104
나. 주요 활동 .....	105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	108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	108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	109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	110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	112

---

## 제 2 편

### 2004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117
제1절 농업·농촌 종합대책 .....	117

제2절 2004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	121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	121
2. 농특세 연장 추진 .....	124
제3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26
1. 농업·농촌 투융자현황 .....	126
2. 농업 투융자 사업의 평가실시 .....	128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128
나.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	129
3.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 및 투융자 방식 개선 .....	130
가.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	130
나.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 .....	131
다.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보완 .....	132
제4절 농림행정 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35
1. 농림행정 규제완화 .....	135
2. 농정조직의 개편 .....	137
가. 주요 추진내용 .....	137
나. 농림부 「진단·변화관리」 추진 .....	138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	139
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	140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140
제5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	141
1.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141
가.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41
나. 주요추진사항 .....	142
2. 농업기반공사 .....	145
가. 공사의 혁신 추진 .....	145
나. 주요 혁신내용 .....	146
3. 농수산물유통공사 .....	148
4. 한국마사회 .....	150
가. 급격한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	150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	150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54
1. 농어업특위 현황 .....	154
2. 2004년도 농어업특위 운영 현황 .....	155
가. 본위원회 .....	155
나. 분과위원회 .....	156
다. 쌀·DDA협상협의회 .....	160
라. 지역농어업특위 .....	162
3. 2005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	163
제2장 2004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	166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166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	166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	167
3. 토양개량사업 추진 .....	168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	169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169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	169
나. 축산업등록제 추진 .....	171
제2절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	172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도입 .....	172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	173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175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	175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176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177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179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	179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	179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180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182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	182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183
다. 받기반정비사업 .....	184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186
마. 배수개선사업 .....	186
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187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	188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	189
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	190
3. 농업전문인력 육성 .....	190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190
나. 농업법인육성 .....	192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	193
라. 여성농업인 육성 .....	194
마. 농업벤처 육성 .....	202
바.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	203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205
1. 농업관측제도 정착 .....	205
2. 산지유통의 거점화·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 .....	207
3. 농산물 물류표준화(규격출하)사업 추진 .....	209
4. 축산물시장 차별화 .....	210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211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	211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	211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	212
다. 효율적인 유통-수출 시스템 구축 .....	213
라. 우리 농산물 해외수요기반 마련 및 조성 활동 .....	213
마. 수요자 중심으로 수출자금 지원 .....	214
바.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	215
2. 수입관리 대책 .....	215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	215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	216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	216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	216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	217
1. 쌀 협상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217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	217
나.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	218
다. 쌀소비 촉진 전개 .....	219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	220
2. 쌀생산조정제 실시 .....	223
3.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	224
4.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	225
5. 가축개량 활성화 .....	227
6. 우유수급안정대책 .....	231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232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	232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232
나. 친환경농업 직불제 .....	234
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	236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237
가.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추진 .....	237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241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243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	244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24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245
2. 농공단지 조성사업 .....	247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248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249
1.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농촌 복지·교육·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 .....	249

2. 농특세 연장 추진 .....	251
3.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253
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	253
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254
다. 농가주거환경개선 .....	254
라.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	255
마.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	257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 추진 .....	258
5. 농촌의 교육·의료·정보화 등 생활여건 개선 .....	260
가. 복지지원 개선사항 .....	260
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 .....	261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	261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262
제10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	263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	263
가. 기본골격 및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	263
나. DD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	266
2.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대응 .....	267
가.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의 의미 .....	267
나. 관세화유예의 조건 .....	268
다. 대응방향 .....	268
3. 한·칠레 FTA 추진 .....	269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	269
4. 남북농업협력 추진 .....	271
가. 정 부 .....	271
나. 민간지원단체 .....	272
제11절 한·칠레 FTA비준 후속대책 .....	273
1. 추진배경 .....	273
2. 지원대책 수립 및 기본 추진방식 .....	273
3. 지원대책 추진실적 .....	274
4. 지원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 .....	276

2005년도 농정시책

제1장 2005년도 농정방향 ..... 281

제1절 2005년도 농정목표 ..... 281

제2절 2005년도 농정시책방향 ..... 282

1. 쌀산업의 체질강화와 쌀농가 소득안정 ..... 282

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282

나. 고품질 쌀 생산·유통 효율화 ..... 282

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283

라. 공공비축제 도입 ..... 283

2. 농지제도 개선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 ..... 283

가. 농지은행제도 도입 ..... 283

나. 산지유통 활성화 ..... 284

다.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 284

3.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 ..... 285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285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대 등 ..... 286

제3절 2005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 286

1. 2005년 농림예산 편성 방향 ..... 286

2. 2005년 농림예산 규모 ..... 288

제4절 농정추진 체계 개선 ..... 289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 289

2. 농림사업 성과평가 및 효율성 제고 ..... 290

가. 2004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 290

나. 2005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계획 ..... 292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개선 ..... 294

3. 농림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295
가. 농림행정 제도개선 .....	295
나. 농림행정 규제완화 .....	297
4. 농림조직의 개편 .....	298
가. 농림부 .....	298
제2장 2005년도 주요농정 시책 .....	302
제1절 쌀 협상 국회비준 추진 및 쌀산업 구조개편 .....	302
1. 쌀 협상 결과 .....	302
가. 이행계획서 내용 .....	302
나. 쌀 협상 검증 및 국회비준동의안 처리 .....	303
2. 쌀산업 구조개편 .....	303
3. 쌀 전업농 육성 .....	307
4. RPC 경영혁신 .....	308
5.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	310
제2절 농업 전문인력 양성 .....	312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312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	313
3. 경영컨설팅 지원 .....	314
4. 농업벤처 육성 .....	315
5. 여성농업인 육성 .....	315
가.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및 지위향상 촉진 .....	315
나.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	317
다.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	318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319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319
가.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319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	320
다.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	320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	320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	321
3.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322
4.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	324
5. 가축개량 추진 .....	325
6.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	329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	333
8. 친환경 농업 육성 .....	334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335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혁신 .....	335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	335
나. 공동선별비 지원확대 등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	337
2.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338
3. 농식품 수출확대 .....	339
4.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	341
제5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	342
1. 직접지불제 확충 .....	342
가.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 .....	342
나. 2005년도 추진현황 .....	343
다. 향후 추진 계획 .....	343
2. 농외소득 기반 확대 .....	345
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	345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345
가. 국재재보험제도 도입 및 기금설치·운용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	345
나. '05년 보험사업추진 및 국가재보험 약정체결 .....	345
다.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2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	346
4. 농가부채 경감대책 .....	347
가. 추진배경 .....	347

나. 부채대책 내용 .....	348
다. 부채대책 추진 .....	349
라. 향후 추진계획 .....	351
제6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352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352
가. 수립배경 .....	352
나. 추진경과 .....	353
다. 주요내용 .....	355
2.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	357
가. 사회안전망 확충 .....	357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	357
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	357
라.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 .....	358
마. 교육비 부담경감 .....	358
3.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 .....	359
4.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361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361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	362
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	363
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363
5.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	364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364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 .....	365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366
라. 농림지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	367
마.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 추진 .....	368
제7절 농정제도 개혁 .....	369
1. 농지제도 개선 .....	369
2. 농지은행제도 도입 .....	371
3. 협동조합 개혁 .....	372
가. 추진현황 및 방향 .....	372

나.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	373
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374
가. 추진배경 .....	374
나. 기본 정책방향 .....	375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	375
라. 향후 추진계획 .....	377
제8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	378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	378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적극 대응 .....	378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확보 추진 .....	379
2.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380
가.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 .....	380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	381
다. 남북 농업협력 위원회 발족 .....	384
라.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대비 체계 .....	386

---

## 부 록

2004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	389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515
2005년도 예산개요 .....	605

# 표 목 차

## 제 1 편

### 2004년도 농업동향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	3
<표 1-1-2> 산업별 성장률 .....	4
<표 1-1-3> 소비동향 .....	5
<표 1-1-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 .....	6
<표 1-1-5> 투자지출 동향 .....	6
<표 1-1-6> 물가동향 .....	7
<표 1-1-7> 수출입 물가 .....	8
<표 1-1-8> 시중실세금리 .....	8
<표 1-1-9> 고용동향 .....	9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	10
<표 1-1-11> 경상수지 .....	11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실질 GDP 기준) .....	12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	13
<표 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 .....	14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	14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16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	17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	17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	18
<표 1-1-20> 휴경면적 .....	18
<표 1-1-21> 농가소득 .....	19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	20



<표 1-1-23> 농업소득 .....	20
<표 1-1-24> 농업총수입 .....	21
<표 1-1-25> 농업총수입 구성비 .....	21
<표 1-1-26> 농업경영비 .....	22
<표 1-1-27> 농외소득 .....	22
<표 1-1-2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	23
<표 1-1-29> 가계비 지출 .....	23
<표 1-1-30> 소비 지출 .....	24
<표 1-1-31> 비소비 지출 .....	25
<표 1-1-32> 가처분소득/잉여금 .....	25
<표 1-1-33> 농가자산 .....	26
<표 1-1-34> 농가부채 .....	27
<표 1-1-35>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	27
<표 1-1-36> 주·부업별 지표 .....	28
<표 1-1-37>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	29
<표 1-1-38>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	30
<표 1-1-39>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	30
<표 1-1-40> 지역별 주요지표 .....	31
<표 1-1-41>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	32
<표 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3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4
<표 1-1-44> 농촌임료금 동향 .....	35
<표 1-1-45>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	36
<표 1-1-4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	36
<표 1-1-47> 농업생산성 지표 .....	37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	39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	39
<표 1-2-3> 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	40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	41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	42
<표 1-2-6> 화훼산업 현황 .....	43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	44
<표 1-2-8> 인삼생산동향 .....	45
<표 1-2-9> 쇠고기 수급동향 .....	45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	48
<표 1-2-11>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	49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	50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	51
<표 1-2-1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4년도 도시가구 평균) .....	52
<표 1-2-15>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	53
<표 1-2-16>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	54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	56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	58
<표 1-2-19>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	59
<표 1-2-20>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	60
<표 1-2-21>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	62
<표 1-2-22>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	64
<표 1-2-23>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	65
<표 1-2-24> 농식품 수출동향 .....	66
<표 1-2-25>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	67
<표 1-2-26> 남북교역 동향 .....	68
<표 1-2-27>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	69
<표 1-2-28>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	69
<표 1-3-1> 주요곡물수급전망 .....	71
<표 1-3-2> 국제곡물가격추이 .....	73
<표 1-3-3> 미국 주요 농업지표 .....	74
<표 1-3-4>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	78
<표 1-3-5>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	81
<표 1-3-6> EU 농업의 주요 지표(2003) .....	85
<표 1-3-7> 연도별 FAO 분담금 내역 .....	101

2004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표 2-1-1> 총투융자 규모 ..... 119

<표 2-1-2> 분야별 투융자 규모 ..... 119

<표 2-1-3> 2004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 124

<표 2-1-4> 2005~2014년 농특세 사업별 투융자 계획 ..... 125

<표 2-1-5> 2004년도 농업·농촌투융자 실적 ..... 126

<표 2-1-6> 2004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 127

<표 2-1-7> 2004년도 계획대비 실적미달 주요사업 내역 ..... 128

<표 2-1-8>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04년말 현재) ..... 165

<표 2-2-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 174

<표 2-2-2>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 178

<표 2-2-3> 2004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 180

<표 2-2-4> 2004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 181

<표 2-2-5>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 183

<표 2-2-6>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 184

<표 2-2-7>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185

<표 2-2-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186

<표 2-2-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187

<표 2-2-10>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187

<표 2-2-1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188

<표 2-2-1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계획 ..... 189

<표 2-2-13>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 190

<표 2-2-14> 2004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 191

<표 2-2-15> 농가인구 추이 ..... 195

<표 2-2-16> 연도별 여성농업인 교육현황 ..... 197

<표 2-2-1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적 ..... 198

<표 2-2-18>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 199

<표 2-2-19>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실적 ..... 200

<표 2-2-20> 여성농업인육성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	201
<표 2-2-21> 2004년 컨설팅서비스 지원실적 .....	204
<표-2-2-22> 주요농축산물 품목별 발표시기 .....	206
<표 2-2-23>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	215
<표 2-2-24>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	221
<표 2-2-25> RPC 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	222
<표 2-2-26> RPC유통비율 .....	222
<표 2-2-27> 쌀생산조정제 지원실적 및 '05 계획 .....	223
<표 2-2-28>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	224
<표 2-2-29> 축산물 가격동향 .....	226
<표 2-2-30> 2004년도 가축개량 성과 .....	228
<표 2-2-31> 2004년도 가축개량사업 지원실적 .....	230
<표 2-2-32>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	235
<표 2-2-3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	236
<표 2-2-34>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 (2004.12.31일 현재) .....	240
<표 2-2-35>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	242
<표 2-2-36> 가축공제 가입률 .....	244
<표 2-2-37>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	248
<표 2-2-38> 농산물가공산업 추진계획(2004년) .....	249
<표 2-2-39> 2005~2014년 농특세 사업별 투융자 계획 .....	252
<표 2-2-40> 상수도 보급현황 .....	254
<표 2-2-41> 읍·면지역 인구 추이(1980-2000년) .....	258
<표 2-2-4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실적 .....	261
<표 2-2-43>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	262
<표 2-2-4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	262
<표 2-2-45>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	263
<표 2-2-46> '04년도 과수 생산·유통지원(지방자율)사업 지원실적 .....	275
<표 2-2-47> '04년도 중앙추진사업 지원실적 .....	276

2005년도 농정시책

<표 3-1-1> 2005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 288

<표 3-1-2> 2005년 농·소·정협력 지원사업 ..... 290

<표 3-1-3> 2004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 291

<표 3-1-4>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크리스트와 개인성과관리 항목  
(계속사업의 경우) ..... 294

<표 3-2-1> 쌀 전업농 육성 주요 추진실적('95~'04년) ..... 308

<표 3-2-2>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 329

<표 3-2-3> BSE 검사현황 ..... 330

<표 3-2-4> 연도별 발생동향 ..... 331

<표 3-2-5>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 336

<표 3-2-6>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 344

<표 3-2-7>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 345

<표 3-2-8> '05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 346

<표 3-2-9>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  
(2005. 9. 30일 현재) ..... 351

<표 3-2-10>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투융자계획  
( '05~'09) ..... 356

<표 3-2-11>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 364

<표 3-2-12>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 367

<표 3-2-13>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유형별 현황 ..... 376

<표 3-2-14> 연도별 대북 정부지원 현황 ..... 382

<표 3-2-15> 연도별 대북 민간지원 현황 ..... 383

## 그림목차

<그림 2-2-1> 한우개량 추세도 .....	227
<그림 2-2-2> 농산어촌의 삶의질 실태조사 결과 종합 .....	251
<그림 3-2-1> 양정제도 개편 .....	305
<그림 3-2-2> 쌀산업 개편 방향 .....	306
<그림 3-2-3> 젓소개량 체계도 .....	328
<그림 3-2-4> 돼지개량 체계도 .....	328

## 제1편 2004년도 농업동향

제1장 경제동향 .....	3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	38
제3장 국제 농업동향 .....	70

## 제1장

## 경제동향

##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 1. 국내경제동향

## 가. 경제성장

2004년 중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지만 민간소비 부진과 건설투자의 성장세 감소로 전년대비 4.6% 성장하는데 그쳤다. 분기별로는 1/4~3/4 분기까지 수출의 높은 증가세로 5.6% 성장하였으며, 4/4 분기들어 민간소비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3.3% 성장하는데 그쳤다.

&lt;표 1-1-1&gt;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9.3	3.8	7	3.1	4.6
경제 활동별	전산업	9.8	3.1	6.3	3.1	4.6
	농림어업	2	1.1	△3.5	△5.3	7.4
	제조업	15.9	2.2	7.6	5.5	11.4
	서비스업	9.5	4.8	7.8	1.6	1.3
재고증가율		16.1	0.0	△0.2	△0.6	9.4
제조업평균가동율		78.6	75.3	78.4	78.3	80.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 산업별 생산활동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전년대비 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해면어업의 생산감소로 부진했던 어업을 제외하고 농산물, 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광업 역시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에 이어 2.3% 증가했다.

<표 1-1-2>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농림어업	△3.5	△5.3	7.4	6.8	3.1	5.3	10.4
광업	△7.7	0.9	2.3	4.2	2.1	1.3	1.7
제조업	7.6	5.5	11.4	12.2	13.7	12.0	8.0
전기 가스 수도사업	7.7	4.7	6.2	6.3	6.6	7.4	4.3
건설업	2.8	8.6	1.7	4.9	3.7	2.2	△2.2
서비스업 <sup>1)</sup>	7.8	1.6	1.3	1.5	1.7	1.3	0.6
도소매 음식숙박업	5.4	△2.8	△0.5	△1.5	△0.3	△0.1	△0.1
운수창고 및 통신업	9.2	4.8	5.7	6.8	6.6	5.0	4.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8.3	2.1	0.8	1.2	.2	0.9	0.0
국내총생산	7.0	3.1	4.6	5.3	5.5	4.7	3.3
국민총소득	7.0	1.9	3.8	4.7	4.7	3.6	2.3

주 : 1) 수입세 포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은 내수부진으로 경공업이 전년대비 1.0% 감소한데 반해,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산업용기계 등의 수출호조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1.4%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력수요의 증가로 6.2%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각종 시설 건설이 감소하여 성장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의 여파로 전년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이 각각 0.3%, 0.8% 감소하였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서비스업은 전년대비 각각 5.7%, 0.8% 증가하였다.

### (2)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은 매분기 증가해 연간 3.0% 증가하였고 내수회복 지연으로 가계 소비지출은 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이어지던 민간소비 감소추세가 4/4 분기 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반전되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표 1-1-3>

### 소 비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7.6	△0.3	0.2	△0.5	0.4	△0.1	0.9
민간소비지출	7.9	△1.2	△0.5	△1.3	△0.5	△0.8	0.6
정부소비지출	6.0	3.8	3.0	3.0	4.2	2.9	1.9

자료 : 한국은행

### (3) 저축 및 투자

2004년 총저축률은 작년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4.9%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총가처분소득이 7.6% 증가한데 반해 소비는 4.2%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증가와 소비지출 부진으로 상승한데 반해 정부저축률은 소비부진이 세수증가세 둔화로 이어져 감소했다.

<표 1-1-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총 저 축	31.3	32.8	34.9
민 간	19.5	21.1	24.0
일 반 정 부	11.8	11.6	10.9
총 투 자	29.1	30.1	30.3
민 간	23.8	24.1	24.9
일 반 정 부	5.3	6.0	5.4
투자재원자립도	107.3	109.0	115.2

자료 : 한국은행

총투자율은 당해년도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총고정투자의 증가율(5.9%)이 가처분소득증가율(7.6%)에 미치지 못했으나 재고투자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0.2% 증가한 30.3%를 기록하였다.

<표 1-1-5>

투자지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6.6	4.0	1.9	2.2	4.3	3.0	△1.2
설 비 투 자	7.5	△1.2	3.8	△0.3	6.2	6.8	2.5
건 설 투 자	5.3	7.9	1.1	4.9	3.6	1.3	△3.4

자료 : 한국은행

총고정자본 형성은 건설투자의 성장 둔화로 1.9% 성장하는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투자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3.8% 증가하는데 그쳤다.

## 나. 물가와 금리

## (1) 물가

2004년 중 소비자 물가는 3.6%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며 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채소는 작황이 좋아 5% 하락했지만 일부 과일류의 출하부진과 광우병 확산의 영향으로 과일류 24.3%, 축산물 15.0% 상승해 전체적으로 8.9% 상승했다.

&lt;표 1-1-6&gt;

## 물가 동향

(단위 : 전기동기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2.7	2.8	3.6	3.3	3.3	4.3	3.4
농 축 수 산 물	6.2	6.2	8.9	8.6	10.7	13.0	3.8
공 업 제 품	1.7	1.6	2.6	2.2	1.1	3.5	3.7
서 비 스	2.8	2.8	3.1	3.4	2.7	3.0	3.1
생 산 자 물 가	△0.3	2.2	6.1	4.1	5.9	7.3	6.5
농 립 수 산 품	2.5	5.7	12.1	15.3	15.7	16.7	3.4
공 산 품	△1.5	1.8	7.5	3.7	6.9	9.2	9.6
전 력·수 도·가 스	△3.2	3.0	0.9	0.3	△1.2	0.6	3.9
서 비 스	2.1	3.0	2.8	3.1	2.9	3.1	2.5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중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기대비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4분기 중 상승세가 둔화되고 9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9월 이후 농산물 출하가 확대되고 유가가 하락한데서 기인한다. 생산자 물가도 농산물 출하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6월 중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2003년 7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반전되었다. 하반기에도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안정세를 보였으나 연간 상승율은 6.1%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공산품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등락하였으나 농산품은 전체적인 작황호조로 생

산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수출물가는 연평균 6.2% 증가하였다. 6월중 유가 하락으로 잠시 주춤하던 수출 물가는 하반기 유가 상승에 따라 다시 상승하였다. 농수산품은 하반기 조개, 미역등의 일본수요 증가와 수확량 감소로 증가하였으며 공산품은 수요부족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품이 하락하였다.

수입물가는 대미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2% 상승하였다. 6월중 일시적인 유가 안정에 따라 전월대비 하락 안정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유가 상승과 금속소재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7>

수출입 물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수출물가	△7.0	△2.2	6.2	2.0	6.4	11.0	5.0
수입물가	△6.2	1.8	10.2	4.8	11.7	16.1	8.4

단위 : 한국은행

(2) 금 리

2004년 중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콜금리 목표 인하와 경제회복 지연에 따른 정책금리 추가 인하 기대로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단기시장금리는 시장 수요에 따라 분기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장기금리와 함께 하락하였다.

<표 1-1-8>

시중실세금리

(단위 : 연%)

	2001	2002	2003	2004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7.04	6.59	5.43	4.71
C D 유통 수 익 률(3년)	5.30	4.80	4.31	3.78
콜 금 리(1일)	4.63	4.16	3.95	3.61

자료 : 재경부

## 다. 고용과 임금

## (1) 고 용

2004년도 고용사정은 취업자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상승하며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분기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및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1.9% 상승하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6.8%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설비 투자 부진으로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lt;표 1-1-9&gt;

## 고 용 동 향

(단위 : 천명, %)

	2002	2003	2004	증감율(%)
경제활동인구	22,921	22,957	23,417	2.0
경제활동참가율	61.9	61.4	62.1	0.7P
취업자	22,169	22,140	22,557	1.9
농림어업	1,999	1,877	1,749	△6.8
제조업	4,241	4,205	4,290	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5,841	15,967	16,427	2.9
건설업	1,746	1,816	1,820	0.2
실업자	752	818	860	5.1
실업률	3.3	3.6	3.7	0.1P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2) 임 금

2004년도 근로자 명목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연중 6.0% 올라 전년의 9.2%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내역별로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1.7% 및 4.6%의 둔화된 상승률을 보여 전체 임금 상승폭을 낮추는데 기여했으며 정액급여는 6.8% 상승하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2.4% 증가하여 2003년에 이어 생산성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부문별로는 IT산업이,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크게 상승하였다.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명 목 임 금	11.2	9.2	6.0	3.9	5.0	7.3	7.7
실 질 임 금	8.2	5.5	2.3	0.7	1.6	2.9	4.2
제 조 업 노 동 생 산 성 <sup>1)</sup>	5.1	3.7	2.4	4.0	2.9	1.9	0.8

주 : 1) 제조업 불변GDP/(취업자수×근로시간)  
자료 : 노동부, 한국은행

#### 라. 경상수지

2004년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로 전년 120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 흑자 규모가 전년 220억 달러에서 382억 달러로 늘어났다. 서비스수지는 화물운임과 해외여행객 증가로 8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소득수지는 7.2억 달러의 흑자로 지난해 3.3억 달러 보다 흑자폭이 증대되었다. 한편 경상이전 수지는 증여성 송금 등에 의해 25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 (1) 수 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하여 전년의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였다. 이 중 재화 수출의 증가율은 경공업 제품이 섬유, 의복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나 중화학공업제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보다 신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1.0%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수출호조로 화물운임 수입이 늘고 외국인 출입국자 수의 증가로 여객운수 수입이 증가한 데다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지출도 늘어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다.

&lt;표 1-1-11&gt;

##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경 상 수 지	80.3	53.9	119.5	276.1
상 품 수 지	134.9	147.8	219.5	381.6
수 출	1,514.8	1,634.1	1,972.9	2,577.5
수 입	1,379.9	1,486.4	1,753.4	2,195.8
서 비 스 수 지	△38.7	△82.0	△74.2	△87.7
소 득 수 지	△12.0	4.3	3.3	7.2
경 상 이 전 수 지	△3.9	△16.2	△29.0	△25.0

자료 : 한국은행

## (2) 수 입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다. 재화수입은 음식료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섬유가죽제품과 가구 등이 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산업용기계,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 대부분의 중화학공업 제품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13.8%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입은 화물 및 여객운임과 특허권 사용료 등의 지급과 해외여행자수의 증가로 가계의 국외소비지출도 늘어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다.

## (3) 자본수지

2004년 중 자본수지는 2/4분기 중 주식투자자금의 유출 등으로 말미암아 적자로 반전되었다. 하반기에도 직접투자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증권투자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적자가 지속되었다.

## (4) 환 율

2004년도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상반기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 금리인상 기대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상승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미국의 적자수지 확대와 미당국의 달러 약세 용인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달러화 약세 분위기가 형성 되었으며, 대미 달러화 환율은 1/4분기 1,172원에서 12월 1,044원 수준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 2. 해외경제동향

### 가. 경제성장

<표 1-1-12>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실질 GDP 기준)

(단위 : 전년대비, %)

	2001	2002	2003	2004
세 계	2.3	3.0	3.9	5.0
선 진 국	0.9	1.6	2.1	3.6
미 국	0.5	1.9	3.0	4.4
일 본	0.4	-0.3	1.4	2.7
E U	1.6	0.9	0.6	1.8
개 도 국	4.1	4.8	6.1	6.6
한 국	3.8	7.0	3.1	4.6
중 국	7.3	8.3	9.3	9.5
중 남 미	0.7	-0.9	1.9	5.7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5.0% 성장하였다. 세계경제는 상반기 중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하는 듯 했으나 하반기 고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소비 및 수출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반기 중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가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나타내며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유로지역 역시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중국은 9%대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 나. 고용 및 물가

2004년중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상반기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하반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1/4분기 중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2/4분기 중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4/4분기 실업률은 1/4분기 보다 0.2%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쳐 5.4%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자수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4분기 실업률이 4.6%로 하락했으나 3/4분기 다시 4.8%로 상승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했다.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 유가상승에 따라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본의 물가는 하반기 중 하락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었다. 중국은 과열경기 진정정책에도 불구하고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어갔다.

### 다. 교역 및 경상수지

200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6천6백억 달러로 만성적인 적자문제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1%, 10.9% 증가해 적자폭이 감소했으며 유로지역은 수입이 10.2%로 수출 증가율 7.4%를 앞질러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 십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미 국	△ 393	△ 480	△ 541	△ 665
일 본	87	112	136	134
유 로 지 역	△ 3	61	23	61

자료 : 한국은행

###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4년 미국 금리는 상반기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유지기대가 확산되며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5월 중 1.0%였던 금리

(Federal Funds Rate기준)는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임에 따라 정책금리 조 기인상 기대감이 확산되어 12월 2.25%까지 상승했다.

<표 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sup>1)</sup>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미            국 <sup>2)</sup>	1.75	1.25	1.00	2.00
일            본 <sup>3)</sup>	0.10	0.10	0.10	0.10
유    로    지    역 <sup>4)</sup>	3.29	2.75	2.00	2.00

주 : 1) 기말기준, 2) Federal Funds Rate, 3) 공정 할인율, 4) 단기 공개시장조작 금리.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중 미 달러화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우려와 미국의 달러 약 세 용인 가능성, G20회의의 구체적인 달러 대책 부재 등으로 유로화 및 엔 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하되었다.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2001	2002	2003	2004
미    달    러 / 유    로	0.890	1.050	1.258	1.277
일    본    엔 / 미    달    러	131.5	118.8	107.0	103.8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선, 연구원 심송보)

## 제2절 농촌 경제동향

### 1. 농업구조

####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4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40천가구로 전년의 1,264천가구보다 24천가구(△1.9%)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415천명으로 전년의 3,530천명보다 115천명(△3.3%)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농가수 및 농가인구 감소는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 농가의 도시전출, 타산업 전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63.3%인 785천가구로 전년의 813천가구(64.3%)보다 28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며,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36.7%인 455천가구로 전년의 452천가구(35.7%)보다 3천가구가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7.4%(478천명), 70세 이상 경영주는 19.4%(248천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8,082천명)중에서 농가인구(3,415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7.4%)보다 소폭 낮아졌으며,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0~14세 10.3%, 15~64세 60.3%, 65세이상 29.4%로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인구×100)는 284.2로 전년의 260.3보다 크게 높아져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인구의 성별 비중은 남자가 1,654천명으로 48.4%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3	2004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264	1,240	△ 24	△ 1.9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530 (7.4)	3,415 (7.1)	△ 115	△ 3.3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79	2.75			
연령별 농가 인 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1,957 (55.4)	1,940 (56.8)	△ 17	△ 0.9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573 (44.6)	1,475 (43.2)	△ 98	△ 6.2
성 별 농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715 (48.6)	1,654 (48.4)	△ 61	△ 3.6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1,815 (51.4)	1,761 (51.6)	△ 54	△ 3.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0천ha 줄어든 1,836천ha로, 이 가운데 논면적은 1,115천ha로 전년에 비하여 12천ha 감소하였으며, 밭면적은 721천ha로 1천ha가 증가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6.7천ha), 공공시설(5.7천ha), 기타사유(6.2천ha)로 인하여 총 18.6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간척(7.5천ha), 복구 등(0.6천ha)으로 총 8.2천ha 경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941천ha로 전년보다 5천ha가 증가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3.9%에서 105.2%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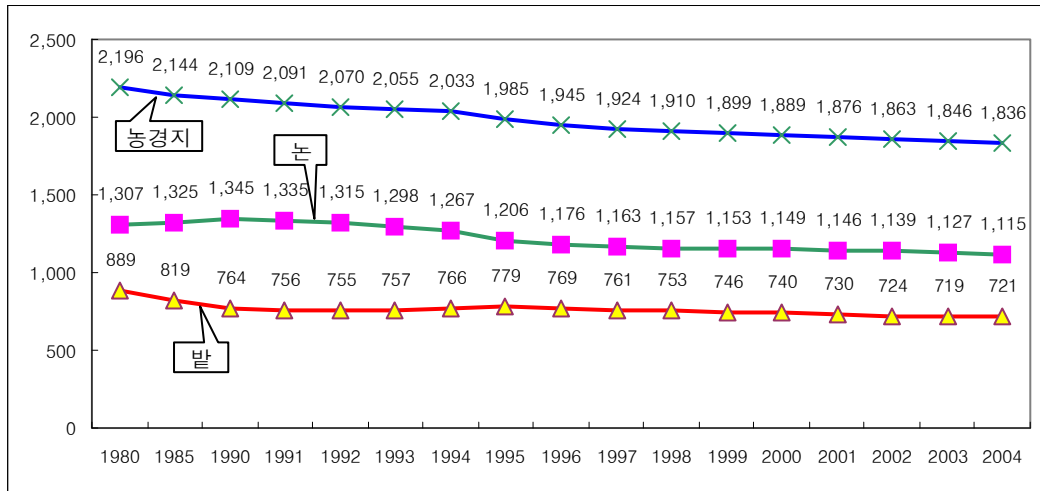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231천ha로 전년보다 3천ha 감소, 특용작물은 76천ha로 전년보다 9천ha 감소, 채소는 255천ha로 10천ha 증가, 과수는

153천ha로 6천ha 감소, 시설작물은 104천ha로 전년보다 4천ha 증가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48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2천ha가 증가되었고, 휴경율은 전년보다 1.0%p늘어난 2.6%로 나타났다.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 물 건축	공 공 시설	기 타	
19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1996	12.1	8.9	0.5	2.7	51.9	16.8	6.6	28.5	△39.8
1997	10.9	5.5	3.1	2.3	32.9	10.4	7.1	15.4	△22.0
1998	12.3	5.9	3.1	3.3	25.3	6.3	5.9	13.2	△13.0
1999	12.0	8.1	0.8	3.1	23.0	5.0	7.5	10.5	△11.0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지이용면적	2,197	2,118	2,098	2,089	2,020	1,936	1,941
식 량 작 물	1,346	1,332	1,318	1,334	1,300	1,236	1,231
(미 곡)	(1,056)	(1,059)	(1,072)	(1,083)	(1,053)	(1,016)	(1,001)
(맥 류)	(90)	(83)	(68)	(92)	(81)	(65)	(63)
(두 류 등)	(200)	(190)	(177)	(159)	(166)	(155)	(167)
경 제 작 물	851	786	780	755	720	700	710
(채 소)	(403)	(360)	(386)	(366)	(334)	(328)	(341)
(과 수)	(174)	(176)	(173)	(167)	(166)	(163)	(157)
(기 타) <sup>1)</sup>	(274)	(250)	(221)	(222)	(220)	(209)	(212)
경 지 면 적	1,985	1,910	1,889	1,876	1,863	1,846	1,836
경지이용율(%)	108.1	110.1	110.5	110.6	107.6	103.9	105.2
(논)	(104.1)	(107.0)	(106.3)	(107.9)	(105.9)	(101.8)	(102.7)
(밭)	(114.7)	(114.9)	(116.9)	(114.9)	(110.4)	(107.3)	(109.0)

주 : 1) 특·약용작물, 뽕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20>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휴경면적	62.5	64.6	34.3	29.5	22.3	17.0	16.8	16.6	20.0	46.4	47.8
논	31.4	33.5	14.5	10.3	6.2	4.6	4.3	3.8	5.6	25.8	26.7
밭	31.1	31.1	19.8	19.2	16.1	12.4	12.5	12.8	14.4	20.6	21.2
휴경율(%)	3.0	3.2	1.7	1.5	1.2	0.9	0.9	0.9	1.1	2.5	2.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서기관 임신태)

## 2. 농가경제

### 가. 소득동향

#### (1) 농가소득

2004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29,001천원으로서 전년(26,878천원)에 비해 7.9%(2,123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소득 14.0%, 농외소득 1.6%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표 1-1-21>

### 농 가 소 득

(단위: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농 가 소 득 <sup>1)</sup>	21,803	20,494	23,907	24,475	26,878	29,001	2,123	7.9
□ 경상소득	21,803	20,494	23,907	24,475	22,000	24,600	2,600	11.8
○ 농업소득	10,469	8,955	11,267	11,274	10,572	12,050	1,478	14.0
○ 농외소득	6,931	6,976	7,829	8,140	9,397	9,544	147	1.6
○ 이전소득	4,403	4,563	4,811	5,060	2,031	3,006	975	48.0
□ 비경상소득	-	-	-	-	4,878	4,401	△477	△9.8

주: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41.6%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농업소득 비중은 2.3%p 증가한 반면, 농외소득 2.1%p 감소되었다.(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의존도(39.3%)는 일본(14.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81.9	84.8
○ 농업소득	48.0	43.7	47.1	46.1	39.3	41.6
○ 농외소득	31.8	34.0	32.8	33.2	35.0	32.9
○ 이전소득	20.2	22.3	20.1	20.7	7.6	10.4
□ 비경상소득	-	-	-	-	18.1	15.2
< 일 본 >						
○ 농업소득	16.2	14.4	12.7	13.0	14.3	-

주 :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2)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12,050천원으로 전년(10,572천원)에 비해 14.0%(1,478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총수입이 증가(12.8%)하였고 농업경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11.8%)하였기 때문이다.

<표 1-1-23>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농업소득	10,469	8,955	11,267	11,274	10,572	12,050	1,478	14.0
(농업소득률)	(65.4)	(53.8)	(55.8)	(56.5)	(44.8)	(45.3)	-	-
○ 농업조수입	16,012	16,630	20,193	19,951	23,611	26,623	3,012	12.8
○ 농업경영비	5,543	7,675	8,927	8,677	13,039	14,572	1,533	11.8

주 :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조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업총수입은 26,623천원으로 전년(23,611천원)에 비해 12.8%(3,012천원) 증가하였다, 축산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외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lt;표 1-1-24&gt;

##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농업총수입	16,012	16,630	20,193	19,951	23,611	26,623	3,600	18.3
○미곡수입	5,450	6,703	8,277	7,471	8,049	8,653	604	7.5
○축산수입	3,981	2,050	2,421	2,554	5,055	5,021	△34	△0.7
○채소수입	3,386	4,030	5,064	5,100	5,721	6,538	817	14.3
○과수수입	1,542	2,119	2,407	2,632	2,298	2,964	666	29.0
○기타수입 <sup>1)</sup>	1,653	1,728	2,024	2,194	2,488	3,447	959	38.5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미곡수입(32.5%), 채소수입(24.6%), 축산수입(18.9%), 과수수입(11.1%) 및 기타수입(12.9%)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98년 이후 미곡수입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lt;표 1-1-25&gt;

##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곡수입	34.0	40.3	41.0	37.4	34.1	32.5
○축산수입	24.9	12.3	12.0	12.8	21.4	18.9
○채소수입	21.1	24.2	25.1	25.6	24.2	24.6
○과수수입	9.6	12.7	11.9	13.2	9.7	11.1
○기타수입	10.4	10.5	10.0	11.0	10.6	12.9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업경영비는 14,572천원으로 전년(13,039천원)에 비해 11.8%(1,533천원) 증가하였다. 임차료(197천원)는 감소하였으나 양축비(257천원), 노무비(144천원), 비료·농약비(135천원) 등이 증가하였다.

<표 1-1-26>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농업경영비	5,543	7,675	8,927	8,677	13,039	14,572	1,533	11.8
○ 수선및농구비	807	1,224	1,541	1,596	305	335	30	9.6
○ 노 무 비	441	495	593	635	808	952	144	17.9
○ 양 축 비	1,261	1,337	1,144	944	2,350	2,607	257	10.9
○ 비료·농약비	695	1,056	1,281	1,221	1,452	1,587	135	9.3
○ 임 차 료	1,070	1,254	1,625	1,664	1,515	1,318	△197	△13.0
○ 감가상각비등 <sup>1)</sup>	1,269	2,309	2,742	2,617	6,609	7,773	1,164	17.6

주 :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및부담금, 지급  
 이자, 영농잡비용, 보험료및수수료, 기타판매및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3) 농외소득

농외소득은 9,544천원으로 전년(9,397천원)에 비해 1.6%(147천원) 증가하였다. 사업외 소득(70천원, 1.0%)과 겸업소득(76천원, 3.4%)이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외소득은 1997년까지 매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최근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27>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농 외 소 득	6,931	6,976	7,829	8,140	9,397	9,544	147	1.6
○ 겸 업 소 득	1,527 (22.0)	1,213 (17.4)	1,491 (19.0)	1,454 (17.9)	2,266 (24.1)	2,342 (24.5)	76 -	3.4 -
○ 사업이외소득	5,404 (78.0)	5,763 (82.6)	6,338 (81.0)	6,686 (82.1)	7,131 (75.9)	7,201 (75.5)	70 -	1.0 -

주 :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소득,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4)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48.0% 증가했으나 비경상소득은 9.8% 감소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498천원(7.2%) 증가한 7,407천원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등의 항목을 비경상소득으로 분리되었다.

&lt;표 1-1-28&gt;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b>합 계</b>	4,403	4,563	4,811	5,060	6,909	7,407	498	7.2
○이 전 소 득	-	-	-	-	2,031	3,006	975	48.0
○비 경 상 소 득	-	-	-	-	4,878	4,401	△477	△9.8

주 : '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됨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나. 가계지출 동향

2004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4,691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18,386천원으로 전년(18,162천원)에 비해 1.2%(224천원) 증가하였다.

&lt;표 1-1-29&gt;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b>가 계 비</b>	14,782	16,442	18,458	17,858	24,063	24,691	628	2.6
○ 소 비 지 출	14,782	16,442	18,458	17,858	18,162	18,386	224	1.2
○ 비 소 비 지 출	-	-	-	-	5,901	6,305	404	6.8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54.5	61.0	63.1	43.9	48.8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68.3	81.1	78.0	73.7	86.6	81.0	-	-

\*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조사항목으로 추가됨

주 : '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농가소득-비소비지출, '02년 처분가능소득=농가소득-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의 소비지출은 18,386천원으로 전년(18,162천원)에 비해 1.2%(224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비(△14.4%), 주거비(△10.8%), 피복신발비(△4.9%)가 감소한 반면, 교양오락비(24.4%), 보건의료비(8.9%), 식료품비(5.4%)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30>

소비 지출

(단위: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소 비 지 출 <sup>1)</sup>	14,782	16,442	18,458	17,858	18,162	18,386	224	1.2
○ 식 료 품 비	3,118	3,445	3,752	3,738	4,575	4,823	248	5.4
○ 주 거 비	509	572	625	605	452	403	△49	△10.8
○ 광 열 수 도 비	484	670	848	824	974	994	20	2.0
○ 가 구 가 사 용 품 비	678	402	616	629	511	510	△1	△0.1
○ 피 복 신 발 비	627	470	509	469	581	553	△28	△4.9
○ 보 건 의 료 비	1,001	1,130	1,492	1,414	1,356	1,476	120	8.9
○ 교 육 비	1,553	1,706	1,794	1,629	874	749	△125	△14.4
○ 교 양 오 락 비	150	144	157	158	461	574	113	24.4
○ 교 통 통 신 비	793	1,053	1,486	1,566	2,035	2,056	21	1.0
○ 기 타 지 출 <sup>2)</sup>	5,869	6,850	7,178	6,826	6,342	6,249	△93	△1.5

주 : 1) 2002년도 이전 소비지출은 2003년도 비소비지출항목 신설에 따라 가계 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금액이고 2003년도는 순수한 소비지출 금액임

2) 기타지출은 감가상각비, 기타소비지출 등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의 비소비지출은 6,305천원으로 나타났다. '03년부터 분리·신설된 이 항목은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lt;표 1-1-31&gt;

## 비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비 소비 지 출	174	217	237	239	5,901	6,305	404	6.8
○ 조세 및 부담금	174	217	237	239	294	299	5	1.7
○ 공적연금납부금	-	-	-	-	319	339	20	6.4
○ 사회보험납부금	-	-	-	-	375	358	△1.7	△4.7
○ 기 타	-	-	-	-	4,913	5,309	396	8.1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다. 처분 가능 소득 및 잉여

2004년도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2,696천원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4,309천원이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이 증가(8.2%)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소폭 증가(1.2%)함에 따라 잉여금이 크게 증가(53.1%)하였기 때문이다.

&lt;표 1-1-32&gt;

##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 감	
							금 액	%
○ 처분가능소득 <sup>1)</sup>	21,629	20,277	23,669	24,236	20,976	22,696	1,720	8.2
○ 소비 지 출 (분 가 지 출)	14,782 (548)	16,442 (329)	18,458 (393)	17,858 (584)	18,162 -	18,386 -	224 -	1.2 -
○ 잉 여 금 <sup>2)</sup>	6,299	3,506	4,819	5,794	2,815	4,309	1,494	53.1

주 : 1) 2003년, 2004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2년 및 이전의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 2004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2년 및 이전의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라. 농가자산 동향

2004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243,665천원으로 전년(204,527천원)에 비해 19.1%(39,13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자산은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7.2%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이 29.6%(10,053천원)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을 합친 유동자산이 27.4%(10,592천원) 증가하였다.

<표 1-1-33>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감(B/A)	
							금 액	%
농 가 자 산	158,171	192,335	166,765	170,465	204,527	243,665	39,138	19.1
고 정 자 산 <sup>1</sup>	134,334 (84.9)	164,632 (85.6)	129,665 (77.8)	128,153 (75.2)	165,855 (81.1)	194,401 (79.8)	28,546 -	17.2 -
유 동 자 산 <sup>2</sup>	23,837 (15.1)	27,702 (14.4)	37,100 (22.2)	42,312 (24.8)	38,672 (18.9)	49,264 (20.2)	10,592 -	27.4 -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마.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04년말 현재 가구당 26,892천원으로 전년(26,619천원)에 비해 1.0%(273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용부채는 소폭 감소(△2.8%)하였으나 농업용이외부채는 증가(8.4%)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61.1%으로서 전년(78.4%)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17.3%p 하락)

&lt;표 1-1-34&gt;

## 농가부채

(단위: 천원, %)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증감(B/A)	
							금액	%
농가부채 (A)	9,163	17,011	20,376	19,898	26,619	26,892	273	1.0
○ 농업용부채 (구성비)	6,351 (69.3)	10,609 (62.4)	12,019 (59.0)	11,642 (58.5)	17,455 (65.6)	16,961 (63.1)	△494	△2.8
○ 농업용이외부채 <sup>1</sup> (구성비)	2,812 (30.7)	6,402 (37.6)	8,357 (41.0)	8,256 (41.5)	9,164 (34.4)	9,931 (36.9)	767	8.4
당좌자산 (B)	19,739	23,091	32,324	37,103	33,942	43,995	10,053	29.6
단기상환능력[(A/B)×100]	46.4	73.7	63.0	53.6	78.4	61.1	-	-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6,55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66.3% 수준이었다.

평균 농가자산은 243,665천원이며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285,485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은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고, 「제2종 겸업농가」가 가장 낮았다.

&lt;표 1-1-35&gt;

##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천원, %)

	평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63.3	11.9	24.8	-	-	-
농가소득	29,001	24,250	34,526	36,556	83.6	119.1	126.1
가계비	24,691	21,201	27,499	30,831	85.9	111.4	124.9
자산	243,665	228,152	285,485	257,160	93.6	117.2	105.5
부채	26,892	25,395	41,025	23,447	94.4	152.6	87.2
- 부채/소득	92.7	104.7	118.8	64.1	-	-	-
- 부채/자산	11.0	11.1	14.4	9.1	-	-	-

주: 1)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사. 주·부업별 지표

주·부업 및 자급별 농가소득은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39,18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가자산은 전문농가가 329,71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급농가는 164,817천원으로 전문농가의 50.0%에 지나지 않으며, 소득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대규모 경지규모(3ha이상)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36>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평 균	주업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17.3	48.0	17.4	17.3
농가소득	29,001	39,183	22,579	36,455	21,951
가계지출	24,691	27,301	20,904	31,371	19,775
자산	243,665	329,711	209,800	270,096	164,817
부채	26,892	49,476	22,204	24,378	12,815
- 부채 / 소득	92.7	126.3	98.3	66.9	58.4
- 부채 / 자산	11.0	15.0	10.6	9.0	7.8

주 : 1) 2004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주·부업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2,706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2,127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29,001천원)의 76.3%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축산농가의 자산이 415,092천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작농가의 자산은 189,309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부채비율은 화훼농가, 특작농가, 축산농가, 채소농가 높은 반면, 논벼농가와 전작농가의 부채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lt;표 1-1-37&gt;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b>농가구성비<sup>1)</sup></b>	100.0	51.6	11.0	21.1	2.9	0.9	5.6	6.7
농가소득	29,001	22,127	32,681	25,146	35,247	27,551	28,104	42,706
가계지출	24,691	19,294	25,654	23,811	24,439	31,337	21,169	30,920
자산	243,665	224,445	291,169	199,758	191,246	231,093	189,309	415,092
부채	26,892	18,853	32,675	32,482	42,809	134,020	19,485	55,153
- 부채/소득	92.7	85.2	100.0	129.2	121.5	486.4	69.3	129.1
- 부채/자산	11.0	8.4	11.2	16.3	22.4	58.0	10.3	13.3

주 : 1) 2004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10.0ha이상」 농가의 소득은 「0.5ha미만」농가에 비하여 2.7배 수준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탈농으로 점차 대규모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평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상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37.4	26.0	14.3	8.3	7.4	4.4	1.3	0.6	0.4
농가소득	29,001	24,930	23,551	25,040	28,060	31,291	36,063	38,636	56,805	66,994
가계지출	24,691	23,477	21,889	22,791	24,045	27,484	27,666	27,860	33,300	37,163
자산	243,665	180,044	176,873	230,504	255,732	280,960	318,099	294,341	415,975	566,544
부채	26,892	18,853	16,635	19,043	22,817	33,798	39,557	48,500	72,276	110,258
- 부채/소득	92.7	75.6	70.6	76.1	81.3	108.0	109.7	125.5	127.2	164.6
- 부채/자산	11.0	10.5	9.4	8.3	8.9	12.0	12.4	16.5	17.4	19.5

주: 1) 2004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30대 연령층의 소득이 47,637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연령층의 소득은 18,603천원에 불과하였으며, 농가자산은 역시 30대 연령층이 339,029천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70대 연령층은 208,079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40대 연령층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39>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평균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2.9	14.7	23.1	36.2	23.0
농가소득	29,001	47,637	38,446	36,111	27,410	18,603
가계지출	24,691	28,933	31,880	31,990	22,007	17,527
자산	243,665	339,039	298,068	283,554	216,911	208,079
부채	26,892	80,319	58,577	40,529	17,267	7,312
- 부채/소득	92.7	168.6	152.4	112.2	63.0	39.3
- 부채/자산	11.0	23.7	19.7	14.3	8.0	3.5

주: 1) 2004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카. 지역별 주요지표

과수, 채소 부문이 증가한 제주도 농가소득(39,004천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33,537천원), 충남(31,383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경남(125.8%), 제주(116.0%), 전남(107.0%)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남이 17.1%로 가장 높았다.

<표 1-1-40>

###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12.1	6.4	7.1	13.6	10.0	16.9	18.1	12.8	3.1
농 가 소 득	29,001	33,537	29,134	29,724	31,383	26,822	26,512	26,992	26,044	39,004
가 계 지 출	24,691	31,030	23,236	24,722	25,148	21,554	22,363	21,262	24,105	32,119
자 산	243,665	432,755	226,180	238,420	258,068	187,455	165,985	206,281	196,753	369,096
부 채	26,892	28,718	30,049	25,527	21,567	23,829	28,367	24,477	32,772	45,231
-부채/소득	92.7	85.6	103.1	85.9	68.7	88.8	107.0	90.7	125.8	116.0
-부채/자산	11.0	6.6	13.3	10.7	8.4	12.7	17.1	11.9	16.7	12.3

주 : 1) 2004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지역별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서기관 임신탉)

##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가. 개 황

2004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로서 전년에 비해 2.8% 하락한 반면에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3으로 전년대비 4.9%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교역조건지수는 전년보다 7.6포인트 악화된 96.8을 나타내었다.

<표 1-1-41>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가판매가격지수(A)	93.0	99.0	100.0	105.1	110.7	119.8	116.4
농가구입가격지수(B)	92.5	95.1	100.0	105.7	109.6	114.7	120.3
농가교역조건지수 (A/B X 100)	100.5	104.1	100.0	99.4	101.0	104.4	96.8

자료 : 농협중앙회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4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로서 곡물(1.6%), 축산물(2.1%)은 오르고 청과물(△10.5%), 기타농산물(△3.9%)은 내려 전년대비 2.8% 하락하였다.

(1) 곡 물

2004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3으로 미곡(0.4%), 두류(11.8%), 서류(18.0%) 등이 올라 전년보다 1.6%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일반미(0.8%), 콩(13.9%), 감자(34.9%) 등이 오르고 찹쌀(△5.8%), 쌀(△7.6%), 고구마(△15.7%) 등은 내렸다.

(2) 청과물

2004년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3으로 과실이 12.4% 상승했으나 채소가 19.1%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0.5% 하락하였다.

채소의 경우 엽채류는 배추(△56.2%), 시금치(△32.8%), 상추(△18.7%) 등이 하락하여 전년대비 42.3% 하락하였다. 근채류는 무(△24.2%), 당근(△37.6%)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26.2% 내렸다. 조미채류는 마늘(20.6%), 생강(70.0%) 등이 오르고 양파(△31.8%), 대파(△51.8%) 등이 내려 전년대비 6.6% 하락하였다. 과채류는 수박(19.6%), 토마토(14.2%) 등이 오르고 오이(△25.5%), 풋고추(△31.3%), 딸기(△52.6%) 등이 내려 전년대비 11.9% 내렸다.

과실의 경우 사과(14.3%), 포도(26.3%), 감귤(33.9%), 자두(37.0%) 등이 올랐으나 배(△7.1%), 복숭아(△6.3%), 밤(△34.1%), 매실(△18.8%)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4% 상승하였다.

## (3) 축산물

2004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4.0으로 전년대비 2.1%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한우암소( $\Delta 10.6\%$ ), 한우수소( $\Delta 10.0\%$ ), 한우수송아지( $\Delta 13.7\%$ ) 등이 내린 반면에 돼지(42.7%), 새끼돼지(20.5%), 닭(52.4%), 계란(39.6%), 우유(3.7%), 벌꿀(18.7) 등은 올랐다.

##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4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4로서 전년대비 3.9% 하락하였다.

특용작물의 경우 들깨(14.4%), 땅콩(17.0%) 등이 올랐으나 참깨( $\Delta 11.2\%$ ), 인삼( $\Delta 7.1\%$ ), 느타리버섯( $\Delta 13.3\%$ )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2.2% 하락하였다. 화훼류는 안개꽃(53.2%), 백합(38.6%) 등이 올랐으나 국화( $\Delta 7.5\%$ ), 장미( $\Delta 25.1\%$ ) 등이 내려 전년보다 11.1% 하락하였으며 부산물(볏짚)은 전년에 비해 16.0% 상승하였다.

&lt;표 1-1-42&gt;

##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농가판매가격지수		등락률 (%)
		2003년	2004년	
총 지 수	1000.0	119.8	116.4	$\Delta 2.8$
곡 물	388.0	100.7	102.3	1.6
(미 곡)	349.6	98.9	99.3	0.4
(맥 류)	10.4	104.0	104.0	0.0
(잡 곡)	4.2	108.3	108.6	0.3
(두 류)	8.4	111.2	124.3	11.8
(서 류)	15.4	130.9	154.5	18.0
청 과 물	328.2	127.7	114.3	$\Delta 10.5$
(채 소)	207.2	146.9	118.8	$\Delta 19.1$
(과 실)	121.0	94.9	106.7	12.4
축 산 물	225.2	141.1	144.0	2.1
(가 축)	196.5	146.8	148.9	1.4
(유 란)	28.7	102.2	110.5	8.1
기 타 농 산 물	58.6	120.1	115.4	$\Delta 3.9$
(특용 작물)	45.3	120.3	117.7	$\Delta 2.2$
(화 훼)	12.7	119.7	106.4	$\Delta 11.1$
(부 산 물)	0.6	115.7	134.2	16.0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4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3으로 가계용품(4.2%), 농업용품(6.6%), 농촌임료금(2.4%)이 올라 전년보다 4.9%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2004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7.9로 식료품(6.9%), 광열수도(10.2%), 교육(5.9%) 등이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4.2% 상승하였다.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락률 (%)
		2003년	2004	
총 지 수	1000.0	114.7	120.3	4.9
가 계 용 품	559.3	113.1	117.9	4.2
농 업 용 품	359.4	116.9	124.6	6.6
(종 자)	19.6	97.8	97.1	△0.7
(비 료)	34.2	100.2	111.2	11.0
(농 약)	39.8	100.3	100.6	0.3
(농 기 구)	93.3	100.6	101.0	0.4
(영 농 광 열)	28.0	108.9	125.6	15.3
(가 축)	45.8	208.9	202.1	△3.3
(사 료)	63.4	110.9	134.5	21.3
(영 농 자 재)	35.3	103.0	122.9	19.3
농 촌 임 료 금	81.3	115.4	118.2	2.4
(농업 노동 임금)	36.8	118.3	119.2	0.8
(기 타 임 금)	2.2	123.1	122.9	△0.2
(도 정 료)	7.4	112.6	117.2	4.1
(농기계 임차료)	34.9	112.4	117.1	4.2

(2) 농업용품

2004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4.6으로 전년대비 6.6%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종자(△0.7%), 가축(△3.3%) 등은 하락하였으나 농약(0.3%), 농기구(0.4%)는 소폭 상승하였다. 영농광열비는 경유(17.9%), 등유(20.2%)

등이 올라 전년대비 15.3% 상승했으며 비료는 유안(22.2%), 요소(29.8%), 용성인비(15.8%) 등의 가격 인상으로 11.0% 상승하였다. 영농자재도 농업용 파이프(50.3%)가 크게 올라 전년대비 19.3% 올랐다.

#### 라. 농촌임료금

2004년도 농촌임료금지수는 118.2로 전년보다 2.4% 상승하였다.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과 여자노임이 소폭 올라 전년대비 0.8% 상승하였다. 쌀 도정료는 전년대비 4.1% 상승하였으며, 농기계임차료는 트랙터(4.3%), 이앙기(6.0%), 콤바인(4.0%) 등이 올라 전년보다 4.2% 상승하였다.

연평균 농업노동임금은 남자가 57,467원, 여자가 38,314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7%, 0.8% 상승하였다. 목수임금은 90,420원으로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에 미장이의 임금은 89,205원으로 0.2% 상승하였다.

<표 1-1-44>

#### 농촌임료금 동향

(단위 : 원/1일, 급식물평가액 포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노동 임금	남 자	37,136	41,612	48,039	50,905	53,093	57,092	57,467
	여 자	25,885	29,232	32,292	34,184	34,839	37,999	38,314
기타임금	목 수	69,408	68,140	73,070	79,404	86,277	90,662	90,420
	미장이	66,987	67,072	73,939	78,086	83,011	89,021	89,205

(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 조사역 이세용)

## 4. 농림업 부가가치

2004년 농림어업 총 부가가치는 2000년 기준금액으로 24조 8,490억 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이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8.7% 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기상호조와 육류가격 상승으로 재배업과 축산업이 각각



9.0%, 7.2% 증가하였다. 임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2000년 이후 4년 연속 지속된 감소 추세가 반전되었다. 어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표 1-1-45>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단위 : 10억원, %, 2000년 기준가격)

		2001	2002	2003	2004
농 립 어 업		25,309	24,422	23,138	24,849
농 업		21,483	20,763	19,543	21,253
실 질 증감율	농 립 어 업	1.1	△3.5	△5.3	7.4
	농 업	1.1	△3.4	△5.9	8.7
	재 배 업	1.8	△5.8	△6.2	9.0
	축 산 업	△4.0	15.6	△4.1	7.2
	임 업	△0.8	△1.8	△6.5	4.1
	어 업	0.4	△7.6	0.2	△2.0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선, 연구원 심송보)

##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4년 호당 노동시간은 1,530시간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48,118천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62ha로 전년과 비슷하다.

<표 1-1-4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영 농 시 간	1,376	1,226	1,249	1,253	1,259	1,187	1,516	1,530
농 업 자 본 액	21,323	29,057	30,047	31,425	32,661	32,145	45,019	48,118
경 지 면 적	1.35	1.38	1.37	1.41	1.42	1.45	1.63	1.62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2004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2,210원으로 전년 11,114원보다 9.9%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8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93시간으로 전년 92시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2,963천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였다.

<표 1-1-47>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노동생산성 <sup>1)</sup>	원/시간	9,387	9,897	11,263	11,778	12,141	12,997	11,114	12,210
토지생산성	천원/10a	954	880	1,027	1,051	1,074	1,068	1,026	1,138
자본생산성 <sup>2)</sup>	원/원	0.61	0.42	0.47	0.47	0.47	0.48	0.37	0.38
노동집약도	시간/10a	102	89	91	89	88	82	92	93
자본집약도	천원/10a	1,575	2,106	2,194	2,237	2,294	2,225	2,763	2,963

주 :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서기관 임신탉)

## 제2장

##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1. 식량작물

2004년도의 식량작물재배면적은 2003년도의 1,236천ha보다 3천ha가 줄어든 1,233천ha 수준이었으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1,016천ha보다 15천ha가 줄어든 1,001천ha이었다. 이는 쌀생산조정제 시행등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지이용면적 중 식량작물 재배비율도 전년도 63.7%에서 63.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류의 경우에도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2천ha 감소하였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 양곡년도에는 총 5,041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520천톤에 비해 479천톤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3년도 20,278천톤 보다 1,384천톤이 줄어든 18,894천톤으로 쌀소비량 감소 및 국내산 대북지원 감소(400천톤→100천톤), 쌀 적정생산으로 주정용 공급 감축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쌀의 경우 국민식생활의 변화 등에 따라 식용소비는 2003년보다 35만톤 감소 되었으나 2003년산 쌀 생산(5,041천톤)이 전년에 비해 476천톤이 적게 생산되어 수급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앞으로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 재고가 늘어나는 공급과잉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t;표 1-2-1&gt;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19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7	172	7.8	357	16.2
19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19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1998	2,118	1,331	62.8	1,059	83	189	278	13.1	173	8.2	336	15.9
1999	2,116	1,325	62.6	1,066	77	182	289	13.7	171	8.1	331	15.6
2000	2,098	1,316	62.7	1,072	68	176	296	14.1	169	8.1	317	15.1
2001	2,089	1,333	63.8	1,083	92	158	280	13.4	163	7.8	313	15.0
2002	2,020	1,297	64.2	1,053	81	163	251	12.4	162	8.0	310	15.4
2003	1,936	1,234	63.7	1,016	65	153	245	12.3	159	8.2	298	15.4
2004	1,941	1,231	63.4	1,001	63	167	255	13.1	153	7.9	302	15.6

주 : 기타는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lt;표 1-2-2&gt;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994	6,162	5,520	5,041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709	14,576	14,418	13,906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9,248	20,641	20,278	18,894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9,606	9,755	10,762	10,129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694	9,670	9,516	8,765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625	3,080	3,177	2,837	2,890
자급률(%)	56.0	48.4	43.1	29.1	29.7	31.1	30.4	27.8	26.8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5.6)	(56.8)	(58.3)	(53.3)	(50.3)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45.5	144.0	138.0	138.4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전체 곡물자급도는 26.8%로 2003년보다 1.0% 감소되었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전년도 53.3%보다 3.0%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3년의 138.0kg에서 138.4kg으로 0.4kg이 늘어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83.2kg에서 1.2kg가 줄어든 82.0kg으로 나타났다으며, 보리쌀, 밀, 콩은 증가한 반면, 옥수수 및 감자, 고구마 등 서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6	160.2	104.9	1.6	33.8	3.6	9.3	3.5	3.5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2003	138.0	83.2	1.0	32.7	6.2	8.0	3.2	3.7
2004	138.4	82.0	1.1	34.1	5.6	8.5	3.1	4.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최명철)

## 2. 원예 · 특용작물

### 가. 채소류

2004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7% 감소된 315.9천ha였으나,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2003년보다 4.0% 증가한 10,468천톤이었고, 인구 증가 및 수출입 감안시 1인당 소비량은 2003년도 소비량(152kg)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45.3천ha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해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0.7% 감소한 1,994천톤이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0.2천ha로 전년대비 12.8% 감소하여 생산량이 384천톤으로 2003년보다 10.5%가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2003년 대비 6.5% 증가한 25.5천ha였으나, 기상 환경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22.0% 증가한 2,198천톤에 달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61.9천ha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작황이 우수하여 생산량은 2003년 132천톤 보다 17.4%가 증가한 155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30.2천ha로 전년대비 8.8%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358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2003년 대비 재배면적이 26.0% 증가한 15.6천ha가 재배되어, 생산량이 27.2% 증가된 948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1,548	10,054	10,520	10,971
	내수	8,677	10,611	11,461	11,478	10,004	10,484	10,915
	수출	20	59	41	70	50	36	56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1,548	10,054	10,520	10,971
	생산	8,677	10,586	11,282	11,310	9,796	10,068	10,468
	수입	20	84	220	238	258	452	503
1인당 소비량(kg)	132.6	160.6	165.9	164.7	145.6	152.4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순식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나. 과실류

2004년 과수재배면적은 총 157.4천ha로 전년에 비해 5.5천ha가 감소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과가 0.3천ha, 기타 자두 등이 0.5천ha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과종은 배 1.1천ha, 포도 1.9천ha, 감귤 2.5천ha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실 생산량은 양호한 기상과 더불어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없어 지난해보다 136천톤 증가한 2,411천톤이었다. 과실공급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당도 등 품질이 좋아 과실가격은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2,802.4	2,805.6	2,676.4	2,829.6
	수출	13.0	10.9	20.2	25.0	38.5	31.4	28.2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487.7	2,500.1	2,275.3	2,411.3
	수입	37.2	183.5	338.2	339.7	344.0	432.5	446.5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59.2	58.8	55.8	58.8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최낙현)

다. 화훼류

화훼류의 2004년도 재배면적은 7,522ha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배 농가수는 13,159호로 약 3% 감소되었다.

생산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9,218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고 소비도 국민소득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19천원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훼류의 무역수지면에서도 지난 1999년이후 흑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4년도 수출액은 48,527천\$로 전년도보다 7%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은

5%가 증가하여 흑자규모는 25,161천\$로 2003년 22,918천\$보다 약 10%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

주 수출품목은 절화류인 장미, 국화, 백합과 난류이나, 선인장과 난류는 다소 감소한 반면 절화류인 백합·장미·국화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2-6>

### 화훼산업 현황

구 분	'90	'95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재배농가(호)	8,945	12,509	12,994	13,080	13,466	13,575	13,596	13,159
재배면적(ha)	3,503	5,156	5,824	5,891	6,305	6,321	6,860	7,522
생산액(억원)	2,393	5,090	5,965	6,649	6,966	7,893	8,092	9,218
수출액(천\$)	1,443	6,363	19,751	28,888	31,849	32,121	45,276	48,527
수입액(천\$)	5,907	26,738	17,255	19,472	20,689	22,862	22,358	23,366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김재왕)

#### 라. 특용작물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산 생산량은 2000년산 대비 34% 감소한 20.9천톤, 2004년산 자급률은 14%수준이다.

\* 생산량 : ('97)33,393톤 → ('00)31,710 → ('02)23,818 → ('04)20,863

참깨 수입은 연간 약 8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 시장접근 물량 도입사업(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산 생산량은 2000년산 대비 7% 감소한 8.3천톤이며, 2004년산 자급률은 19%수준이다.

\* 생산량 : ('98)13,773톤 → ('00)8,918 → ('02)11,212 → ('04)8,257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개							땅 콩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계	57.8	88.9	101.7	116.1	112.0	112.2	99.0	44.2	31.1	43.2	37.8	42.6	44.3	39.7
	당년소비	56.8	86.3	94.7	98.2	104.8	104.6	85.9	40.1	26.5	41.3	35.8	40.6	43.8	38.6
	수 출	0.4	-	-	-	-	-	-	-	2.3	0.4	-	-	-	-
요	차년이월	0.6	2.6	7.0	17.9	7.2	7.6	13.1	4.1	2.3	1.5	2.0	2.0	0.5	1.1
	계	57.8	88.9	101.7	116.1	112.0	112.2	99.0	44.2	31.1	43.2	37.8	42.6	44.3	39.7
공	전년이월	4.7	19.0	7.5	7.0	17.9	7.2	7.6	8.1	3.3	2.7	1.5	2.0	-	0.5
	생 산	38.1	27.9	24.2	31.7	31.0	23.8	12.0	28.7	16.8	12.4	8.9	9.6	11.2	7.2
	수 입	15.0	42.0	70.0	77.4	63.1	81.2	79.4	7.4	11.0	28.1	27.4	31.0	33.1	32.0
자급률(%)		67	32	26	32	30	23	14	72	63	30	25	23	26	19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서호석)

마.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및 인삼관리 업무의 농림부 이관을 계기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추세에서 2002~2003년 다소 감소하였다.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에 비해 8.9% 증가한 13,081ha가 재배되었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4년 13,797호로 전체농가의 1.1%에 불과하나, 2004년도 인삼수출액은 8,900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4.3%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lt;표 1-2-8&gt;

## 인삼 생산 동향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면 적	12,184ha	9,375	12,445	13,018	12,873	12,016	13,081
생 산 량	13,889톤	11,971	13,664	13,215	16,662	15,172	14,668
농 가 수	36,404호	23,172	23,011	19,310	23,430	18,106	13,797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가. 축산물

## (1) 쇠고기

쇠고기는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로 2000년 이후 계속된 소비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2003년에 발생한 광우병 여파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4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328천톤이었다.

소비량 중 수입산은 183천톤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한 반면, 국내산은 145천톤으로 2.3% 증가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6.8kg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하였다.

&lt;표 1-2-9&gt;

##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 총 소 비 량	346	402	384	403	390	328
- 국 내 산	260	212	164	147	142	145
- 수 입 산	85	190	220	255	248	183
○ 1인당 소비량(kg)	7.4	8.5	8.1	8.5	8.1	6.8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산지소값은 미국 및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기피 현상으로 연초에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수입금지로 인한 공급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계절적인 소비증감의 영향으로 등락현상을 보였다.

2003년 12월까지 400만원(큰수소 기준)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산지소값은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4년 5월에는 최저 2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소값 안정대책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4년 6월부터 상승하여 7월은 337만원, 추석명절인 9~10월에는 387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연말에는 374만원으로 다시 주춤하였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2년 3월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2년에는 1,410천두, 2003년에는 1,480천두, 2004년에는 1,666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 사육두수는 전년에 비해 12.6%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2년 12월 212천가구에서 2003년 12월에는 188천가구로 11.3% 감소하였으나, 2004년 12월에는 189천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3년 12월 7.9두에서 2004년 12월 8.8두로 규모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가 암소도축률 감소와 가임 암소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04년 총소비량은 2003년보다 2.7% 증가한 86만톤으로 늘어났고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17.4kg에서 2004년에는 17.9kg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PMWS·PED 등 소모성질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 9,231천두에서 2004년 12월에는 8,908천두로 3.5% 감소하였고, 2004년 12월 모돈수는 935천두로 2003년 12월 975천두보다 4.1% 감소하였다.

사육가구수는 2003년 12월 15.2천가구에서 2004년 12월에는 13.3천 가구로 12.5% 감소 현상을 보여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3년 12월 606두에서 2004년 12월 671두로 증가하여 점차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3년에는 연간 평균가격이 164천원/100kg이었으나 2004년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국산 공급감소로 235천원/100kg으로 상승하였다.

### (3) 닭고기

2004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31.9만톤으로 2003년에 비해 15.2% 감소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6.6kg으로 전년도 7.9kg보다 하락하였다. 닭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50.9% 상승하여 연평균 1,415원/kg이었으며, 연말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107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3년 말에 비하여 9.0% 감소한 13만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18.5% 증가한 813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3년보다 4.4% 증가한 1,349호였으며, 전체 사육수수 중 전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71.7%로 전년보다 4.0% 증가하는 등 점차 규모화, 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 (4) 계란

계란의 2004년 총 소비량은 508천톤으로 2003년보다 1.0%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1.0% 증가한 10.6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40.2%가 증가한 1,068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 (5) 우유

2004년 원유 총 생산량은 2,255천톤으로 2003년 2,366천톤 보다 4.6% 감소하였다.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3,074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3년 2,990천톤 보다 2.8% 증가하였으나, 시유 소비량은 2003년 1,829천톤 보다 2.6% 감소한 1,781천톤 이었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3.9kg으로 2003년 62.4kg보다 2.4% 증가하였으나, 음용유 소비량은 37.0kg으로 2003년 38.2kg보다 3.1% 감소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4년말 497천두로 2003년말 519천두 보다 4.2%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는 2003년말 10.5천호에서 2004년말 9.6천호로 8.5%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04년말 51.7두로 2003년말 49.3두 보다 4.8% 증가하였다.

(축산경영과 축산서기관 이상수, 행정사무관 송광현, 축산사무관 조병임,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신대식)

나. 사료작물

2004년에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19,871천톤으로 전년(20,397천톤)보다 2.6%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농후사료가 15,787천톤, 조사료가 4,084천톤으로 추정된다. 농후사료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4,941천톤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하였다.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1985	1990	1995	1998	2000	2003 (A)	2004 (B)	증감율 (B/A)
합 계	13,250	17,214	23,463	18,680	19,489	20,397	19,871	△2.6
농 후 사 료	7,322	11,211	15,700	15,039	16,097	16,349	15,787	△3.4
－ 배 합 사 료	6,467	10,567	14,856	14,259	15,105	15,436	14,941	△3.2
－ 농 가 자 급 사 료	855	644	844	780	992	913	846	△7.3
조 사 료	5,928	6,003	7,763	3,641	3,392	4,048	4,084	0.9
－ 사료작물 및 목초류	1,974	2,832	2,498	1,266	992	1,249	1,153	△7.7
－ 산야초, 볏짚등	3,954	3,171	5,265	2,375	2,400	2,799	2,931	4.7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는 한육우용은 4.1% 증가한 반면, 젖소용은 8.0%, 양돈용은 4.3%, 양계용은 1.8%씩 각각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 사육두수가 148만두에서 167만두로 증가한 반면, 양계·양돈 사육두수의 감소추세로 2004년도 주요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기타가축 중 개 및 오리 사육마리수의 감소추세로 기타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

소세를 보였다.

한편, 2004년도 7월 이후 옥수수 가격 및 환율 하락 등으로 11월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인하되어 2003.12월 수준으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원료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4년 하반기에는 국제곡물 가격 및 환율의 하락으로 다소 안정적인 사료수급 및 가격 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lt;표 1-2-11&gt;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1985	1990	1995	1998	2000	2003 (A)	2004 (B)	증감율 (B/A)
합 계	6,467	10,529	14,856	14,259	15,106	15,436	14,941	△3.2
양 계 용	2,310	3,274	3,766	3,423	3,867	3,907	3,836	△1.8
양 돈 용	1,924	3,551	4,725	4,918	5,215	5,663	5,419	△4.3
젖 소 용	994	1,790	2,905	1,833	1,892	1,774	1,632	△8.0
한 육 우 용	1,209	1,667	3,681	3,605	3,340	2,926	3,045	4.1
기 타	30	247	589	480	792	1,179	1,009	△14.4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담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4년에 신규로 67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1990	1995	1999	2000	2001	2003 (A)	2004 (B)	증감율 (B/A)
신규조성면적	616	413	430	253	228	58	67	15.5
관 리 면 적	89,903	66,301	53,783	51,870	50,367	46,546	45,084	△3.1
목초생산량	742	462	371	364	352	343	315	△8.1

자료 : 농림부 축산국

2004년말 현재 초지 총관리면적은 45천ha로서 315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전용 등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범민,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정래)

## 제2절 식품수급동향

###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4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7.9%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10.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3>.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8.5%), 빵 및 과자류(8.0%), 어패류(6.6%), 과일류(7.6%), 낙농품(7.2%), 육류(5.8%)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1.5%), 조미식품(3.6%)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의 경우 1982년 5.9%에서 2004년 46.6%로 가장 크

계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8.9%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4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7.3%, 어패류 6.0%, 채소·해조류 7.5%, 과일류 6.0%이다.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일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5	1265.9	367.1 (100)	46.7 (12.7)	42.2 (11.5)	17.1 (4.7)	33.3 (9.1)	35.6 (9.7)	28.5 (7.8)	15.7 (4.3)	13.5 (3.7)	13.7 (3.7)	5.0 (1.4)	115.7 (31.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1	1762.1	463.6 (100)	56.6 (12.2)	43.0 (9.3)	20.1 (4.3)	32.9 (7.1)	34.7 (7.5)	28.2 (6.1)	15.1 (3.3)	18.0 (3.9)	17.5 (3.8)	7.2 (1.5)	190.5 (41.1)
2002	1834.8	481.0 (100)	53.3 (11.1)	46.8 (9.7)	18.9 (3.9)	34.8 (7.2)	36.7 (7.6)	28.5 (5.9)	13.9 (2.9)	18.6 (3.9)	18.5 (3.9)	9.5 (2.0)	201.5 (41.9)
2003	1922.9	509.6 (100)	44.5 (8.7)	40.9 (8.0)	19.9 (3.9)	31.8 (6.2)	40.1 (7.9)	28.2 (5.5)	14.2 (2.8)	22.3 (4.4)	21.3 (4.2)	13.4 (2.6)	233.2 (45.8)
2004	2018.2	544.8 (100)	48.3 (8.9)	39.7 (7.3)	21.1 (3.9)	32.7 (6.0)	40.7 (7.5)	32.9 (6.0)	18.2 (3.3)	23.2 (4.3)	23.0 (4.2)	11.2 (2.0)	253.9 (46.6)
82-04	10.0	7.9	1.5	5.8	7.2	6.6	5.6	7.6	3.6	8.0	7.6	17.7	18.5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나. 소득계층별 식품소비행태

2004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4>.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육류, 과일류, 어패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곡물, 낙농품, 채소·해조류, 조미식품 등이다.

<표 1-2-14>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4년도 도시가구 평균)

(단위 : 천원(%))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 비 지 출	1,203	62.6	1,921	100	2,963	154.2
식 료 품	366	67.9	539	100	731	135.5
곡 류 및 식 빵	42	88.8	48	100	55	115.3
육 류	28	72.4	39	100	53	135.8
낙 농 품	16	73.1	21	100	26	121.2
어 개 류	26	83.8	31	100	42	136.4
채 소 · 해 조 류	35	87.8	40	100	48	120.7
과 실 류	23	72.5	31	100	45	143.0
조 미 식 품	16	90.9	18	100	21	121.0
빵 및 과 자 류	16	69.7	24	100	29	123.4
차 · 음 료 및 주 류	17	73.8	23	100	29	126.9
외 식	139	54.7	255	100	367	143.8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lt;표 1-2-15&gt;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0	2,052	67.2	21.8	396	598	13.5	1,688	1.13	1.08	19.1	87.9
1985	1,936	74.5	29.5	342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316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325	518	23.0	550 <sup>1</sup>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313	538	22.9	535 <sup>1</sup>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301	523	22.4	440 <sup>1</sup>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286	556	22.0	411 <sup>1</sup>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295	531	21.9	443 <sup>1</sup>	1.16	1.20	16.7	98.3
1998 <sup>3</sup>	1,985	74.2	41.5	325	511	12.5 <sup>2</sup>	625 <sup>1</sup>	1.35	1.09	15.7	123.1
2001 <sup>4</sup>	1,976	71.6	41.6	315	497	12.2 <sup>2</sup>	624 <sup>1</sup>	1.27	1.13	16.9	132.6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976kcal, 당질 315g, 단백질 71.6g, 지방 41.6g, 철분 12.2mg, 비타민C 132.6mg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영양소별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대비 섭취비율을 보면 칼슘은 권장량의 71.0% 수준으로 크게 미달되고 있고, 리보플라빈(91.0%), 비타민A(95.4%)도 과소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조정된 데 기인한다. 반면 단백질(127.0%), 티아민(119.8%), 나이아신(119.4%), 비타민C(197.1%)는 과다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는 최근들어 권장량대비 9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2-16>.

<표 1-2-16>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1980	93.5	94.6	81.9	96.4	90.2	128.4	89.3	131.7	176.9
1985	91.1	110.4	93.0	112.0	81.2	122.9	93.8	182.1	125.0
1990	90.0	127.8	82.0	173.3	76.5	109.9	101.4	156.2	154.9
1991	93.1	118.1	82.3	177.3	84.3	120.7	98.9	126.7	175.8
1992	90.0	118.8	85.1	175.1	81.5	114.9	96.0	124.5	194.2
1993	90.0	117.9	84.0	176.0	67.7	140.1	97.3	120.6	175.6
1994	85.0	121.8	91.8	192.0	62.0	109.0	100.2	122.8	176.9
1995	88.6	116.7	75.4	159.5	67.2	108.8	96.0	119.8	185.4
1998	94.5	117.8	72.8	91.91	95.6	126.3	86.2	110.8	234.0
2001	94.8	127.0	71.0	95.2	95.4	119.8	91.0	119.4	197.1

주 : 1)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을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당질 65.6%, 단백질 14.9%, 지방 19.5%이다. 단백질의 경우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으나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 2. 식품 수요 현황

###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3년 소비지출은 가계신용대출 억제 및 경기 둔화로 위축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율(연평균 -1.4%)을 나타내었다. 식품 소비측면에서는 쌀 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유지류 등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태풍 매미와 잦은 비, 일조량의 부족 등 기상조건 악화로 과실류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2년 대비 2003년 품목별 공급량 변화는 <표 1-2-17>와 같다.

쌀은 일조량 부족 및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588천톤 감소하고, 식용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3년 1인당 식용공급량은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밀의 경우 생산은 전년대비 4천톤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이 77천톤 감소하면서 식용 공급량이 5.7% 감소하였다. 밀의 식용공급량은 국제수급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동하며 1995년 이후에는 34~36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감자는 생산이 전년대비 15.1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0.1kg에서 8.1kg으로 20.2% 감소한 반면, 고구마는 생산이 전년대비 44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다. 설탕류는 생산 증가로 1인당 공급량이 20.94kg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채소류는 배추와 무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생산량이 277천톤 증가하고,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 증가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144.6kg에서 152.4kg으로 5.4% 증가하였다. 과실은 전년대비 수입이 바나나 33.8천톤, 파인애플 32.9천톤, 오렌지 42.3천톤 증가하였으나, 개화기 일조량 부족과 병충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사과 67.8천톤, 배 69.8천톤, 단감 36.9천톤, 포도 45.6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41.95kg에서 39.40kg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하였다.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kg, %)

품 목	2002 (확정)	2003 (잠정)	증가율 (%)
곡 류	155.36	156.72	0.88
쌀	91.06	87.62	-3.78
보 리	1.57	1.13	-28.03
밀	34.64	32.66	-5.72
옥 수	25.93	32.83	26.61
기 타	2.7	3.2	18.52
서 류	13.72	12.57	-8.38
감 자	10.09	8.05	-20.22
고 구 마	3.63	4.52	24.52
설 탕 류	20.89	20.94	0.24
두 류	10.50	10.28	-2.10
콩	8.42	8.03	-4.63
팥	0.67	0.67	0.0
기 타	1.41	1.58	12.06
견 과 류	1.13	1.15	1.77
중 실 류	0.65	1.65	153.85
참 깨	0.32	1.06	231.25
기 타	0.32	0.59	84.38
채 소 류	144.62	152.39	5.37
과 실 류	41.95	39.40	-6.08
육 류	39.21	38.96	-0.64
쇠 고 기	8.18	7.88	-3.67
돼 지 고 기	16.50	16.88	2.30
닭 고 기	6.28	6.09	-3.03
부 산 물	8.25	8.11	-1.70
계 란 류	9.49	8.85	-6.74
우 유 류	52.82	50.43	-4.52
우 유	51.39	49.22	-4.22
어 패 류	36.29	38.32	5.58
어 류	25.67	25.76	0.35
패 류	10.62	12.56	18.27
해 조 류	8.35	6.40	-23.35
유 지 류	17.46	16.62	-4.81
식 물 성	16.77	16.18	-3.52
동 물 성	0.69	0.45	-34.78
주 류	70.34	71.61	1.8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3.

육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이 39.2kg에서 39.0kg으로 0.6%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경기침체와 생산량 감소(5.8천톤)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8.18kg에서 7.88kg으로 3.7% 감소하였다. 돼지고기는 도축두수의 감소로 생산량이 2.7천톤 감소하고 국내 성돈 산지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량이 10.8천톤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이입량이 27.9천톤 증가하면서 1인당 식용공급량은 2002년 16.5kg에서 2003년 16.9kg으로 2.3%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흰색 육류를 선호하는 선진국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환과 외식판매점의 증대 등으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3년도에는 사육수수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와 경기침체·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1인당 식용공급량은 6.3kg에서 6.1kg으로 3.0% 감소하였다.

어패류는 생산량이 68.5천톤, 수입량이 57.7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36.3kg에서 38.3kg으로 5.6% 증가하였다. 해조류의 경우 다시마의 수입이 9.5천톤 감소하고 미역 생산량이 44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23.4% 감소하였다.

식물성 유지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참기름, 들기름, 유채유, 미강유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3.4천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콩기름의 수입이 17.7천톤 감소하면서 1인당 식용공급량이 3.5% 감소하였다.

#### 나. 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두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2-18>. 곡류자급률은 1980~2003년간 53.3%에서 27.7%로, 두류는 40.1%에서 8.2%로, 유지류는 19.0%에서 3.1%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유류도 같은 기간 109.7%에서 81.2%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다. 어패류는 1999년까지 대체로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여 2003년에는 61.8% 수준을 나타내었다.

새로운 칼로리 산정방식<sup>1)</sup>에 근거할 경우 1970년 79.5%, 1990년 62.6%,

2003년 44.9% 수준으로 1970년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3년 46.6%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3년 19.8% 수준에 불과하다. 2003년도 자급률 수준이 2002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쌀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에 의해 쌀의 물량기준 자급률이 10%포인트 정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1980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p)
공급영양 자 급 률	칼 로 리	70.0	62.6	50.6	49.0	50.6	49.2	49.6	44.9
	단 백 질	75.2	67.8	57.2	54.7	52.8	51.9	50.4	46.6
	지 방	64.2	30.3	26.8	23.6	21.4	20.3	20.4	19.8
물량기준 자 급 률	곡 류	53.3	43.8	30.0	30.1	30.8	32.2	31.0	27.7
	쌀	95.1	108.3	91.1	96.6	102.9	102.7	99.2	90.3
	두 류	40.1	24.5	11.7	10.7	8.2	9.2	8.8	8.2
	채 소 류	100.2	98.9	99.2	97.4	97.7	98.3	97.7	94.6
	과 실 류	98.6	102.5	93.2	91.1	88.7	88.9	89.1	85.0
	육 류	97.4	92.9	89.2	86.1	83.9	81.0	82.0	81.2
	쇠 고 기	93.0	53.6	50.8	57.8	53.2	42.3	36.6	36.3
	돼지고기	97.5	100.3	96.6	92.9	91.6	90.8	96.9	93.8
	닭 고 기	100.0	100.0	98.1	84.1	79.9	76.1	76.0	76.7
	계 란 류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우 유 류	109.7	92.8	93.3	81.6	81.2	78.9	81.0	81.2
	어 패 류	132.7	121.7	100.4	102.2	87.7	77.9	63.8	61.8
	유 지 류	19.0	8.0	4.8	3.3	3.2	2.4	3.5	3.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4.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2003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조식품기준)은 곡류(166.5kg), 두류(14.0kg), 채소류(173.0kg), 어패류(70.5kg)의 경우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곡류 공급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13.81kg)과 대만(순식품기준)(89.8kg) 그리고 파키스탄(154.1kg)에 비교하여도 많은 편이며, 미국과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 과일류(50.2kg), 육류(41.4kg), 계란류(10.3kg), 우유류(50.4kg) 및 유지류(16.6kg) 등은 적은 편이다<표 1-2-19>. 특히, 육류와 과일류의 공급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1/3~1/4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5에 불과하다. 유지류의 공급량은 파키스탄, 일본보다는 많지만 대만, 미국, 독일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lt;표 1-2-19&gt;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kg)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파키스탄
연 도	2003	2002	2002	2002	2002	2002
곡 류	166.5	113.8	89.8	112.5	106.9	154.1
서 류	13.4	34.1	20.0	63.7	72.4	12.5
설 탕 류	20.9	29.4	23.3	71.9	44.2	28.3
두 류	14.0	13.4	27.5	12.2	9.7	7.5
채 소 류	173.0	106.5	121.9	127.7	90.6	31.5
과 실 류	50.2	56.3	145.6	110.3	115.5	34.0
육 류	41.4	46.7	77.2	125.2	85.2	13.9
계 란 류	10.3	19.1	18.5	14.6	12.7	2.1
우 유 류	50.4	67.1	23.4	261.8	264.3	153.3
어 패 류	70.5	66.3	36.1	21.3	14.9	2.2
유 지 류	16.6	15.9	25.0	34.0	40.5	14.8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4.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3년도에는 2,985kcal로서 1980~2003년간 연평



균 약 0.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1인 1일 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는데,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표 1-2-20>.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99.6g으로 일본의 91.8g, 대만의 95.3g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영양 3요소 중 가장 차가 적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는 적지만 간장, 된장 및 두부 등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많은데 기인된다.

1인 1일당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84.3g으로 1985년의 51.8g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질 공급량은 유럽 국가의 50~60%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에 큰 차가 있기 때문이다.

<표 1-2-20>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한국 <sup>1</sup>	일본 <sup>1</sup>	대만 <sup>1</sup>	미국	독일	파키스탄
연 도	2003	2002	2002	2002	2002	2002
에너지(kcal)	2,985	2,761	2,869	3,744	3,496	2,419
전분질(%)	56.9	46.3	-	27.9	30.0	56.5
설탕(%)	7.4	10.1	-	17.7	12.3	11.4
동물성(%)	15.2	19.3	-	24.6	21.4	13.9
유지류(%)	13.7	13.4	-	20.0	22.0	14.0
기타(%)	6.8	10.9	-	9.9	14.4	4.2
단백질(g)	99.6	91.8	95.3	114.0	100.1	61.9
동물성(g)	45.9	51.7	48.0	73.7	59.0	22.6
지방질(g)	84.3	84.6	124.5	156.5	146.4	65.1
유지류(g)	45.5	41.7	-	84.9	86.0	38.2
1인당GNP(\$)	12,646	31,674	12,866	36,351	24,081	409

주 : 1) 한국, 일본,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4.

그러나 지방질 공급량은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84.6g)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의 44~66g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임)

### 3. 식품가공산업 현황

#### 가. 산업구조

식품가공산업은 2003년 생산액이 39조 5,810억원, 부가가치는 15조 6,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생산액은 5.8%, 부가가치는 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음료품의 구성비는 각각 82%, 18%로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중 곡물가공(17.2%), 육가공(14.1%), 유가공(12.5%), 기타음료품(11.8%), 빵·과자·국수(7.8%)순으로 규모가 크다.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677조 3,710억원으로 전년보다 6.8%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식품가공산업의 총생산액은 2002년 38조 7,610억원에서 2003년 39조 5,810억원으로 2.1%의 성장을 보였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의 간편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에 비해 2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식품가공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체당 생산액이 1990년 21억 6천만원에서 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4배나 성장하였다. 특히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육가공, 유가공, 곡물가공, 식용유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표 1-2-21>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분류별	연도별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사업체수(개)	
	1990	2003	1990	2003	1990	2003	1990	2003
제조업(전체)	177,309	677,371	70,925	255,813	97,144	112,662		
음식료업	13,104	39,581	5,194	15,670	6,055	7,672		
○ 식료품	10,352	32,505	3,857	11,786	5,557	7,227		
- 육가공	872	4,588	255	1,332	407	686		
- 유가공	1,519	4,067	447	1,569	113	105		
- 수산가공	1,420	2,946	567	1,089	1,804	1,894		
- 과채가공	342	1,394	134	589	487	714		
- 곡물가공	810	5,603	242	1,203	824	761		
- 식용유지	646	1,376	275	342	76	97		
- 빵·과자·국수	2,411	2,523	1,074	1,328	760	1,292		
- 식품첨가물	687	2,307	297	883	317	410		
- 기타식료품	1,645	3,852	566	1,704	769	1,268		
○ 음료품	2,752	7,076	1,337	3,884	498	445		
- 알콜성음료	1,450	3,773	714	2,240	244	189		
- 비알콜성음료	1,302	3,303	623	1,644	254	256		

주 : 사료가공분야 및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제외  
 자료 : 통계청, 「199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4

생산액당 부가가치로 나타낸 부가가치율은 식품가공산업 평균으로 볼 때 1990년과 비슷한 39.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빵·과자·국수, 육가공, 야채가공, 기타식료품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이들 부문에서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생산동향

2003년도 음식료품 생산은 6.8% 증가하여 2002년도의 8.4%에 비해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육가공품은 지난해와 같은 11.6%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육류 소비가 줄어들어 업체에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2003년도 유가공업계는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6.7%이상 감소되었고, 우유 총소비는 2.2% 감소하여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이 62.4kg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소비부진에 따른 심각한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인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우유생산조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과채가공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치가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SARS이후 해외의 김치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일본의 김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 및 서구화의 진행에 따른 수요감소의 원인을 상품김치나 단채급식 공급 등으로 충당한데 기인하고 있다.

2004년도 김치시장은 2003년보다 5% 증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7,300억원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김치는 2001.7.5 제24차 Codex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전통김치에 근거한 국제식품규격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자연적인 젯산발효식품으로서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김치의 국제적인 상품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류시장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며, 간장의 시장규모는 1,470억원, 된장 1,590억원, 고추장 2,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간장이나 된장을 직접 담가 먹지 않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소비증가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간장이 국제공인 식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Codex에 간장·된장·고추장 규격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과채가공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품질 고급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높은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들어서 음료시장은 소비자의 세분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음료의 등장과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음료시장은 비알콜성음료의 경우 2.5%, 알콜성음료는 2.6%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알콜성음료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맥주는 2.5%증가, 위스키는 0.5%증가, 소주는 5.1% 증가 했다. 비알콜성음료의 경우 탄산음

료는 1.7% 증가, 과즙음료는 2.29% 증가했다.

두유와 스포츠음료, 미과즙음료, 전통음료, 먹는샘물, 차류, 기능성음료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알콜성 음료도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함에 따라 음료시장은 계속 그 규모를 회복·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수출입동향

2004년도 가공식품 수입은 육가공품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한 59억불이었고 수출액은 과자·국수류의 수출증가로 전년에 비해 14.1% 증가한 23억 7천 9백만불이었다. 무역역조 현상은 2003년도 36억 5천 1백만불에서 2004년도에는 35억 1천 1백만불로 전년보다 3.8% 감소하였다.

<표 1-2-22>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수 입	2,266	2,560	3,603	4,342	4,546	5,193	5,734	5,890	2.7%
수 출	1,813	2,226	2,307	2,099	1,982	2,020	2,064	2,379	14.1%
무역수지	-453	-334	-1,296	-2,243	-2,564	-3,173	-3,670	△3,511	3.8%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2004년도 품목군별 수입구조를 보면 수산가공품(29.1%), 육가공(17.7%), 기타식료품(15.5%), 과채가공(10.1%)순으로 수산가공품과 육가공품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수산가공품이 44.1%로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빵·과자·국수(16.8%), 기타식료품(15.5%) 및 알콜성음료(7.1%) 등의 순이고 가공식품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품목은 빵·과자·국수류로서 전년보다 약간 많은 8천 8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적자 품목군은 육가공(28.7%), 수산가공(18.8%), 기타식료품(15.6%), 과채가공(12.6%)순이다.

&lt;표 1-2-23&gt;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유 가 공	193	281	28	29	△165	△252
육 가 공	1,511	1,041	37	32	△1,474	△1,009
수 산 가 공	1,516	1,712	899	1,050	△617	△662
과 채 가 공	502	593	135	149	△367	△444
식 용 유 지	341	485	12	12	△319	△473
곡 물 가 공	11	13	6	35	△5	△22
빵·과자·국수	297	312	377	401	80	88
식 품 첨 가 물	94	108	60	77	△34	△31
기 타 식 료 품	807	915	303	368	△504	△548
알 콜 성 음 료	411	379	162	168	△249	△212
비알콜성음료	51	50	45	58	△6	9
계	5,734	5,890	2,064	2,379	△3,670	△3,511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김종구)

## 제3절 농산물 교역 동향

### 1. 농산물 수출입 동향

#### 가. 수출동향

2004년 농식품 수출액은 2,085백만달러로 국가전체 253,845백만달러의 0.8%를 차지하였다. 2004년은 우리 농식품 수출사상 최초로 2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시장개방의 가속화, 환율하락, 유가인상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

만 그 동안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사업, 119조원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추진에 의한 기술력 향상과 우리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체브랜드(Whimori) 개발 등 공세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2003년 수출액 1,860백만달러보다 12.1% 증가한 2,085백만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758백만달러(84.3%), 축산물이 163백만달러(7.8%), 임산물이 164백만달러(7.9%)를 기록하였다.

<표 1-2-24> 농식품 수출동향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증감율
총 수출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31.0
농 식품	1,635	1,680	1,532	1,580	1,640	1,860	2,085	12.1
농축산물	1,391	1,412	1,277	1,370	1,473	1,683	1,921	14.1
임 산 물	244	268	255	210	167	177	164	△7.3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 과일, 화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551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26.4%를 차지하였다. 가공농식품 수출액은 1,534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다.

주요 신선농산물의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채소·김치·인삼·화훼류·과실류 등은 호조를 보인 반면, 돼지고기·닭고기·밤 등은 수출이 저조하였고, 가공농식품은 주 수출국인 일본·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이 729백만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35.0%를 차지하였으며, 대중국(홍콩포함) 수출액은 33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출액은 28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7.8%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액의 13.7%를 차지하였고, 대 러시아 수출액은 전년대비 11.4%가 증가한 17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강신복)

## 나. 수입동향

2004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1,205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입액 224,463백만달러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10,221백만달러 대비 9.6%가 증가 하였으나, 물량은 2.3% 감소하였다. 수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증가한 것은 옥수수, 밀, 대두 등 수입액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한 점에 기인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농산물이 총 수입액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대비 수입액 증가율이 증가한 주요품목은 옥수수 1,438백만불, 밀 665, 대두 487, 대두박 419, 오렌지 183, 대두유 147, 커피류 116, 당류 400 등이며, 감소한 품목은 주류 384백만불, 연초류 206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는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쇠고기와 닭고기는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2003.12)로 쇠고기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증가하였다.

&lt;표 1-2-25&gt;

##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증 감 률
총 수 입	93,282	119,752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463	25.5
농림축산물	6,403	7,388	8,450	8,463	9,584	10,221	11,205	9.6
농 축 산 물	5,420	5,928	6,783	6,792	7,650	8,328	9,200	10.5
임 산 물	983	1,460	1,667	1,671	1,934	1,893	2,005	5.9

\* 석재류 제외(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농업협상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 가. 농산물 교역규모

2004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697.0백만달러로 전년도 724.2백만달러에 비해 3.8% 감소하였다. 이중 농림축산물 교역실적은 240.0백만달러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697.0백만달러의 34.4%를 차지 하였다.

<표 1-2-26>

###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 도 별 교 역 실 적		
	2003	2004	증감률(%)
전 체	724.2	697.0	△3.8
농림축산물	223.6	240.0	7.3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 나. 농산물 교역동향

####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4년도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136.3백만 달러로서 전년도 185.8백만달러보다 26.7% 감소하였고, 반입은 33.7백만 달러로서 전년도 37.8백만달러 보다 11.1% 감소하였다.

####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 (가) 반출실적

농림축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92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쌀, 비료, 제조담배, 쇠고기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제재목, 밤, 버섯류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 106천톤(36백만달러), 비료286천톤(71백만 달러)로서 농림축산물 전체 반출금액의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lt;표 1-2-27&gt;

##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3년(A)		2004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737,323	185,811	421,241	136,288	△42.9	△26.7
쌀	425,280	103,434	105,737	36,281	△75.1	△64.9
밀 가 루	3,538	821	8,833	4,073	149.7	396.1
채 소 류	150	164	213	294	42.3	79.3
과 실 류	5,054	1,906	10,075	6,218	99.3	226.2
제 조 담 배	410	2,177	245	1,555	△40.2	△28.6
쇠 고 기	343	887	60	158	△82.5	△82.2
분 유	1,577	3,661	237	1,108	△85.0	△69.7
기 타	6,136	8,917	9,474	15,116	54.4	69.5
비 료	294,835	63,844	286,367	71,485	△2.9	12.0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 (나) 반입실적

농림축산물 반입 총품목수는 53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채유용농산물, 제조담배, 한약재 등이고,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기타 견과류 등이다. 반입실적은 농림축산물이 33.7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1.1% 감소하였고, 그중 한약재의 감소율이 높았다.

&lt;표 1-2-28&gt;

##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3년(A)		2004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1,363	37,836	16,045	33,652	△24.9	△11.1
한 약 재	3,341	4,009	1,459	2,195	△56.3	△45.2
채 소 류	4,403	4,895	3,826	3,467	△13.1	△29.2
담 배 류	453	2,315	450	2,249	△0.7	△2.9
견 과 류	975	2,641	1,259	2,949	29.2	11.7
고 사 리 류	1,306	5,563	1,308	5,790	0.1	4.1
버 섯 류	1,294	9,379	1,631	10,256	26.1	9.4
로 알 제 리	11	209	35	394	220.7	88.5
녹 용	21	1,214	-	-	△100	△100
기 타	9,559	7,611	6,076	6,352	△36.4	△16.5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농업협상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제3장

## 국제 농업동향

###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가. 개요

2005/2006도 세계 전체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3.3%(6백만톤)증가한 19억 66백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0.3%증가한 19억98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18.1% 수준으로 FAO 권장 재고율(17~1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쌀

2005/2006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98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보다 0.9%증가한 417백만톤으로 전망된다. 쌀의 기말재고율은 16%로 '84/'85년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밀

2005/2006년 세계 밀 생산량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유럽등의 생산량이 줄어 전년대비 1.9%(11백만톤)증가한 612백만톤이며, 소비량은 전년보다 1.8(11백만톤)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3% 낮은 23.2%(FAO 권장재고율인 23~26%)로 전망된다.

## 라. 옥수수

2005/2006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5.5%감소한 667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소비량은 전년대비 0.2%감소한 679백만톤으로 생산량을 12백만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말재고율은 16.8%로 전망된다.

## 마. 대두

2005/2006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2.5%(54백만톤) 증가한 219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4.8%증가한 213백만톤으로 예상되어 기말재고율은 23.8%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8% 감소한 78백만톤으로 예상된다.

&lt;표 1-3-1&gt;

주요곡물수급전망

(단위 : 백만톤)

구 분		'03/'04(A)	'04/'05(B)	'05/'06(C)	증▲감 (C-B)/B
				7월 전망	
전체곡물	생 산	1,857.49	2,032.83	1,966.27	▲1.8
	소 비	1,947.32	1,992.87	1,998.76	3.0
	교 역	240.55	232.18	232.27	0.4
	재 고	354.12	394.12	361.62	▲8.2
	(재고율, %)	(21.1)	(19.8)	(18.1)	
쌀	생 산	389.49	401.21	409.87	2.6
	소 비	413.20	413.85	417.61	0.9
	교 역	27.36	25.10	24.94	▲0.6
	재 고	87.21	74.57	66.83	▲10.4
	(재고율, %)	(21.1)	(18.0)	(16.0)	
밀	생 산	553.92	624.51	612.56	▲1.9
	소 비	588.74	606.74	617.94	1.8
	교 역	109.41	107.28	109.13	1.7
	재 고	130.97	148.73	143.34	▲3.6
	(재고율, %)	(22.2)	(24.5)	(23.2)	

(단위 : 백만톤)

구 분		'03/'04(A)	'04/'05(B)	'05/'06(C)	증▲감 (C-B)/B
				7월 전망	
옥수수	생 산	623.71	706.26	667.51	▲5.5
	소 비	647.18	680.47	679.10	0.2
	교 역	77.20	75.11	73.93	▲1.6
	재 고	100.12	125.91	114.33	▲9.2
	(재고율, %)	(15.5)	(18.5)	(16.8)	
대 두	생 산	186.26	214.32	219.71	2.5
	소 비	190.02	203.26	213.11	4.8
	교 역	55.67	62.43	66.62	6.7
	재 고	35.00	45.08	50.73	12.5
	(재고율, %)	(18.4)	(23.6)	(23.8)	
잡 곡	생 산	914.08	1,007.12	943.84	▲6.3
	소 비	945.39	972.27	963.20	▲0.9
	교 역	103.77	99.80	98.20	▲1.6
	재 고	135.97	170.82	151.45	▲11.3
	(재고율, %)	(14.4)	(17.6)	(15.7)	

주 :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자료 : · USDA, ERS,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05. 7(이하동일)  
 · USDA, FAS,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2005. 7(이하동일)

## 2. 국제곡물 가격동향

1995/1996년도 밀, 잡곡류의 생산 감소로 기말 재고율이 14%대로 떨어졌고, 이는 1970년대 상반기의 가장 낮은 재고율(15%)보다도 낮은 재고율 수준이었다. 이로 인하여 1996년도 봄부터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국제가격이 최고수준까지 폭등하였다.

그후 1996/1997~1998/1999년도까지 연속 풍작으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제가격이 1996년 이전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1998/1999년도 쌀, 옥수수, 대두생산이 증가한 반면 밀 생산은 줄어들었으나 미국의 곡물생산이 양호하였고, 러시아 및 아시아국가, 브라질 등의 경제 위기 영향으로 주요곡물가격은 1998년도 가을 이후 낮은 추이를 보여왔다.

특히 미국산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98. 8월부터 강세를 나타내어 '99. 9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00년의 생산량 증가로 '00년 7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1/2002년도는 2000/2001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22.4%의 높은 재고율을 유지하여 국제곡물가의 하향안정세가 지소되었다

2002/2003년도는 엘리뇨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주요곡물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와 재고감소로 세계 곡물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2003/2004년도는 주요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01/'02년 이후 연속 3년간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세계 곡물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였다

2005/2006년도에는 주요곡물 생산국의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함에 따라 세계 곡물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2>

국제곡물가격추이

(단위:달러/톤, FOB)

연 도	쌀		옥수수	대 두	밀
	미 국	태 국			
1994	451	294	112	233	150
1995	375	290	109	205	177
1996	445	362	169	263	207
1997	415	338	121	274	160
1998	396	302	109	230	126
1999	486	284	93	176	112
2000	453	231	88	173	116
2001	304	184	88	167	129
2002	285	192	93	170	150
2003	327	199	107	209	149
2004	533	220	116	291	158
2005	405	278	96	213	148
7월	375	282	-	-	-

주 : (밀) US Portland 백밀1등급, (옥수수, 콩)US Gulf2등급

(미국 중립종쌀) US California

자료 : USDA, 2005년 7월 발표자료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김경미)

##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 가. 미 국

#####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3억 81백만헥타로 2004년 곡물생산은 3억 89백만톤에 이르고, 농산물수출도 623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농업국가이다. 반면 농업인구는 612만명(2004)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2만호로 총가구중 점유비중은 2%로 매우 낮다.

2004년 농산물수출은 623억달러로 2003년 562억달러에 비해 10.8% 늘었고, 농산물수입은 527억달러로 지난해 457억달러에 비해 15.3% 증가하였다.

2004년의 미국의 무역적자는 6,531억달러에 달하나, 농산물에서는 96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전체 곡물생산은 2003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는데, 쌀이 8%, 옥수수가 16% 증가, 밀은 8% 감소하였다.

<표 1-3-3> 미국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4	구 분	단 위	2004
○ 농 업 인 구 - 총인구대비	천명 %	6,162 2.1	○ 밀 생 산 량 ○ 쌀 생 산 량	백만톤 "	58.7 10.5
○ 농 가 호 수 - 총가구대비	천호 %	2,127 2.0	○ 과 일 류 생 산 량	"	30
○ G D P	억달러	11,700	○ 농 산 물 수 출 - 총수출대비	억달러 %	623 7.6
○ 경 지 면 적 - 호당경지면적	천ha ha	380,521 178.1	○ 농 산 물 수 입 - 총수입대비	억달러 %	527 3.6

자료 : USDA(www.ers.usda.gov), FAOSTAT

## (2) 농업정책동향

미국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미국농업이 세계 곡물가격 하락, 아시아지역 등으로의 수출감소 및 가뭄 등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2002년 농업법(Farm Bill)의 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안전망과 관련된 각종 소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1933년 이후 계속 실시해오던 생산조정제도와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율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동시에 가격변동이나 수량변동에 대응한 수입보험제도를 확충하여 소득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특히 1998년 이후부터는 생산자율직접지불을 추가하는 형태로 긴급대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1996년 농업법의 내용과 긴급지원 형태의 농가지원을 2002년 농업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체하고, 아울러 종전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경기조절지불제(또는 목표가격제) 등 새로운 소득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2002년 5월 2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작물년도)의 6년간 실시되고 예산 배분은 10년간(2002~2011)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농업법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828억불(추정)이 증액되어 총 1,900억불(추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용자단가”의 인상 및 “고정 중립 직접지불(또는 생산자율직불제)단가”의 인상, 그리고 목표가격을 보장하는 “경기조절지불제도”의 도입 등 정부보조를 증액하는 소득안전망을 강화한 것이 그 주요 특징이다. 그 이외에도 환경보전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과 농촌지역단위의 개발정책을 강화한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2002년 농업법에서 신규로 도입된 경기조절지불제도(Counter-cyclical payment, CCP)는 종전의 긴급대책으로 실시하던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payment)을 2002년 농업법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시장손실지불은 1998년 이후 세계 곡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고정적인 생산자율직불제 만으로는 소득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임시대책으로서 생산자율직접지불을 수급하는 농가에게 1998~2001년간 약 185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조치였다.

이러한 경기조절지불제도는 종전의 부족불제도의 목표가격을 부활시킨 것이며, 이 목표가격과 ‘고정중립직접지불+시장가격(또는 용자단가)’과의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서 농가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고, 1999년 11월 식육 등 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한 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도 공표하였다.

9.11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여 농업과 식품부분을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여 동식물검역 및 식품수입 절차도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감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안전성기준 및 표시제, 계란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가고 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Wetland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농산물 시장확대 및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지향성이 강한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 FTA 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무역협상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향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동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농무부는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농업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의 네가지 요인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의 기술개발 지원은 농산물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Bio기술, GM기술, 곡물연료 생산 및 사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송지숙)

## 나. 중 국

### (1)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3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61.9%인 799,673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3.6%인 130,039천ha이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0.7ha로 규모가 매우 영세규모이다. 농산물 수출입은 수출이 206억 달러이고 수입이 155억 달러로 5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3-4>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3	구 분	단 위	2003
○ 농 가 인 구 - 총 인 구 대 비	천명 %	799,673 61.9	○ 벼 생 산 량 ○ 옥 수 수 생 산 량	백만톤 "	161 116
○ 농 가 호 수 - 총 가 구 대 비	천호	193,088 56.7	○ 식 량 작 물 재 배 면 적 ○ 채 소 · 과 수 "	천ha 천ha	99,410 27,391
○ 농 업 총 생 산 액 - GDP 대 비	억달러 %	1,787 14.6	○ 농 산 물 수 출 - 총 수 출 대 비	억달러 %	206 4.7
○ 경 지 면 적 - 농 가 호 당 경 지 면 적	천ha ha	130,039 0.67	○ 농 산 물 수 입 - 총 수 입 대 비	억달러 %	155 3.8

자료 : 1. 농림업 주요통계(2005)

(2) 중국의 농업과 농촌정책

2004년 중국 정부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협조적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관을 가지고, 도시·농촌을 연계하여 발전하는 전략 및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세금을 적게 받으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방침”을 실시하여, 농가의 물질적 이익과 민주권리의 실현·보호·발전을 농촌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중점으로 삼았다.

과거의 <농업·농촌업무 1호 문건>을 18년이 지난 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농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농가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촉진 및 농촌경제사회의 발전에서 그간 나타나지 못했던 좋은 추세가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농업·농촌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 강화

첫째, 중앙과 지방은 약 110억위엔의 자금을 배정하여 식량주산지의 식량재배농가에게 직접 보조하였다. 둘째, 중앙은 28억위엔의 자금을 배정하여 수도, 옥수수, 대두, 소맥 4가지 식량작물의 우량품종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다. 셋째, 중앙과 성급 재정부문에서 5억위엔의 전용보조금을 배정하여 대형농기계를 구매하는 농가에게 적절한 보조를 주었다. 넷째, 조생, 중

생, 만생 장립종 벼와 단립종 벼의 최저수매가를 공포하여 가격보장을 통해 농가의 쌀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수급상의 품종 모순을 완화하였다. 다섯째, 화학비료 생산업체에 대하여 세금수납, 전기세, 원자재 수급 등 분야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학비료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자재가격의 상승을 통제하였다. 연간 식량총생산량이 4,694.5억kg로 전년 대비 387.5억kg을 증산시켜 신중국 설립 이후 55년이래 식량증산의 폭이 최고가 된 해였다.

#### (나) 농업세 감면 확대

흑룡강성, 길림성 2개 省에서 농업세 전면 면제정책을 시범시행하고 하북성 등 11개의 식량주산省(區)의 농업세 세율을 3%P 인하하였고 기타지역도 1%P 인하하였다. 농업의 부가가치세는 정식으로 농업세와 동시에 취소 또는 인하하였다. 중앙재정부는 전이지불(轉移支拂)의 방식을 통하여 중·서부지역의 농업특산세와 농업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2004년 전국 농업세 감면액은 약 230억위엔에 달하고 약 60억위엔의 농업특산세를 취소하여 농가의 세금부담을 약 300억위엔 감소시켰다. 전국적으로 이미 1.5억명의 농가가 농업세를 면제받았고 5억명 농가의 농업세가 42%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농가의 농업세 부담도 약 15% 인하되었다.

#### (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중앙의 농업고정자산 투자규모가 550억위엔에 달하였는 바, 그중 논, 절수관개(節水灌溉), 농업용수 개발, 향촌도로, 농촌가스, 가축울타리 등 농촌의 6개 소공정에 대한 투자가 280억위엔을 초과하였다. 또한, 동물방역시스템 구축, 농업종합개발, 빈곤지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시·현은 토지이양 수익 중 15%이상의 자금을 농업토지개발에 사용토록 함으로서 농업투자의 새로운 자금경로를 개척하였다.

#### (라) 경지에 대한 보호 강화

개발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을 통하여 불법적인 경지전용을 엄격히 처리하였고, 농경지를 비농경지로 전용하는 허가를 반년간 임시 중지

하는 동시에 중점적으로 급수건설 용지를 확보하였다. 전국적으로 기본농지 보호검사를 진행하여 기본농지에 대한 식수조림, 양어 등 기본농지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를 제지하는 등 기본농지 보호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 집체토지 점용에 대한 배상현황 검사 및 처리를 통하여 147.7억위엔의 미지급 토지점용배상금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의 합법적인 토지권익을 확보하였다.

(마) 농촌개혁의 가속화

첫째, 농촌세계 개혁을 강화하였다. 농업세에 대한 감면 및 향(鄉)·진(鎭) 지방정부, 농촌의무교육과 현(縣)·향(鄉) 재정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둘째, 식량유통시스템 개혁강화, 식량구매·판매시장과 가격을 전면 개방하여 전국 범위내의 식량구매·판매시장화 및 경영주체 다원화 구조를 형성하였다. 셋째, 농촌금융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1,650억위엔의 자금으로 8개 省(市)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 개혁시범 업무를 지원하였다. 농촌신용사의 채대출을 증가시키고 대출이율의 폭을 크게 하여 농업지원 대출의 발급을 독려하고 농가의 소액신용대출과 연대보증대출을 증가하였다. 또한 우체국 저축자금을 인민은행이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통하여 우체국 저축자금이 농촌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감소시켰다.

(바) 농민공<sup>2)</sup>(農民工)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

전국적으로 농민공에게 체납된 급여를 지급토록 엄격히 감독하여 325억 위엔의 농민공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 유입 농민공에 대한 차별대우 정책과 함부로 돈을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노동보호와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도시 유입 농민공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하여 일부 도시에는 이미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내놓았으며, 중국 재정부는 3억위엔의 전용자금을 도시 유입 농민공에 대한 기능교육 업무에 지원하였다.

(사) 정부예산의 농촌사회사업 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

새로 증설한 교육, 위생, 문화사업 경비를 농촌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서부지역의 농촌교육에 “두가지 기초” 계획을 시행하여 중앙재정

2) 도시에 나가서 노동이나 기타 잡일에 종사하는 농민

부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위엔의 자금을 서부지역의 농촌에 기숙사 학교 건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재정부는 30억위엔의 자금을 투입하여 농촌 중·소학교 위험건물 개조공정과 원격교육시범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일부자금을 투입하여 농촌의 일부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교과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억위엔의 자금으로 신형 농촌협력 의료시범 현과 에이즈와 혈흡충(血吸蟲)방제 집중실시 현의 향·진 위생소 건설을 지원하고 40억위엔의 전문자금으로 중대한 전염병, 풍토병 방제, 공공위생 기능건설과 농촌위생 건설에 지원하며 중·서부지역, 특히 소수민족지역의 농촌문화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박은철)

## 다. 일 본

###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4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7.4%인 9,400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2.5%인 4,714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6ha로 한국의 1.5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2002년 농산물 수입액은 236.5억달러로 수출액 16.4억 달러보다 14.4배 가량 많다.

<표 1-3-5>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4	구 분	단 위	2002
○ 농 가 인 구 - 총 인 구 대 비	천명 %	9,400 7.4	○ 곡 물 류 생 산 량 - 쌀 생 산 량	백만톤 "	12.2 8.7
○ 농 가 호 수 - 총 가 구 대 비	천호 %	2,934 5.9	○ 과 일 류 생 산 량	"	4.1
○ G D P	억달러	46,690	○ 농 산 물 수 출	억달러	16.4
○ 경 지 면 적 - 호 당 경 지 면 적	천ha ha	4,714 1.6	○ 농 산 물 수 입	억달러	236.5

자료 : 1. 농림업 주요통계(2005)

2. 통계로 보는 한국속의 세계농업(2004)

### (2) 농업정책동향

일본의 농업제도 및 정책은 21세기의 식료·농업·농촌정책 기본지침이

되고 있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2000년 7월 제정함으로써 그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식료의 안전공급의 확보에 관한 시책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비·생산 양측의 조화를 촉진함과 함께 식량의 자급률 목표(2010년 기준 곡물자급률 45%, 주곡자급률 62%, 열량공급기준 45%)를 책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식료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 품질확보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생활에 있어서 정보제공, 식료의 표시규격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했다. 2000년 6월 강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일본농업표준(JAS)법의 제정과 더불어 2001년 10월부터 절인 양파와 건포도에 대하여 품질표기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가장 기본적 자원인 농지의 양호한 상태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의 생산성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관개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수자원공급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경영의 불확정성을 감소시켜 경지면적확대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업 농업인구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도 처음으로 50%를 상회하고 여성비율이 55%에 달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 넓은 인재의 확보육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법인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을 전개한 외에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행하였다.

농업생산력의 향상, 농산물의 품질·안전성향상, 담당자의 확보·육성 등을 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충실히 강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용한 정보를 배포 및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에 따라 생산, 판매, 병해충피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유용성을 농업분야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요에 맞는 국내농업생산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

물의 수급 사정 등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보리, 콩, 우유, 유제품 등에 있어서 가격정책을 재평가함과 함께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외 농업이 본래 갖고 있는 자연순환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 등에 의해 바람직한 농업생산 방식의 도입촉진, 가축 분뇨의 적절한 관리, 유기성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행하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도 1999년 지속농업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농업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농촌진흥을 위해 농업생산활동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추진함과 함께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을 2000년부터 도입했다. 중산간지역은 일본 농산물의 40%를 생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하류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농업관련단체의 재편·정비 등에 대한 시책으로 농업협동조합계통조직,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농업공제단체, 토지개량조합 등의 각 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조직의 간소화, 합리화,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 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WTO농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WTO농업협상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주민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촌재건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박은철)

##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1) 농업경제 동향

2004.5.1부터 중동구 유럽 10개국이 신규로 EU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EU는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현재 경지면적은 163백만ha, 농수산업 종사자수는 약 1,008만 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3,122억유로 정도이다. 2003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2.6%, 쇠고기 9.6%, 돼지고기 8.5%, 신선채소 8.5%, 신선



과일 6.6% 가금류 4.1%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이 비중을 보면 프랑스(20.4%), 이탈리아(14.1), 독일(13.2%), 스페인(13.1%), 영국(7.5%), 네덜란드(6.5%), 폴란드(3.8%), 그리스(3.6%), 덴마크(2.7%), 벨기에(2.2%), 포르투갈(2.0%), 아일랜드(2.0%), 오스트리아(1.7%), 헝가리(1.5%), 스웨덴(1.5%), 핀란드(1.3%), 체코(0.9%), 슬로바키아(0.5%), 리투아니아(0.4%),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2%),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1%), 룩셈부르크(0.1%), 몰타(-)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EU-15국(4.0%) 체제보다 높아져 5.2%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2%), 벨기에(1.7%), 룩셈부르크(2.4%), 독일(2.4%)는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리투아니아(18.7%), 폴란드(18.2%), 그리스(16.3%) 등은 높은 편이다. EU 농업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EU-15개 회원국중 룩셈부르크(0.5%), 스웨덴(0.6%), 영국(0.7%), 독일(0.7%), 벨기에(1.0%)가 낮고, 신규가입 10개국 중 체코(1.1%)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기존 EU-15개 회원국중 그리스(5.4%), 스페인(3.6%)이 신규회원국 중 사이프러스(3.7%), 헝가리(2.7%), 리투아니아(2.6%)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EU 농산물이 세계 농산물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곡물(쌀제외) 8.6%, 사료곡4.9%, 와인 28.3%, 설탕 11.0%, 우유 20.3%, 육류(부산물 제외) 13.9%(쇠고기 8.1, 돼지고기 26.0%, 가금육 13.9%), 분유 21.4%, 치즈 33.0%, 버터 23.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5%이며 수입은 6.4%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20.0%), 스위스(6.7%), 일본(6.4%), 러시아(5.7%) 등이며 최근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를 비롯하여 곡물, 육류, 유제품 등의 비중이 크며,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2.8%), 미국(11.4%), 아르헨티나(6.4%) 등이며 주로 과채류, 견과류, 유지종자류, 목재, 동물사료, 수산물 및 커피 등이 수입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증가율이 역외 무역증가율보다 높다. 2003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적자는 22억유로이다.

&lt;표 1-3-6&gt; EU 농업의 주요 지표(2003)

국 가 (25개국)	농수산업 종사자 (천명, %)	GDP중 농업비중	농업총 생산액 (백만ECU)	농식품 역외무역수지 (백만EUR)	농식품 비중(%)		
					수출	수입	가계비 <sup>1)</sup>
벨기에	70(1.7)	1.0	6,809	2,576	9.3	8.9	17.3
덴마크	89(3.3)	1.6	8,135	4,918	17.6	10.7	16.7
독일	871(2.4)	0.7	40,307	△11,285	4.9	8.3	16.1
그리스	654(16.3)	5.4	11,419	△1,716	22.7	11.2	20.5
스페인	934(5.6)	3.6	41,136	4,752	14.6	8.3	19.0
프랑스	1,042(4.3)	2.0	64,046	11,060	11.4	8.1	17.9
아일랜드	113(6.4)	1.9	6,006	6,105	12.5	8.8	14.6
이탈리아	1,040(4.7)	2.2	43,815	△5,681	7.2	9.4	17.1
룩셈부르크	5(2.4)	0.5	265	△689	5.7	9.5	21.2
네덜란드	218(2.7)	2.0	20,053	19,689	17.7	11.4	14.3
오스트리아	204(5.5)	1.2	5,671	△613	6.1	6.7	15.0
포르투갈	657(12.8)	2.5	6,175	△2,777	6.7	11.2	22.6
핀란드	126(5.3)	1.0	4,152	△637	2.6	6.3	18.7
스웨덴	111(2.5)	0.6	4,794	△2,434	3.0	7.3	18.3
영국	356(1.2)	0.7	23,635	△16,086	5.9	9.2	13.3
체코	212(4.5)	1.1	2,941	△988	3.6	5.6	26.1
에스토니아	37(6.3)	2.2	432	△243	5.0	9.7	31.2
사이프로스	17(5.2)	3.7	648	△292	34.2	12.2	21.9
라트비아	146(14.6)	2.1	563	△383	7.3	12.3	31.7
리투아니아	276(18.7)	2.6	1,219	△44	10.2	7.9	36.1
헝가리	211(5.4)	2.7	5,586	1,309	7.5	3.7	27.4
몰타	4(2.5)	1.6	132	△237	3.1	10.5	22.9
폴란드	2,485(18.2)	2.3	11,771	202	8.1	6.0	26.5
슬로베니아	75(8.4)	1.6	946	△355	6.5	3.9	21.9
슬로베키아	130(6.0)	1.2	1,553	△392	3.3	5.2	28.0
EU-15	6,487(4.0)	1.6	286,419	△493	6.2	6.2	16.4
EU-25	10,082(5.2)	1.6	312,211	△2,159	6.5	6.4	16.9

주 : 1)은 2002년 자료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al Statistics

##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 3월 로마조약에 의거 15개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영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및 2003년 7월(MTR),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 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기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타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

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07~2008/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준응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준응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 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목표 1지역의 경우에 EU의 부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

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10개 신규 회원국의 농민들은 EU 가입 첫 해부터 직접지불금을 받을 자격을 가지지만 10년의 진입기간이 지나야지만 EU-15 수준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2013년이 되면 신규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지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예정국을 위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지원제도를 2000년도에 도입하여 7년동안 총 3,640백만(연간 520백만) 유로를 투입한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2004년도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의 이행 및 2001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DDA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아울러 '04년 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양자 통상 및 협력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 및 동식물검역 완화 등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WTO협정 및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따라 성실히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수입관리를 철폐하는 등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WTO협정 및 국제관례 등에 따라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가. 미 국

우리나라는 2004년에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27억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에 이어 제4위 수출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인삼, 연초, 면류, 일부 과실류 등이 2003년에 약 5억달러가 수출되어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과 동식물검역 및 저세율 시장접근물량(In-quota)의 수입관리문제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공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시장접근물량(MMA) 으로 수입되는 쌀이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및 국내판매관리, 쇠고기 보조금지급, 국내산 소비촉진운동, 밀·사료용 옥수수·팥콘 등 WTO이행계획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약속이행, 미탈각 호두의 수입사전 검사제도, 동식물검역조치를 통한 통관지연, 꿀·분유·보리·감자·팥콘 등의 고관세 문제, 쇠고기 수입금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산 오렌지의 수입을 일시 중지 하였고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재개와 파프리카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송지숙)

## 나. 일 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며,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 통상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농업관련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농업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유지와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한·일 농림당국은 농업각료회의를 교환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3월 9일에는 서울에서 제3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고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양국 농림부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농업분야의 상호협력 및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기로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고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38차 회의는 200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박은철)

## 다. 중 국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에 농산물교역이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2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

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3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04년 양국간 농산물 교역량은 한국은 중국에 213백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1,499백만불을 수출하고 있어 전체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현안협회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 공동위원회와 한·중무역실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7일~10일까지 4일간 노무현대통령은 중국을 국민방문하여 양국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농림분야 협력사업으로서 경제·통상협력비전팀 구성 운영, 농업연수생 파견, 품질검사·검역협업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측은 우리와의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측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측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간의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4월 북경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7차 회의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종전의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박은철)

####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4년 약 0.8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돼지고기·치이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켓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4년 약 0.2억달러에 그쳐 양국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시장 편중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5월에는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우가 한 마리 발생하여, 캐나다산 쇠고기 및 그 부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며, 유채정제유 등에 대한 실행세율을 낮춰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내에 만성소모성질병(CWD)의 발생으로 우리측이 취한 잠정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여 캐나다산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한국산 배의 검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여 지난 한·캐 식물검역전문가회의시(2001.10.11)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한·캐나다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캐 특별동반자관계회의(SPWG)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데 1999년 5월 제9차 회의가 토론토에서 개최되어 의견해소에 기여했으며, 제11차 회의는 2003년 9월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으며, 제12차 회의는 2004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정부는 공식회의 이외에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송지숙)

####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농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중요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양측의 농업관련 통상현안은 주로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농업통상에 관련된 협의는 그간 매년 양측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온 한·EU 각료회의 및 고위급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01년 4월 1일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발효로

한·EU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회의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고위급협의회는 폐지하였다. 특히 공동위원회 산하에는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통상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4년 개최된 제3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EU측은 수입허용 검토시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특정품목에 대해 모델을 개발하는 민관 합동 연구를 실시하고, WRO/SPS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U를 하나의 국가군으로 취급하여 수입허용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은 국가별, 품목별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각 회원국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예, 잔류물질 통제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중복을 피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EU가 '05.3.1부터 시행하는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을 문의하였으며, EU측은 회원국별로 적용할지, EU전체적으로 적용할지 여부가 정해지는데로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나라 삼계탕 수출을 위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의 위생상황의 향상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U 역내에서 위생조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DDA, FTA 농업협상 추진상황 등에 대한 양국간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바. 중남미국가

중남미 국가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으며 또한 국내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중해과실파리 등이 분포하거나 구제역 등이 발병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식물검역문제가 해소되는 경우 농산물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국 중 미국, 중국, 호주에 이어 4번째

국가이며 우리나라로는 옥수수, 대두박, 대두, 오렌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입이 많으며 칠레와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멕시코는 포도·감귤 및 가금육, 아르헨티나는 쇠고기·가금육, 에쿠아도르는 망고, 브라질은 쇠고기 및 망고·감귤류, 콜롬비아는 열대과일류, 페루는 포도 등이 있으며 이외에 브라질에서는 가금육 수출작업장의 추가승인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기 위한 활동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등의 육류 및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동식물 검역현안은 WTO/SPS규정과 IPPC, OIE 등 국제기준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내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농업협력 사업으로 브라질과는 '05. 5월 한-브라질 농업부간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기타 농업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 철)

## 사. 기타국가

### (1)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꾸준히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업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자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수입확대,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청, 동·식물검역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동식물검역협정체결을 요청 등을 양자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양국정상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간 공동위, 농업장관면담,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동 회의를 통해서 품목별관세율은 UR협상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임을 상대국에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했으며,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상대국에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등 관련 국제기준에 의해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최소화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 장관회의, 한·태국, 한·베트남, 한·알제리, 한·모로코, 한·이란, 한·이스라엘, 한·우즈베키스탄, 한·카자흐스탄, 한·인도네시아 등과 정례적으로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국가와의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10월 한·몽골 농업부간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2004.3월 제1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를 몽골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양국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외 인도, 필리핀 등의 국가들과도 농업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약정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최윤테)

##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 1. WTO 활동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외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여러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출범시켰다. 엄밀하게 말하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 부터 자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97년 부터 WTO 회원국간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개시되었고 DDA 협상이 출범함에 따라 DDA 협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특히, “분석 및 정보교환” 단계를 거치면서 농업협상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농업협정 제20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1년 전에 농업협상을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DDA 협상은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범 수립, 4개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하고, 2003년 9월에 제5차 각료회의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하여 협상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과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당초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

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및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Modality 합의 실패, 서비스 국내규제 및 보조금, 정부조달 등의 규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부분 분야의 중간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DD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 이은 두 번째 결렬로 WTO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WTO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2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ACP국가들의 강경한 반대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에서 그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제5차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003년 10월 중순부터 주요 4개 분야(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이슈, 면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수출·입국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04년을 맞이하였고,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4년 초에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 논의를 거쳐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기본골격에서 당초 협상 시한을 넘겨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본골격 합의 이후에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 2. OECD 활동

###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 농업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다원적 기능,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 OECD는 WTO농업무역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OECD의 연구가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삭감문제 및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에 영향을 주었던듯이, 이러한 작업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을 비롯하여 세계 농업무역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나. 최근 활동

2005~2006년 OECD 농업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회원국들은 농정평가보고서 발간 및 농정평가지표 개선을 포함하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작업, 중기농업전망 작업, 식품경제 분석, 농업정책개혁 장애 극복, DDA 무역자유화 진전 평가, 농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도구, 농업환경정책의 점검 및 평가 등을 향후 2년간 추진대상 활동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입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식품경제 등 소비자관심을 반영하는 작업, 무역자유화의 비용·효과 관련 작업의 축소 및 농촌개발을 비롯한 다원적기능 관련 작업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OECD는 2002년 5월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보고서는 수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03년 3월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되었다. 다원적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표지향적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결론이나, 우리나라를 포함 수입국들의 주장으로 일정생산수준까지는 농산물생산량과 식량안보가 직접 연계되며, 거래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정책이 최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05년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브라질, 중국, 남아공 농업정책 검토,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 개선작업,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관한 후속논의로서 정책관련 거래비용과 공급주체, 무역·농업 정책 개혁의 분배 효과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한편 2001년 이후 처음으로 OECD 농업위원회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원국과 옵저버국가 그리고 농정 검토 대상 비회원국(브라질, 중국, 남아공) 대표들과 FAO, World Bank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농업무역을 촉진하면서 국내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상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OECD는 2004년 한해 동안의 회원국 농정개혁을 평가한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보고서” 및 2005~14년간 세계 농산물 시장을 전망한 “OECD 중기농업전망”을 2005년 상반기에 발간하였다. 아울러 그간 작업반 논의를 통해 공개승인된 농식품 시장에서의 특혜무역협정(미국과 EU의 사례), 낙농 정책 개혁과 무역 자유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는 2005년 상반기에 발간된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2004년 한 해 동안 회원국의 농정변화를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OECD는 동보고서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OECD 농업은 계속 높은 지지수준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국가간 지지수준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지지수준 감축의 진전은 국가들간에 고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OECD는 정책운영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특정 결과 달성에 적합하며,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부응함에 있어 유연한 정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 농정에 대해, '86~'88년 이래 시장지향의 진전은 미흡하였으며, 농업생산자지지 수준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고, 대부분의 보조는 계속하여 시장가격지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직불제 사용으로 이행이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생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지를 감소시키고, 시장접근을 증대하며, 저비용 수단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 생산과 무역을 덜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환경, 지역 개발과 소득 목표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2014년까지의 세계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는 “OECD 중기농업전망(OECD Agricultural Outlook 2005~2014)을 2005년 상반기에 발표했다. 동보고서는 농업 및 무역정책과 핵심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일정 가정을 전제로 농산물 생산, 소비, 무역, 가격에 대한 중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식량기구(FAO)와의 합동작업이 이루어지고 29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전망이 추가되었다. 중기 농업전망 보고서는 농산물 가격은 실질 가치에서 장기하락을 계속할 것이나 축산 및 낙농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식품의 교역은 성장할 것이나 육류교역은 질병 발발에 따라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종필)

### 3. FAO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5년 10월 16일 정식 발족하여 4,500여명의 직원과 187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UN 최초·최대의 상설전문기구로서 각국의 농업, 수산업, 임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각 회원국과 UN기구에 분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UN본부라 할 수 있다.

FAO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비롯하여 지역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정부간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며 FAO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초가 되어 각종 농림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FAO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FAO 분담금 중 1.86%를 차지하고 전체회원국 중 10위에 위치하는 주요 기여국 중의 하나이다.

<표 1-3-7> 연도별 FAO 분담금 내역

연도별	분담금(US\$)	분담비율	순 위
2000	3,250,871	1.01	16
2001	5,590,222	1.74	11
2002	6,053,917	1.88	10
2003	6,003,472	1.86	10
2004	3,244,907 € 3,150,883 \$	1.86	10
2005	3,244,907 € 3,150,883 \$	1.86	10

주 : \* 최근 유로화 강세로 인해 2004년도부터 회원국의 분담금을 달러화와 유로화로 분리(Split Assessments)하여 납부키로 제32차 총회(2003년)에서 결의함

우리나라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3년 제32차 총회까지 총 28회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해 왔으며, 1966년에는 서울에서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년 임기의 이사국에 7회 진출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2000년에는 최초로 FAO 재정위원회에 진출(2000~2001)하여 FAO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등 주요정책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지난 1996년 로마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WFS)에서 2015년까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통의 책임과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을 위한 「로마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에는 WFS이

후 기아극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아극복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치 및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로마에서 38개국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184개 국가와 81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세계식량정상회의:5년후(World Food Summit : five years later, WFS : fyl)」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기아극복을 위한 세계적 연대노력을 강조하는 “국제빈곤퇴치동맹(International Alliance against Hunger)”의 제목하에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32차 총회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는데,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동 총회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아와 가난 극복을 위해 각국의 국내 식량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FAO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기아극복에 있어서 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04년 「세계 쌀의 해」 기념행사에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허장관은 FAO 총회 참석 전에 WTO 사무국을 방문하여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과 카스티요 일반이사회의장을 각각 면담하였고 FAO 총회 기간 중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대표와도 양자회담을 가졌는 바, 12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인 개도국 지위 유지와 2004년 쌀 협상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외 2003년에는 농업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활발히 개최되었으며, 특히 2002년 FAO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에서 논의되어 세계기아극복 차원에서 적정식량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위해 구성된 정부간 작업반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는 바,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의 자발적 성격을 강조하고, 국가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2004년에는 5.20-24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27차 아태지역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허상만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하여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과 아울러 아태지역

의 공동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간의 농업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ASEAN+3 농림장관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역내 농업·농촌 발전과 아국의 위상강화에 기여해 왔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 개최된 제4차 회의에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고, 2004년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 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협력사업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향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기대하였다.

그 밖에 제27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2월), 제51차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총회 및 집행이사회(9월, 시리아 다마스쿠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전과와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이영구)

####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1995년 수해에 따른 긴급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생산성과 북한당국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매년 식량절대부족국가 등에 대한 국제기구(WFP, FAO 등) 및 NGO의 지원 목표금액(Appeal)을 발표하고 있는 유엔인도지원국(OCHA)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UN기구의 대북지원 목표액은 2억 880만불, 실적은 1억 761만불로 목표 대비 61.1% 수준이었다.(한국포함, OCHA 통계 '05.1.2). 주요

기여국은 일본(4,660만불), 미국(1,906만불), 유럽연합(1,316만불), 스웨덴(914만불), 오스트레일리아(797만불) 순이었다. 2003년에는 목표 2억 2,937만불, 실적 1억 3,305만불로 목표 대비 58.0% 수준이었다.

한국을 제외한 '04년 UN기구와 국제사회 대북지원 규모는 1억 6,323만불로 지난해 1억 3,932만불 대비 17%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UN 기구가 1억 2,591만불, 개별국가 2,153만불, 국제 NGO 1,579만불의 구성이다.(UN OCHA 통계 2005.1.2)

WFP는 총 36.6만톤의 식량을 지원(목표량 48.1만톤의 76%)하였는데, 한국 옥수수 10만톤, 일본 곡물 12만9천톤, 미국 곡물 5만톤, 스웨덴 곡물 1만8천톤, 유럽연합 곡물 1만2천톤 등이다.

한편, 유엔의 인도지원국(OCHA)에 따르면 2005년도 유엔주도의 합동지원절차(CAP) 프로그램에 수혜대상국에서 북한이 제외됐다. 이는 북한이 안보상황을 이유로 유엔측에 CAP 불참 입장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며, 이는 북한이 통합지원절차보다는 개별기구나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형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FAO와 WFP가 2004년 북한작황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곡물생산량은 423.5만톤('03/'04년 수확량 407.9만톤 대비 3% 증가, 정곡기준)으로 곡물 부족분은 897천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원조 소요량은 40만톤의 곡물 및 10만톤의 비곡물의 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북한측의 곡물수입 예상량 10만톤, 한국측의 곡물지원 예상량 30만톤, 이미 공여가 확보된 17만톤의 제외한 후 산정한 규모이다.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이영구)

## 5. APEC관련 활동

### 가.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89년 호주 캔버라 회의에서 태동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고, 각종 APE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식량작업반, 생명공학, AFS (APEC Food System)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담당한 1991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3개국이, 19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아, 1994년에는 칠레가 1998년에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각료회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SOM)와 그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농업기술협력 실무작업반(ATCWG) 등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주요 활동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는 “1993년 12월 15일까지 UR협상타결 최대 노력”을 결의하였고, 선진·개도국의 중장기 무역자유화 목표(2010/2020)를 정한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제기한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신축성 원칙(Flexibility)이 반영된 1995년 오사카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을 통해 APEC의 양대 축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14개 분야)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13개 분야)의 세부분야별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였고 “인구증가와 소득성장이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과제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식량작업반에서 2년여 기간 동안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식량수입국의 입장을 확보하였다.

1996년 필리핀 수빅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인 마닐라 행동계획(MAPA)이 국가별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

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공동계획으로 집대성·채택되고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발굴을 검토토록 제시되었다.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을 정하고 임산물, 수산물 등 9개 우선분야(주로 관세분야)를 98년중에 논의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구상이었으나 1998년 11월 각료회의시까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후속 추진분야에 속한 농산물 등 6개분야는 1999년중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시 후속 추진분야에 포함된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은 BIA에 의거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기존입장을 한·일의 긴밀한 공조로 관철시켜 농산물은 APEC에서 어떠한 사전 조건 없이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각료/정상회의에서는 생명공학의 농업 생산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ATCEG의 지금까지 연구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2000년 6월 통상장관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8년 민간이 제안하여 1999년 8월 고위급회의에서 확정된 APEC Food System을 승인 APEC의 장기과제로서 식량분야의 3개 협력 방안(농촌하부구조개발, 식품교역촉진, 진보기술확산)을 균형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0년초 브루나이에서 열린 1차 고위급회의에서 뉴질랜드는 1999년 정상 및 각료 보고서의 지시에 따라 AFS 3개분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Tasking matrix 와 Reporting mechanism을 제안하였고, 6월 호주 다윈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TCEG의 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은 GMO의 투명하고 과학적 접근에 기초한 활용을 강조하였으나, 우리는 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GMO의 식품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사항을 의장 보고서에 관철하였다.

2000년 11월 브루나이 각료/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다자무역체제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되어 “충분히 광범위하고 균형된 의제의 뉴라운드가 2001년 중에 출범되어야 한다”는 APEC 회원국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2001년, APEC 논의는 주로 WTO 뉴라운드 기여방안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호주의 실행관세 모라토리움 및 미국의 상하이차터 제안 등 시장접근분야에서 무역자유화 진전 노력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미국이 신경제하의 APEC활성화를 위하여 상하이 차터를 수정제안한 “상하이합의”(Shanghai-Accord)가 2001년 10월 각료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하여 “반테러선언”도 채택되었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WTO/DDA 협상의 기한내 종결을 위한 APEC의 기여를 촉구하였으며, APEC 투명성 기준 실현을 위한 성명, 무역과 디지털경제에 관한 APEC 정책실현을 위한 성명, 반테러성명이 채택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조기자유화 논의가 WTO협상으로 넘어감에 따라 생명공학에 대한 고위급정책대화 설치, APEC Food System이행 촉진, 투명성원칙 등의 확보 등이 주 이슈로 논의되었다.

2003년 10월 태국 정상회의에서는 WTO/DDA 협상 진전을 위하여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데르베즈 칸쿤 각료회의 의장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재활성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FTA/RTA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어, FTA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고, 무역블록화에 반대하였다.

2004년 APEC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고, 합동 각료회의의 주요 논의의제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 & FTA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인간안보강화(Enhancing Human Security)였다. 합동각료회의의 주요 논의 및 합의 내용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재확인 및 WTO DDA 기본골격 승인을 전적으로 환영하였고, 제네바 APEC 코커스 활동의 지속 및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WTO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 무역자유화 등이 주요 논의 의제였으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및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APEC의 농업관련 협의체인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ATCWG)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8차 총회를 개최하고 동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 농업생명공학의 연구개발 및 지도 등 7대 소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향후 활동



계획 및 APEC 기금활용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5년간 ATCWG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9차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ATCWG에서의 의장국 및 프로젝트 제안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PEC의 농업관련 유일한 회의체인 ATCWG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제협력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 6. 농업 · 환경 · 무역 연계 논의동향

우루과이 라운드이후 농업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속가능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농업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의 장려라는 당위성과 함께, 농업보조의 환경효과 및 무역효과를 분석하여 좀더 친환경적이고 무역친화적인 농업정책을 모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농업활동은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연경관보전이나 홍수조절을 통하여 환경에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업 · 환경 · 무역논의는 크게 OECD, WTO, 다자 환경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OECD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년 9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 농업위 · 환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농업정책 개혁과 환경성과의 관계, 33개 분야별 농업환경지표개발, 각국의 농업정책 목록작성,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큰

를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 수입국 그룹들과 공조하여, 농업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이를 반영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2004년 6월 제19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회의에서 33개의 농업환경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에 합의하였다. 33개의 지표는 토양침식, 토양유기탄소량, 수질(질소, 인,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양분균형, 농약사용, 토양관리, 물 사용, 생태계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농업위원회(COAG)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연차보고서에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환경지표는 농업환경정책 목록(inventory), PSE, PEM 등과 함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에는 농업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positive)을 나타내는 토지생태계기능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보유능력 지표(WRC) 등 토지생태계기능 지표가 포함된 것은 향후 다원적 기능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토지생태계기능 지표 등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핵심지표로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관련 연구 및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995년 출범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써,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년에 2차례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6월 회의에서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수출국들)들은 유기농산물도 환경상품에 포함시켜 저관세 및 무관세품목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비농산물협상(NAMA)과 연계하여 상세 협상원칙(modality)을 수립하고자 하나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들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의제인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의 표제하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의 문제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경관보존, 홍수조절등의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므로 보조금의 감소는 환경에 부정적일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차기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등을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위기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 방지를 주요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바이오안전성의 정서”가 2000년 채택되고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

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의정서 가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시행법률」이 제정하였고 2002년부터 국내이행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산자부의 주관으로 관계부처회의를 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동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다만 급격한 수입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되고 있어 세부사항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의정서 논의 중 주목할 것은 식품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의 수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LMO-FFP)에 대한 세부 표시 사항(identification requirement) 등 관련 이슈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등 수출국 그룹과 EU, 일본 등 수입국 그룹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수입국은 수입되는 모든 LMO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은 자세한 정보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5월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LMO-FFP 관련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수출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EU(네델란드 등), 개도국(African Group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관련 논의는 제3차 당사국총회('06. 3. 브라질)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최봉순)

##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WTO/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WTO/SPS협정)”은 SPS조치(식품 위생조치, 동·식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 조치)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의거 설치된 WTO/SPS위원회는 매년 3~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4년에도 3차례의 회의(2004.3-29차 회의, 2004.6-30차 회의, 2004.10-3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SPS협정 발효이후 농축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은 SPS조치와 관련하여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행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심지어 WTO/SPS협정을 포함하여 WTO의 기본 골격 중 하나를 이루고 있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항”의 이행방안에 대하여도 WTO후속협상(DDA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의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양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개도국 특별우대에 관한 한 선진국은 수입국의 입장을, 개도국은 수출국의 입장을 보이면서 실리를 얻으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G/SPS/19, 2001.10.26)」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거 교역경험이 있는 품목에 대한 동등성 인정추진시 “수입국은 가능한 한 예상소요시간을 수출국에 통지”토록하기로 결정하고, 개도국의 특별우대 요청을 받은 경우 신규 SPS조치 도입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SPS위원회는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답변 등 현안 해결의 장을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생 및 검역관련 규정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이행 문제 등 논의시 SPS협정 대상물품(농산물, 식품 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우리나라의 SPS조치와 관련한 무역현안도 일부 제기되었는데 복지부 소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수수료 인상 및 검사빈도 강

화조치) 및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미국 등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조치의 배경 및 타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한편, 양자간 기술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04년 초부터 우리나라의 규제병인 *Septoria citri*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4월 28일 선적분(한국 도착 기준으로는 5월 12일)부터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양측 전문기관은 수차례의 의견교환 및 협의를 통해 오염방지 방안 등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상당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국측은 제31차 SPS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공식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Septoria citri* 검출과 관련하여 미측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동 병원체의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나 미측이 제시한 관리방안이 우리측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국 식물 검역전문가회의(11.4일)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계획임을 밝히고, 미측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병해충 검출방법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조치를 제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 사안은 양측 전문기관간에 추가적인 기술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한편, SPS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역현안을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은 우리나라의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비공식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 장벽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04년에도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하였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 제2편 2004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117
- 제2장 2004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 166

##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제1절 농업·농촌 종합대책

우리 농업·농촌은 19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영세한 농업구조,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농업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992~2002년 기간 중 82조원(지방비 10, 자부담 10 포함)을 투융자하여 농업 SOC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간의 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SOC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 농업·농촌이 FTA, DDA협상, 쌀 협상 등에 따른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2013년 까지의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농업·농촌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1년 이후 준비해 온 새로운 비전 작업과 20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바탕으로 2003.5 농정기획단, 2003.8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하고, 9개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조정(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2003. 11. 11, 농업인의 날)하였다.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



회,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새로운 종합대책에 포함된 농정 9대 혁신과제로는

첫째,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쌀산업은 2010년까지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원예 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축산업은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셋째,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고, 재해나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농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하며,

다섯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영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지원방식 등을 정비하고,

여섯째,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일곱째, 품질 고급화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세척·선별·포장·가공 등 고품질 상품화 시설을 확충하며, IT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농식품 수출을 50억불 달성(2013년 기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여덟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아

홉째, 농촌은 어메니티를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규제 완화 등으로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은 그간의 농업·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및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총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간(2004~2013) 119조원 수준이며, 전반기 5년간의 투융자 소요 51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lt;표 2-1-1&gt;

## 총투융자 규모

(단위 : 십억원, %)

구 분	합 계	2004~2008		2009~2013	
			%		%
○ 보 조	89,237	37,112	73.5	52,126	75.8
○ 용 자	30,053	13,402	26.5	16,651	24.2
<b>합 계</b>	<b>119,290</b>	<b>50,514</b>	<b>100.0</b>	<b>68,777</b>	<b>100.0</b>
지 방 비	16,632	6,599		10,033	
자 부 담	6,218	3,254		2,964	

\* 자료 : 농림부 구조정책과

&lt;표 2-1-2&gt;

## 분야별 투융자 규모

(단위 : 십억원, %)

분 야 별	2003		2008		2013	
		%		%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23	24.8	3,114	28.5	4,792	32.2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4	20.7	2,852	26.2	4,467	30.0
※ 직접지불 사업	722	9.4	2,472	22.6	3,411	22.9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4	8.6	1,573	14.4	2,556	17.2
○ 농산물 유통혁신	518	6.7	1,018	9.3	952	6.4
○ 산림자원 육성	503	6.5	658	6.0	809	5.4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4	32.6	1,705	15.7	1,316	8.8
<b>합 계</b>	<b>7,705</b>	<b>100.0</b>	<b>10,920</b>	<b>100.0</b>	<b>14,891</b>	<b>100.0</b>

\* 자료 : 농림부 구조정책과

이러한 종합대책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세부추진계획을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마련하였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장기 농정방향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기본계획을 현장에서 구체화해 나감에 있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다.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이 직접 농업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참여농정, 현장농정의 원칙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농업인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세부추진계획중 품목별 대책은 쌀전업농중앙회, 한우협회 등 28개 주요 품목단체가 주관이 되어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사업은 농지제도 자문단, 지역농업 활성화 대책반 등 17개 전문가 위원회 및 관련 대책반의 활동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한우협회는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공청회를 3회 개최하였고, 원예분야는 농협중앙회 주관의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관련기관의 의견은 전문가 워크숍(10월15일~16일)을 통한 종합토론을 거쳐서 정책방향 및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의견수렴결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의 대상을 도서지역까지 확대 추진
- 둘째,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2009년으로 2년 연기하여 시행여건 조성
- 셋째, 유리온실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에너지절감시설 구축을 지원
- 넷째, 지역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시설원예 수출거점 육성 지원
- 다섯째,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양계산물 등으로 확대 추진
- 여섯째, 국가재보험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계획을 수정, 보완
- 일곱째,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제로 개편하여 단가를 인상
- 여덟째, 산지유통센터 평가를 2005년부터 컨설팅 업체가 평가하는 체제

로 개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및 구조조정 추진

이러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이 2013년까지 원활히 추진될 경우 농업은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되고, 농업인은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상생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종합대책 조정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3년 마다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의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 제2절 2004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2004년도 농림예산은 대외적으로는 FTA, DDA, 쌀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추세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불안정, 잦은 재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지역 복지여건 낙후 등 어려운 상황의 인식하에 농정방향과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04년도에는 국가전체 세출 수요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워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도 FTA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4년도 농림부문 총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11.0% 증가한 9조 9,49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개방화시대의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춰 직불지불제, 농어촌 교육·의료·복지, 농촌지역개발, FTA 보완대책 및 부채경감대책 분야 등의 지원을 2003년 1조 8,280억원에서 2004년 2조 6,605억원으로 45.5% 확대하고, 기반투자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농업생산기반조성·농업기계화 사업과 가격지지 성격의 양곡수매 지원을 2003년 2조 9,749억원에서 2조 3,878억원으로

19.7% 축소하였다.

또한 농특세사업을 개편하여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의료·복지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타회계에 편성되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공단지 조성 등 관련사업을 농특세 사업으로 이관편성하고, 기존 농특세 사업중 농업생산기반 조성분야는 단계적으로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이관을 추진하였다.

농림부문 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 및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FTA·DDA 농업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의 핵심부문이라고 할수 있는 직불제 관련예산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이양직불금제도를 매월 분할지급방식으로 대폭 개편하여 63~69세의 고령농이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할 경우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70세까지(최장 8년) 매월 ha당 24만 1천원씩 지급하기위해 14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지급상한 면적을 3ha에서 4ha로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프로그램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58억원을 책정되었다.

아울러 농가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현재 주산지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도·단감·복숭아의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13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입는 재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의 지원단가를 인상(22천원→26)하여 소요예산 98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등을 포함하여 직불제 관련예산(FTA예비비포함)을 전년보다 19.2% 늘어난 7,968억원으로 확충되었다.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인의 교육·의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업인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2%에

서 30%로 확대(신규지원 537억원)하고 255억원을 투자하여 1ha미만 영세 농어가의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신규로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득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난해(146억원)보다 많은 302억원을, 녹색체험마을활동 지원에 40억원을 반영하고, 3~5개 마을단위로 특색있게 개발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계상되었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2004 예산에는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유통 활성화 및 작목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1,600억원을 FTA이행지원기금에 출연하였다. 한편, 농가의 부채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기위해 기존에 지원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1.5%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며,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상설화하는 등 부채관련 대책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약3%의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 예산 3,114억원을 계상하였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48억원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인증·유전자변형(GM) 및 농산물안전성조사비로 85억원을 확대되었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범도입하여 4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보상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방역시설, 장비확대에 따른 지원을 늘려 319억원을 지원하였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상사업은 계속지구 마무리를 위한 필수소요 위주로 반영하고 신규착수를 최소화하되,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일반경지정리는 2004년 마무리 소요만 반영하고 신규착수는 중단하는 한편, 대규모용수개발(236억원→154억원), 중규모용수개발(3,663억원→3,187억원) 등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신규착수를 억제하고 지원을 축소책정되었다.

<표 2-1-3> 2004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 (B-A)	%
일 반 지 출	I. 주 요 사 업 비 (FTA대책예비비 포함)	73,147 (73,147)	73,441 (77,380)	294 (4,233)	0.4 (5.8)
	1. 생 산 기 반 조 성	19,672	15,714	△3,958	△20.1
	2. 생 산 및 유 통 개 선 (FTA대책예비비 포함)	5,297 (5,297)	5,313 (5,349)	16 (52)	0.3 (1.0)
	3. 기 술 개 발 및 인 력 육 성	5,540	5,783	243	4.4
	4. 부 담 경 감 및 소 득 보 전 (FTA대책예비비 포함)	16,802 (16,802)	22,509 (26,412)	5,707 (9,610)	34.0 (57.2)
	5. 양 곡 수 급 안 정	15,936	14,705	△1,231	△7.7
	6. 산 립	6,691	7,134	443	6.6
	7. 채 무 상 환	3,209	2,283	△926	△28.9
	II. 기 본 경 비	3,704	3,948	244	6.6
		일 반 지 출 계 (FTA대책예비비 포함)	76,851 (76,851)	77,389 (81,328)	538 (4,477)
	기 금 전 출 금 (FTA대책예비비 포함)	12,801 (12,801)	16,568 (18,168)	3,767 (5,367)	29.4 (41.9)
	순 계 (FTA대책예비비 포함)	89,652 (89,652)	93,957 (99,496)	4,305 (9,844)	4.8 (11.0)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고희수)

## 2. 농특세 연장 추진

UR협상으로 인한 농·어업부문의 피해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0년간 15조원을 농어촌에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DDA협상, FTA 확산으로 농업·농촌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소 미흡했던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투자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공감대가 전국민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 2004년도 만료되는 농특세를 2014년까지 연장 조치하여 향후 10년간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표 2-1-4> 2005~2014년 농특세 사업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소 요	%	비 고
합 계		200,100	100	
소 계		93,151	46.6	
농어업인복지증진사업	○농어업인 연금	11,02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1,470		
	○농어촌의료서비스	4,9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13,000		
	○농업인 재해공제 및 보험	11,762		
	○영유아자녀 양육비	2,595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어가도우미	1,428		
	○농어촌복지여건개선 등	26,920		· 위원회 인정사업 : 5,000
소 계		30,929	15.4	
농어촌교육사업	○농어촌학생급식비 및 학자금	4,522		
	○농어촌교육여건개선	24,000		· 위원회 인정사업 : 24,000
	○농어업인 직업훈련	140		
	○농림수산계학교지원	1,367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900		
소 계		76,020	38.0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50,340		
	○녹색농촌체험활동	840		
	○농공단지조성	4,100		
	○조건불리 직접지원	8,640		
	○어촌종합개발 및 국고여객선건조	3,670		
	○산촌종합개발	2,733		
	○지역개발관련 인프라구축 등	5,697		· 위원회 인정사업 : 5,000



### 제3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 농업·농촌 투융자현황

2004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첫해로서 '04년 투융자규모를 8조 5,967억원(국고예산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8조 2,901억원으로 계획 대비 일부 미달(96.4%) 집행되었다.

<표 2-1-5> 2004년도 농업·농촌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계획(예산)(A)	실 적(B)	B-A	비율(B/A)
국 고	85,967	82,901	△ 3,066	96.4
(보 조)	(60,399)	(59,036)	(△ 1,363)	(97.7)
(융 자)	(25,568)	(23,865)	(△ 1,703)	(93.3)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사유는 i)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감소 ii)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일부 직불성사업의 지급사유 미발생 iii)FTA기금사업의 경우는 사업준비 기간 소요 및 투융자 여건 미성숙에 따라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사업이 지연 iv)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은 소요재원 과다 예측으로 상당액의 불용액 발생 v)기타 많은 개별사업에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19조 투융자 사업은 3년단위로 종합평가(중간점검)를 실시하여 연도별 사업별 투융자 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투융자실적 및 계획대비 실적미달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lt;표 2-1-6&gt; 2004년도 국고투용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분야(기능)별	계획(예산) (A)	실 적 (B)	B-A	비 율 (B/A)
합 계	85,967	82,901	△3,066	96.4
□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24,127	24,085	△42	99.8
○ 영농규모화 촉진	3,233	3,233	-	100.0
○ 친환경농업 지원	931	882	△49	94.7
○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 제고	1,026	834	△192	81.3
○ 전문농업인 육성	1,051	1,046	△1	99.9
○ 농림업 기술개발 보급	3,363	3,287	△76	97.7
○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3,838	3,469	△369	90.4
○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10,289	10,934	645	106.3
○ 지역농업 육성지원	400	400	-	100.0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9,998	18,072	△1,926	90.4
○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19,642	17,716	△1,926	90.2
○ 농외소득 증대	356	356	-	100.0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8,905	8,491	△414	95.4
○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1,432	1,187	△245	82.9
○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1,073	909	△164	84.7
○ 농촌지역 개발	6,400	6,395	△5	99.9
□ 농산물 유통혁신	6,536	6,048	△488	92.5
□ 산림자원 육성	6,010	5,825	△185	96.9
□ 농업생산기반 정비	20,391	20,380	△11	99.9
○ 농업생산기반 정비	18,331	18,331	-	100.0
○ 농업기계화 지원	2,060	2,049	△11	99.5

<표 2-1-7> 2004년도 계획대비 실적미달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계획 (예산) (A)	'04실적 (B)	B-A	사업명	계획 (예산) (A)	'04실적 (B)	B-A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175	17	△158	원유수급안정사업	578	305	△273
마늘경쟁력제고	121	56	△65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000	1,846	△154
FTA기금사업	885	624	△261	국민건강보험료지원	537	340	△197
축산업등록지원	130	12	△118	농업인영유아양육비	302	146	△156
쌀소득보전직불	955	0	△955	축산물생산유통지원	1,632	1,405	△22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24	43	△81	축산물가공시설운영	358	159	△199

(재정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윤광일)

## 2. 농업 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 자체평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편” 등 6개 과제를 선정,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8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특히 소비자단체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8월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2004년도에는 시행계획과 자체평가결과 심의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해당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각각 3회씩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반  
 기별로 점검하였다. 자체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 총 30개가 제시되어 그 중  
 7개는 조치완료, 23개는 정상추진 함으로써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평가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병하)

#### 나.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자  
 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를 평  
 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지역특화  
 사업 예산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지역특화사  
 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는 2005  
 년부터 별도로 포상금(시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평가는 그 동안 평가사항 및 항목, 배점 등이 농  
 정 여건에 맞게 매년 변화해 오면서 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관리하는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정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였으며, 상향식 농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므로써 궁극적  
 으로 농정업무 투자효율성 제고와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2004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20개 주  
 요 예산사업의 집행실적, 재해대책시설물 등 투자시설 사후관리, 농업분야에  
 대한 자체 지방비 투입실적, 친환경농업·유통대책·수출촉진·농업정보  
 화·가축방역·고품질쌀 생산대책·농촌투자유치 및 농촌관광·농촌교육 및  
 복지여건 개선·농정홍보 추진 등 주요 중점시책 추진노력, 차별화된 시책  
 및 지역농정 현안 대처 노력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였다. 평가의 신뢰  
 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면평가와 함께 시도간에 관련공무원들이  
 상호교차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간의 업무추진방식을 상호 벤치

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5년도 농정업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시기 등을 감안하여 평가시기를 조정(2~3월→3~4월)하고 농정의 비중이 낮은 광역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보다는 사업부서의 평가기능을 강화하였다. 농촌교육 및 복지여건 신규 지표 개발, 농산물 유통대책에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조사 내용을 평가항목에 신규로 추가하고, 투자시설 사후관리중 유리온실 운영실태 및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실태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농정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 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농정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60백만원의 시상금과 정부 포상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119조 투융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농정 평가 항목과 기준 등은 변화하는 농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평가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장의)

### 3.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 및 투융자 방식 개선

가.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고 1·2단계에 걸쳐 국고 69조원('92~'03)을 투융자하였으나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일부 농가 부실사례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그간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해 투융자가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1·2단계 투융자 계획에 대한 내외부 평가 및 농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4부터 시작되는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효율성 및 농정에 대한 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을 '04.4월에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사업의 도입이나 사업 결정단계에서는 전문가위원회 구성, 지자체 및 농업인 의견수렴, 시범사업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둘째,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PCRM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융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셋째, 사업 집행 이후에는 매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원배분은 확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적격자 선정 등으로 투융자가 부실화되거나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선심사·후지원’ 원칙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경영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 경쟁력있는 농업 경영체에 집중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 후에는 금융기관·전문가 등이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상 애로를 조기에 진단·조치토록 하였다.

(재정평가담당관실 사무관 윤광일)

#### 나.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및 그간 추진되어온 평가체계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근거규정인 “농림업무평가규정”(농림부훈령)을 전면개정 하였다.

이는 그동안 심사평가, 정기평가, 경영체평가, 집중평가 등으로 세분화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성과평가와 집중평가로 단순화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등에 평가결과의 환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성과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평가부서 총괄평가로 이루어지며 i)사업부서 자체평가는 실·국에서 스스로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되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평가부서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ii) 평가부서(재정평가담당관실)는 실국의 자체평가를 기초로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부문별 투융자 우선순위, 단위사업의 통폐합 필요성 및 사업별 예산성방향을 제시한다. 사업별로 4개 등급(S, A, B, C)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 (2) 집중평가

주요정책,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정책, 문제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부서에서 내부 집중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외부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한다.

### (3) 평가결과의 환류

예산측면에서는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삭감”, “통합” “폐지(즉시폐지, 단계적폐지)” 등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개인성과 측면에서는 근무평정 및 성과급지급에 반영토록하고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도 활용토록 한다(단계적 제도 개선 반영사항).

### (4)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개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내부·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결과 최종심의기구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투융자관리계획서, 성과평가 및 외부집중평가, 국무조정실 기관평가를 최종심의 한다.

(재정평가담당관실 사무관 윤광일)

## 다.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보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소관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과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림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등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005년도 농림사업 실시규정 주요 골자

(가)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형화·공개화하여 투명성 확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후관리 절차와 원칙을 제시하고, 대상자 선정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자조역량 향상  
선택할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농정위원회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하였다.

(다)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기록하여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장부 기록자와 경영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라) 사업부실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 공개, 종합자금 지원 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시설 관리책임자 지정, 농림부·농진청의 사업부서 내 관리카드 비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보완 내용

(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청장년 위주의 규모화된 영농 실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경우 60세이하, 일반 농업인의 경우 55세이하로 제한하고 매매 및 임대 대상 농지 지원규모를 각각 10ha에서 20ha로, 20ha에서 30ha로 확대하였다. 임대만료 농지 및 간척농지도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 농지로 추가하였다. 영농기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100만원이상에서 70만원이상 농기계로 확대하고,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까지 포함하였다.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국고 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증가시켜 추가되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나) 전문마케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방안 모색

공동마케팅 조직을 포장재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물류비용 축소를 위해 파렛타이징화하여 출하한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해서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준규격 포장화율 향상을 위하여 표준규격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의 지원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였다.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촉진을 위해 농·축협조합의 지원한도를 자기자본의 3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경영관련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다) 농업인의 농림사업 경영의 자율성·책임성 증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국고융자지원에서 예산지원 없는 민간유치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수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종합자금의 대상범위를,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농기계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육·채종시설, 장비 구입 및 신제품 육종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확대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농업인의 자부담금 비율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였다. 종합자금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04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종합자금 규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자금 종류별 지원분야를 구분·명확히하는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로 대체하게 하는 등 경영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라) 환경친화적 농업의 지속적 확대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및 가축음용수정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양돈, 양계단지에만 설치되던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을 종돈, 종계장 및 나정착촌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표준사업비단가를 적용하였고, 친환경 직불금지급을 확대하여 저농약 신규인증자에 대해서도 지급되 지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논·밭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시기를 연중 수시로 확대하였다.

## (마) 축산물 안정성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 제고

사료공장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 등록사업체를 사료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료로 인한 질병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등 광우병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농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축공제율 산정의 적정성 검토·승인 기관을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로 변경하고, 축산물가공업체 지원대상을 돼지고기에서 전체 축산물 가공업체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 선정 경영체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축산물 브랜드화를 유도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했다.

(재정평가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은정)

## 제4절 농림행정 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 농림행정 규제완화

1998~2003(6년)간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3.1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4.18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 규제수를 대폭 감축하고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여 당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림분야 행정규제는 지난 5년간 682개 규제 중 56.0%인 386개의 규제를 폐지하고, 국민적 수요에 부응한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축산·가축위생 강화 등을 위한 201건의 규제를 신설하여 2004년 말 현재 507개의 규제를 존치·운영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상 위생관리 등 공중위생과 보전에 관한 규제와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기타 농약생산·안전관리, 유해식품의 국내유입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및 식량농자재 분야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분야 등의 규제가 대부분으로서,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와는 직접 관련성은 적은 실정이다.

2004년도에 농림부는 농림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농림사업 실시 여건 및 일반국민의 농업투자 확대 여건조성 등을 위한 규제정비에 주력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축산분야에서와 같이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의 수요증대로 규제강화가 불가피한 추세 하에서도 일방적인 규제강화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지도 및 시정기회 부여 등의 규제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2004년도 규제정비 주요추진 내용을 보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완화하여 도시자본의 유입을 확대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축산물가공업자가 받아야하는 의무검사항목을 축소(12~16 → 3~10개)하고 도축장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조리·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축산물 가공처리 및 유통과정상의 규제를 정비하였고, 인삼류 검사 및 종자검사 절차간소화 등 농정·농산·축산·유통분야 등에서의 행정규제를 적극 정비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고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기혁)

## 2. 농정조직의 개편

### 가. 주요 추진내용

#### (1) 실무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이 집행업무에서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정책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실무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6급 정원 16인(정원의 10%)을 감축하고 5급 정원 16인을 확대하였으며, 소속기관은 7급 정원 24인(정원의 5%, 농관원 16·수과원 4·식검 4인)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해외 악성가축질병과 수입식물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15인을 증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 (5급 1, 6급 4, 7급 5), 국립식물검역소 5 (6급 1, 7급 2, 8급 2)] 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8275호, 2004. 2. 9), 농림부령 제1457호, 2004. 2. 11)>

#### (2)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단행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시행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523호, 2004. 8. 1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81호, 2004. 8. 10)>

첫째, 농업인의 교육·의료·복지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원 확충을 전담할 농촌사회과를 신설하였다.

둘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局)·과(課)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였다.

농업정책국, 식량생산국 및 농촌개발국을 각각 농업구조정책국, 식량정책국 및 농촌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농업정책과·농촌인력과·개발정책과 및 농촌용수과를 구조정책과·경영인력과·농촌정책과 및 기반정비과로 각각 개편하여 농업구조 개선, 농업경영체 지원, 복지·농촌지역개발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농업정보통계관실을 투융자평가통계관실로, 투자심사담당관실을 재정평가담당관실으로 개편하여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심사·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하였다.

넷째, 식량정책국장, 축산국장 및 국립종자관리소장 등 주요 직위에 농정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동 직위의 임용 가능 직렬을 농업연구관·축산연구관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는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3)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05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동·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 검역기능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 분야를 중심으로 2005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리인원과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전문인력 보강 등
- 국립식물검역소의 LMO(유전자변형생물체)국경감시 검역인력, 공·항만의 검역인력 보강 및 해외병해충연구소 신설·운영인력 등
- 종자관리소의 품종보호심사관 및 종자관리 정보화 전문인력, 재배시험인력 보강 등

### 나. 농림부 「진단·변화관리」 추진

농림부의 조직, 기능, 인력, 업무절차, 문화행태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조직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변화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농림부+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능력협회·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으로 '0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진단·변화관리팀(농정혁신2030팀), 실무추진단(단장:혁신인사기획관) 및 3개 실무지원팀(전문가지원팀, 본부지원팀, 외부·관서지원팀)을 두었으며, 진단변화관리팀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는 '04년 6월 착수한 이래 환

경분석 및 전략적 방향설계, 조직진단과 재설계, 프로세스 진단 및 재설계, 변화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프로젝트 정의 : 사전조사, 프로젝트 플랜 수립
- 환경분석 및 전략적 방향설계 : 외부환경분석, 내부환경분석, 문화행태분석, 비전·미션·전략방향도출
- 조직진단 및 재설계 : 기능진단 및 재설계, 인력진단, 조직진단 및 재설계
- 프로세스 진단 및 재설계 : 핵심프로세스 선정, 프로세스 재설계, 신프로세스 구현
- 변화관리 : 변화동기부여, 미션 및 비전공유, 변화추진 마스터플랜수립, 성공사례 창출, 지속체계 구축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 추진결과 조직혁신을 위한 총 35개의 개선 대상과제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동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문화행태 분야(18개) : 혁신추진체계 구축, 탄력근무, 혁신평가 및 보상제도 마련
- 프로세스 분야(4개) : 농지전용 심의·회신업무 개선, 산지유통사업절차 간소화 등
- 기능·조직·인력분야(13개) : 기능폐지, 기능조정, 부명칭 개정, 조직신설, 인력증원 등

(혁신인사담당관실 서기관 강형석)

###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보다 간소하게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중 모두 3개의 농림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저가농산물 수입증가 및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농산물 유통시장 환경변화와 저금리시대의 도래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동 조직의 지배구조, 경영체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경영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전담하고 회장은 사업경영 부담에서 벗어나 대외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무이사를 새로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전담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사제도는 폐지하고 은행법을 준용하여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준법감시인을 설치하였으며,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표이사 소관 사업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감독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1조합 1표 방식의 중앙회 총회의결권은 조합별로 조합원 수에 큰 편차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조합별로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을 두었으며, 일선조합의 경영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상임이사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를 의무 수감토록 하였다. 아울러, 상임조합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경영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공포 2004.12.31, 시행 2005. 7. 1)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

여 수산부문의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동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관측사업 및 수산물의 하한가격 예시제를 도입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여 발생한 수산부문의 재고재산과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를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 운용중인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공포 : 2004.12.31, 시행 : 2004.12.31)

(행정법무담당관실 서기관 황인용)

## 제5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 1.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가.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과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농협의 사업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붕괴되고 시장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쟁시장은 소규모 지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 이후 각국 정부는 농업보호정책 감축과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은 양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 추세는 단순 물량 위주의 사업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최근 선진국 협동조합들은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혁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 차원에서 시장지향적 사업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직구조를 이러한 사업전략과 합치되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협동조합은 어떠한가? 농협은 과거 정부의 보호아래 농업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가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다, 생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던 시기였으므로 사업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운영방식의 개선없이 영세한 영농규모 등 열악한 농업여건 하에서의 협동조합이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조합경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의한 조합을 해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경우처럼 영세한 읍면단위의 시스템 하에서 농협에 거는 기대와 실제 역할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 되고,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주체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주요추진사항

### (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협개혁의 기반조성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04.12.31, 공포)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전무이사)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유지토록 하였고, 대표이사는 집행간부의 인사권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을 촉진토록 하였다.

둘째, 이사회 내에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중앙회 전체 차원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소이사회 결정을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셋째,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회계 및 유통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였다.

넷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에서 자본금 확충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일선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경영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되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연속 12년)로 제한하되 중임은 허용하였다.

둘째,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의 여파가 조합경영에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셋째, 조합설립 남발, 선거시 조합원 이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권 제한 및 중앙회 회원가입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였으나 소규모 조합의 권익대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이나 감사 선거 시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다섯째,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연합자회사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20%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까지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가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목조합연합회에 지역조합의 준회원 가입도 허용하였다.

여섯째, 조합의 결산 잉여금 배당시 출자에 비례한 배당보다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도록 개선하고,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출자 발행을 허용하였다.

## (2)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12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를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3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조합 중 합병이 불가능한 2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 후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인근 우량조합으로 계약이전하였고,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도 58개 조합에 총 3,366억원(출연 561억원, 대출 2,80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38개 조합에 964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17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244억원과 대출 1,8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317억원을 출연하였다. 이들 조합에 대출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 중에 6차례에 걸쳐 2,805억원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4년도에도 6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 중에 있고, 33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으며, 부실이 과다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2개 조합과 예금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한 2개 조합이 파산으로 퇴출되었다.

2004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전체 조합중 전년도 26개이던 적자조합이 27개로 1개 조합 늘어나고 적자규모도 390억원으로 전년도 294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당기순이익은 7,59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50억원이 증가하였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27조 2,0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07조 6,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74조 5,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성장하였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배종혁, 박순연)

## 2. 농업기반공사

### 가. 공사의 혁신 추진

2004년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발표되자 정부대행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온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신규조성이 축소되고,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개량·보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촌복지·지역개발 분야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공사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용수관리 등 고유기능의 내실화와 더불어 농촌지역종합개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수행기능을 보강하고, 경영체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3월 「경영혁신전략팀」을 설치하여 새로운 경영비전의 설정과 실행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하고, 2004년 4월 외부전문기관에 “기능혁신 및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혁신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대내·외 인사가 참여한 기능혁신방안 워크숍, 경영혁신대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단행하였다.

공사가 추진한 주요 경영혁신의 기본방향을 보면

첫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종합개발의 활성화,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수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일류 공기업”을 공사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본사 조직 슬림화와 일선조직의 보강으로 농업인 서비스 제고와 지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별 세분화된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상위직급 정원을 감축하여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셋째,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본사의 인사·조직·예산 권한을 도본부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지방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전략팀」을 상설 조직화하여 상시 경영혁신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 나. 주요 혁신내용

### (1) 조직 및 인사혁신

정부의 농정방향 전환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맞는 경영체질로 전환하기 위해 “부·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 “1,702개 부·과 ⇒ 364개 팀”으로 개편하여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하였으며, 본사인력의 23%인 206명을 감축하여 지방조직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1급직의 8%인 10명을 감축하여 실무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또한, 관리분야 상임이사 1명을 축소하고 공기업 최초로 사업분야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사 직제순위도 사업분야 이사를 선순위로 조정하여 사업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신규사업을 추진할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의 채용에 의한 인사혁신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개발과 도농교류업무를 전담

할 이사에 대해 외부공모제를 시행하고, 기존의 연공서열 관행을 타파하여 의욕있는 인재발굴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도본부장 및 사업단장”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제를 실시하여 공모대상 13명중 10명을 공모결과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혁신을 단행하였으며, 전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의 자발적인 태도변화와 동기부여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 (2) 기능 및 경영혁신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개량·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과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등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 시행할 “농촌종합계획처”와 “농지은행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기능전환을 도모하여 새로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지방조직의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제고코자 자체 경영진단 모델을 정립하고 지방조직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영혁신의 첨병으로서 CA(Change Agent, 변화관리자) 317명을 육성하여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핵심인력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독창적인 부조리 관리시스템인 “청렴-HACCP”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중심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와의 윤리경영 시범협약 체결, 내부공익센터의 운영 등 부조리 및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공사상(Clean-Karico)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 경영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상을 정립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친절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율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사는 213개 공기업중 경영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5년 5월 3일 “공기업·산하기관 혁신 CEO 토론회”시 모범사례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인재경영대상, 품질관리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대외로부터 자율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 3.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업기관으로 1998년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 등 4대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공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전진기지로서 농업분야 전문 전시·컨벤션센터인 aT센터를 개장하여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aT센터를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및 국제교류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본부장제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농산물 품평회, 직거래장터, 국제 박람회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9개국 65개의 대형유통마켓 3,489매장에서 입점 판촉 활동을 추진하였고, 박람회는 24회 참가하여 296백만불의 수출계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산현장의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수출컨설팅과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유통공사의 수출지원 활동 강화를 통해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2천5백만불이 상승한 20억 8천 5백만불의 농산물 수출을 이루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통공사는 이러한 외적 변화와 함께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기능혁신방안 마련부터 조직변경까지 경영 전부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통해 비전을 재정립하고, 전면 팀제로 전환하여 역동적인 조

직체계로 개편하였으며, MMA쌀 수입관리 및 수입정보조사·분석 등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한 신규기능 수행체제를 구축하였다.

주니어·시니어보드 운영, 분야별 핵심인재 선정을 통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등 내부경쟁체제를 가속화 하는 한편, aT 사업본부장, 화훼사업본부장 등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수출지원 전문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최초로 외부 전문경영인을 수출이사로 영입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경영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직위별 결재기준을 재정립하여 권한의 하부위임을 확대하였고, 정보화 부문에서는 경영관리부문과 사업부문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구축에 이어 2차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식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제안제도와 평가보상체제를 연계하고 KMS 시스템 환경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식경영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이사회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임 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공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등 활발한 경영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사적 경영혁신운동과 연계하여 CS 붐을 조성하였고, 고객제안제도 활성화 및 고객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신속·정확한 대 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정책자금 융자실행제도 개선 및 수출자금 지원신청서류 간소화, 비축물자 방출제도개선 등 제도개선과 고객접점서비스의 온라인화로 고객 편의 제고를 도모하였다.

유통공사는 이러한 내부운영시스템 개선 및 지속적인 혁신추진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공사 발전 방향을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농식품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홍보 사업을 공사의 핵심기능으로 육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김원일)



## 4. 한국마사회

### 가. 급격한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에게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마사 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증대된 관심과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요컨대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이라는 미션을 ① 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대외 이미지 혁신 ② 경마팬 중심으로의 시설운영, 공원화 기능 및 경마팬 점점 근무자의 경마팬 First 마인드 제고로 경마팬 제일주의 실현 ③ 지방경마장 개설 및 신규 지점 확충을 통한 경마의 전국화, 경마팬 접근방법 확대를 통한 대중화 도모, ④ 국산마 생산·육성기반 강화를 통한 국산마 질 향상과 우수 외산마 도입을 통한 경주 질 향상 도모,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경마의 국제화 ⑤ 조직·인력 역량강화 및 진취적 조직문화 창출로 업무효율과 생산성 제고 등 내부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들은 아래와 같다.

###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국민 레저경향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경제 침체로 인한 경마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및 경륜·경정·카지노 등 경쟁산업의 도전이라는 보다 경쟁적이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한국마사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경영 부문, 주요사업 부문 및 경영관리 부문으로 세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종합경영 부문

경마산업의 규모 확대에 비례하여 사회적 순기능 강화 및 역기능 축소를 바라는 요구증대에 부응하고자 마사회의 사회적 역할 제고 노력이 필요하였고, 특히 경마 독점시대의 종료 및 경쟁산업의 확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대내외 환경의 변화, 경영철학 및 국정이념 등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을 새롭게 설정·제시하여 이를 공유하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회장을 공개 모집을 통해 능력있는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하고 장관과의 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 등 5개 주요 직위를 대상으로 사내 직위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직의 활력을 고취하였고, 정기적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인사 및 복지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원의 역량 결집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유관단체 임원과의 상시 대화기구를 정례화하고, 경마공동체 의식 확대를 위한 상호교류 및 화합행사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간의 원활한 조정을 통한 안정적 경마시행의 기틀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의 윤리라운드를 통한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 도입 움직임과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그리고 경마시행제로서 마사회의 윤리경영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증대 및 경마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 확산에 따라 윤리경영의 도입 및 그 실천·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 내부 윤리규범을 제정 및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준수실태의 점검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전자입찰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경쟁절차 강화 및 청렴계약제 지속 시행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비상임이사의 수 확대 및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전문지식 제공으로 회사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경영공시의 내실화 및 자발적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기획예산처 예규에 의해 경영혁신 추진지침 적용기관으로 선정됨을 계기로, 경영위기 타계를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위기 상황과 부합하도록 매출증대·비용절감·업무효율성·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내부 혁신대회, 혁신제안의 발굴 및 시행 등 내부 혁신마인드 확산에도 노력하였다.

경기침체 및 경쟁업종의 급성장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및 이용 편의성 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고객 제안시스템 운영 등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적(연1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맞춰 구체적 실천을 위한 서비스 현장 개정과 서비스 이행표준의 세부 기준별 이행을 통해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2) 주요사업 부문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속에서도 경마의 질적 수준 향상, 고객서비스 제고, 사회 환원 강화 등 사회적 역할 제고를 중장기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KRA 이미지 혁신 프로젝트(고객접점 서비스 구현, 식당 운영개선, 전략적 기부금 제도, KRA Angels 봉사단, 사랑의 후원제도, CI 개발 및 기업 이미지 광고 시행 등) 추진, 다양한 배팅수단(모바일, 무인발매기) 도입, 新발매전산시스템 구축, 지식경영체계(KMS)를 도입 추진하였고 '04년 회계연도 중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에 입각한 사업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수 마필생산·육성을 위한 목장사업 추진, 사회복지 증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여 경마산업의 토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기업의 공익기여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 혹은 비용지출에서 사회

적 투자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기업이미지 개선 및 사회적 존재가치의 부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더욱이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과 농림부 산하기관으로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특별적립금 운용 개선과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4년 한해 1,409억(축산발전기금 : 1,127억원, 농어촌 복지증진 등 : 282억원)에 이르는 축산발전기금의 사전 심의 및 사후 관리 강화, 집행의 적시성 및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및 기부금 집행에 경마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집행의 효율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각종 교류경주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외국 경마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선진 외국 경마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교류 체계 구축과 경마 각 분야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과, 한국경마는 2004년 6월 PartⅢ국가로 공인받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아시아경마회의(ARC)의 성공적 개최 통해 한국 경마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3) 경영관리 부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 건설공사와 이미지혁신추진사업 종료를 계기로 고효율 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정원을 산정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 위임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및 조정, 규제의 일체 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면평가 확대 시행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여성 고용평 등 프로그램 시행하였고, 장애인·이공계 출신의 채용·인사상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내부업무 혁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의 지속적 확대 노력에 따라 KRA 포털 지식관리시스템(e-KMS ; 전자결재시스템 패키지 업그레이드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관리자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EIS시스템)를 구

축하였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으로 선정과 함께, 경영 위기 타계를 위한 내부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장관과 회장 간 경영계약 및 회장과 본부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운영하고, 내부평가에 의한 부서 간 성과급의 차등 폭 확대 및 임원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는 한편, 주5일 근무 도입에 따라 동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개선·정비하였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주영)

##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 농어업특위 현황

'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출범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 소비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국민적·범정부적 성격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제정 2002.1.26 법률제6636호)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제1대 위원장 : 전 농림부장관 한갑수, 제2대 위원장 : 단국대학교 교수 장원석)는 국민적 합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본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제1기 농어업특위는 당초 2002년 1월 26일 부터 2004년 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되어, 농업·농촌 10개년 종합대책 수립과 119조원 재원 확보 마련 등 큰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DDA·쌀협상 등 갈등국면과 FTA협상 등 산적한 국내외 농어업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4.12.31 법률제7274호)하게 되었다.

2004년도 농어업특위의 주요 실적으로는 쌀·DDA 협상협의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쌀협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쌀 관세화유예연장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갈등 최소화 및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농지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농지은행기능 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및 농민단체의 숙원인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 2. 2004년도 농어업특위 운영 현황

### 가. 본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004년 3월 31일 농어업특위 대회의실에서 제11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특위 운영계획」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쌀·DDA 협상협의회 및 제1차 회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쌀·DDA 협상협의회보고에서 참석 위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므로 협상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과 국내대책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로서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의 추진·점검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2004년 7월 23일, 제12차 본회의에서는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법·제도

체계화 방안, 농지제도 개선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는데, 농지제도개선 방안은 쌀 소비량 감소, DDA 협상 등의 영향으로 농지가격의 하락이 전망되고, 국토계획체계 개편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농지의 범위를 확실히 하고, 보전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며, 개발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4년 12월 10일, 제13차 본위원회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농어촌경관협약 제도 도입, 농어촌 초등학교원 확보 지원, 수산업 유통체계 선진화 등 총6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27일, 제14차 본위원회에서는 쌀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결하였는데, 참석 위원들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방안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조업어장 상실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제1분과는 농림업경쟁력 제고,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농림업의 다원적 기능분야를, 제2분과는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증진분야, 제3분과는 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다루게 되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도에 제1분과 소관 7개, 제2분과 소관 3개, 제3분과 소관 3개, 제4분과 소관 4개 등 총 17개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2003년도에는 제1분과 소관 4개, 제2분과 소관 3개, 제3분과소관 2개 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 되었다. 2004년도에는 분과위별로 각종 협의회, 관계자회의, 전문가회의 등의 형태로 과제별 논의가 진행되어 제1분과는 5개의 과제와 1개의 기타과제를 수행하였고, 제2분과는 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제3분과는 6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제1분과는 분야별(쌀, 원예, 축산, 임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33명의 위원이 2004년 2월 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지제도 개선방안,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 방안 및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방안을 확정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04년 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핵심과제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대책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각계의 관심 제고에 노력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04년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004년 5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쌀산업의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제도 혁신,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 개선,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의 농지전용부담금 형태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심의하였다.

2004년 6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와 소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화된 논의를 하였고 이를 확정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04년 11월 3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 방안과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방안을 심의 확정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WTO 및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은 직불제 확대로 보완하며 직불제 도입목적은 농가소득 안정, 다원적 기능 제고, 농업 구조조정 보완으로 설정하여 목적에 맞게 직불제를 체계화한다



는 내용이다. 또한 쌀·DDA협상 등으로 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소득을 보전하되,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여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며 정책수단의 집행가능성, 정책방향과의 합치성, WTO협정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불제를 확충하고 체계화한다는 내용이다. 제4차 회의에서는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방안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설정,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자급목표를 설정하며 식량자급률 목표와 정책대안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소비자 등 범국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05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DDA협상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1분과는 5개의 과제와 1개의 기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소위원회, 정책협의회,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업·농촌 투융자추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농업구조개선」과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추진하는 관계로 추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몇 개의 소과제로 구분하여, “농업인 정의 재정립”은 정책협의회 1회, 전문가회의 1회를 개최하였고,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과 농가유형별 정책방향”은 소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농업인력 수급 전망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은 소위원회 1회, 전문가회의 2회를 개최하였다. 「농지제도와 영농규모화」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2회, 소위원회 3회 및 전문가회의 1회를 개최하였다. 「쌀·DDA협상과 식량대책」과제는 몇 개의 소과제로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였는데, “쌀·DDA 협상동향 및 대책”은 협의회 5회 개최 및 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고,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방안 검토”는 소위원회 3회, 전문가회의 1회 및 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쌀농가 소득안정화 및 유통제도 개편 방안”은 소위원회 1회, 전문가회의 1회 및 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다. 「농외소득 및 직접지불제」는 2개의 소과제로 나누어 “농외소득 증대방안”은 소위원회 1회 및 전문가회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은

정책협의회 2회 및 전문가회의 5회를 개최하였다.

그 외 농업이 식품산업과 관련이 깊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산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기타과제로 「식품산업 육성방안」과제를 추진하여 정책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다.

제2분과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 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학계, 연구·행정기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23명이 모여 2004년 2월 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방안, 농어촌경관협약제 도입 및 농어촌 초등학교원 확보 지원 등을 심의 확정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제2분과는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지역개발분야의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23차례 정책협의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분야의 농어촌교육훈련정책협의회는 「농업교육훈련 시스템 혁신방안」의 과제를 6차례 토의·심의를 하였으며, 복지분야의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는 「농어업·농어촌여성정책 혁신방안」의 과제를 7차례 토의·심의 및 1차례 토론회를 개최 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의 지역개발정책협의회는 「농어촌경관협약제도 도입」 및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2개 과제를 10차례 토의·심의 및 1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2분과에서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방안」과 「농어촌경관협약제도입방안」의 2개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책자를 발간하여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대한 추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업무 효율을 기하였으며 시도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추진지침서로 활용하였다.

제3분과는 각계의 수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분과위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육성과 어촌발전을 위해 2003년 12월에 수립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후속과제로서 수산업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및 WTO/DDA 대비 수산업 구조조정 방안 등 6개 과제를 2004년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4년 2월 6일, “2004년도 활동방향”에 대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총5차 회의를 개최하여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법·제도 체계화 방안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방안 등 특히, 부처간 이견으로 인하여 부처 단독으로 추진이 곤란한 과제에 대해서 범 부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견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제3분과는 기존의 소위원회 운영보다 과제추진의 심도있는 논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과제에 따라 전문가회의 및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어업인의 정의 재정립 및 어업인 육성방안」과제는 전문가회의 2회, 정책협의회 1회 등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WTO/DDA 대비 면세유 지원 방안」과제는 전문가회의 2회, 정책협의회 1회 등 3차례 회의 개최와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과제는 전문가회의 3회, 정책협의회 1회 등 4차례 회의와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법·제도 체계화 방안」과제는 정책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 방안」과제는 전문가회의 1회, 실무협의회 2회, 정책협의회 1회 등 4차례 회의와, 「WTO/DDA 대비 수산업 구조조정 방안」과제는 실무협의회 2회 등을 개최하여 쟁점사항 등을 심의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분과위에 상정하였다.

#### 다. 쌀·DDA협상협의회

##### (1) 쌀·DDA협상협의회 구성

2004년 농어업특위에서 쌀 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리 협상단에 힘을 실어 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DDA 협상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쌀 협상과 DDA 농업통상의 중요사항을 논의하며, 관련정보를 공유 및 공론화를 위한 열린 토론의 장으로 역할과 쌀 협상 등 진행사항과 쟁점사항의 정보전달 및 이해의 장으로 활용하여 정부와 전문가, 농민단체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위원장은 「DDA 협상 자문회의」위원장 이었던 김충실 경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농민단체 참여가 2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었고, 소비자단체와 언론계 그리고 국회가 각각 1명씩 추가되었다. 또한 학계 및 전문가그룹은 2명이 추가되어 6명, 정부위원은 3명으로 기존과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농림부의 경우는 기획실장에서 농업통상정책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10명에서 19명으로 각 분야별로 참여자가 확대·구성되었다.

그리고 운영방향은 종전 비공개에서 공개회의 중심으로 전환(사안에 따라 비공개)하고 전체 쌀 협상 일정에 맞추어 수시 개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개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정부 협상팀에 자문회의 의장(또는 추천한 자)이 참여하여 현지 협상에서 자문하도록 하였다.

## (2) 논의 사항

첫 협의회는 2004년 3월 3일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 위원 위촉이 있은 후 본 협의회 의장으로 경북대 김충실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어 “쌀 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농림부 윤장배 국장의 보고에 이어 “2004 쌀 협상 이해와 쟁점, 주요국 입장과 협상 전략”에 대해 KREI 서진교 박사 보고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주요 내용으로 쌀 협상이 어려운 협상임을 공감하면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요구하였으며, 농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과 각계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 국민, 대 농민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고, 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일정량 MMA 허용) 사이의 협상 균형점을 분석하여 최상의 안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내용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협상 준비에 필요한 사항, 협상 전략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제2차 협의회는 6월 14일 개최되었으며,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 결과(최동주 전문위원)와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농림부 농업협상과장)에 대한 보고후 토론이 진행되어 협의회는 정부 협상팀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개최되어, 농림부의 “DDA·쌀 및 FTA 협상동향 및 대응보고”에서 DDA의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기본 골격으로 오시마 초안<구간별 감축공식(tiered formula), 관세감축과 TRQ(관세할당제도) 증량 연계,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새로운 형태의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추가 등>을 소개하고, 쌀 협상에서는 지금까지 협상결과,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상대국에게 전달하였고, 한·일, 한·싱가포르, 한·ASEAN FTA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협상은 국내 대책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국내 대책과 연계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쌀 협상관련 4차 회의는 11월 1일 개최되어, 농림부의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KREI 서진교 박사의 “쌀 관세화 동등성 분석-확률적 접근-”에 대한 보고 이후에 토론으로 이어졌다.

쌀·DDA협상 협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5차회의는 12월 21일 개최되어 11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결과를 농특위 사무부국장이 발표했고, 이어 “쌀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최동주 전문위원이 발표한 후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쌀·DDA협상협의회의는 5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농민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소비자 및 언론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의안번호 본위 제 2004-14호 “쌀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의결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결되었다.

#### 라. 지역농어업특위

지역농어업특위는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지역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2004년도 지역농어업특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등 11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활동실적을 보면 9개도 지역 농어업특위에서 모두 16회에 걸친 회의 등을 개최하여 한·칠레 FTA대비 과수산업 육성대책, 지역 농어정 종합발전계획, 농업정책과제 검토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 농어업특위에서는 지역농어업특위와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지역농어업특위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업특위 위원장회의 1회, 경기, 대전·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 농어업특위 순회회의 등을 개최하여 2004년도 농어업특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DDA 및 FT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등의 설명과 함께 농어촌의 실태조사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였다.

2005년도에도 지역단위행사 개최 등 지역농어업특위 자체 운영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앙 농어업특위와 지역농어업특위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농어업특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어정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3. 2005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2005년도 농어업특위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에 바탕을 둔 농·도 상생의 균형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농어업 정책방향 설정, 농어업·농어촌대책의 점검·평가, 이해계층·집단간 합의 도출,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 등 4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은 '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정할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된 식량자급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DDA협상/FTA에 따른 국가별·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국내대책 제시 및 협상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아울러 통일대비 남북 농어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단체·기업의 역할 분담 및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대책을 점검 평가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민·관합동으로 '농어정 점검·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평가대상 과제로는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 예산 및 금융 지원체계 혁신,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농어정 추진체계 혁신, 농산어촌 활성화, 참여정부 농업분야 5대 국정과제 등이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 사회적 통합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농어업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신설, 수시로 현안문제를 조율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의견을 정취,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와 공동 협의하고 독자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국정과제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의 실현을 위해 농어업인의 자구노력 강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농어업분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여 농어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쾌적한 정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어민이 주도하고 지자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클린 운동'을 전개하고, 민·전·관이 참여하는 '농산어촌 홍보전략포럼'을 농어업특위 내에 설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개발 및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농어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최근 소득향상, 주 5일근무,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은퇴자의 노후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 체험관광 등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농어촌을 찾아오고, 와서 살고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t;표 2-1-8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04년말 현재)&gt;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장원석	단국대 교수
당 연 직 (6)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허상만	농림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농어업인 단체 (9)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박종식	수협중앙회 회장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남용	(前)한국낙농육우협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준구	농민단체협의회 회장
	허기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재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소비자 단체 등(4)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이행자	대한 YWCA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학계 등 전문가 및 언론인(9)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소순열	진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조옥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최운실	아주대 교육학과 교수
	장창익	부경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철주	중앙일보 논설고문
	박대석	(前)KBS 보도본부 대기자



## 제2장 2004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98년 이후 증가하다가 수도용 농약사용 감소에 힘입어 '0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2004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0톤이다. 전체 사용량은 수도용 농약 사용 감소에 힘입어 꾸준히 감소추세이나 원예용 농약 사용량은 소득작목 재배 증가 등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1990년 1,104천톤을 고비로 연차적으로 그 사용량이 감소하여 2001년도에 717천톤에서 2003년도에는 678천톤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화학비료 차손보전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전구매 등 영향으로 2004년에는 747천톤으로 증가되었다.

비료에 대해 1991년부터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비료 판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비료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농협에 사후 보전해 주는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농업경영비 중 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1985년 10.9%, 2000년 6.7%, 2004년 5.5%), 과다시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의 시대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점을 감안, 2000년 8월 논농업직불제 마련시 차손보전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을 정하고 2003년 6월에 화학비료가격보조 개선 방안을 마련,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 2003.10.16일 고농도 질소질 비료인 요소, 유안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2004.7.1일 보조율을 종전보다 50% 감축하였다. 아울러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보다 친환경적인 유기질비

료 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 보조는 2004년 60만톤 210억원 규모이나, 연차적으로 화학비료 보조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우리의 농업을 환경과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량 대비 2013년까지 4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4년도에 병해충 관찰포 1,050개소, 예찰포 149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교육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14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밭 직불금을 저농약인증농가에게 ha당 524천원, 무농약인증 674천원(논 : 150천원), 유기인증 794천원(논 : 270천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윤영렬)

##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농업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농가에 환경오염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중소농, 소규모, 대규모 지구로 나누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실천기반 조성에 집중하였

다. 1995~2004까지 총사업비 2,105억원을 투입하여 679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06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004년말 기준 2.5%수준이었으나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매년 5% 수준씩 2013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를 법정리(15,481里)의 10%수준인 1,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대·소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지구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63개 지구 120억원을 투자하고, 2006년부터는 매년 연평균 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페스티벌(5월), 품평회(11월)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홍보 TV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였다. 도시민의 친환경농업체험을 위한 도농교류협력사업을 9개단체(234억원)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50억원 지원하였으며, 금리도 4%에서 3%로 인하하였다.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170개소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승환, 농업사무관 김기훈)

### 3. 토양개량사업 추진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을 위한 토양개량사업은 2003년에 이어 2004년도에도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보하여 100%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618천톤(규산 326, 석회 292)을 지원하였다.

또한 입상토양개량제 확대공급을 통한 토양개량효과를 증대하고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입상규산질 비료를 대폭 확대하여 2003년도 85천톤에 이어 2004년도에는 110천톤으로 확대·공급하였다.

아울러 오염농경지와 사질토양 및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령지의 발토양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 개량을 위해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객토사업을 지속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사무관 안규정)

####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축산사료 중 조사료 비율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이 증진되도록 하는 시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리수매에서 제외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보리를 축산농가와 계약하여 사료로써 공급할 수 있도록 총체보리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3~2004년도에는 2,681ha 재배에 이어 2004~2005년도에는 6,281ha로 증가하는 등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가 부산물 및 곡물을 활용한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볏짚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사료·녹비작물을 파종면적 기준으로 2003년도 125천ha의 재배에 이어 2004년도에는 96천ha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사무관 안규정,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범민)

####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

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38개소, '04년말)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들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04, 800개소 → '05계획, 679개소) 하였다.

또한, 2004.4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내 식량정책국과 축산국,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을 차관보 직속으로 구성·운영('05.9)하고 있으며 이 팀에서는 앞으로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경지로 환원시킴으로써 지력을 북돋우는 자연순환형 농업 형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유기축산 세부사양기준

을 마련중이며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이를 유기축산 희망 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서재호)

#### 나. 축산업등록제 추진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 축산물 안전성 확보,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12월 26일 의원입법으로 축산법이 개정·공포되어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 각국도 축산농가별 농경지면적 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고, 대만은 19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19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축산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및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2005.12.26일)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한육우·젓소 및 닭·오리는 가축사육시설이 300㎡이상인 농가, 돼지는 50㎡이상 이고,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20.2천호(45.3%), 젓소 8.4천호(18.9%), 돼지 9.3천호(20.8%), 닭 6.1천호(13.7%), 오리 0.6천호(1.3%)로 모두 45천호가 된다. 축종별 축산업등록 대상농가규모는 주요가축질병, 발생빈도, 관리역량 등을 생산자단체 등과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등록시에는 종축과 일반가축 사육시설(종축업), 부화실과 병아리방(부화업) 및 계란중량 선별기(계란 집하업),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장치구비(가축사육업)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

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적정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처리 및 경종농업과의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2004년부터 시범도입하여 추진하고, 축산정책 방향을 축산업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이력추적시스템,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고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등 청결유지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강형수)

## 제2절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도입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후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안전생산에 대한 국제공통 기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WHO(FHH : 한약규격화포럼)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사용되는 약용작물에 대하여 GAP기준을 설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국제동향에 발맞춰 도입을 추진하는 GAP제도는 Codex기준과 WHO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① 파종 전 단계의 토양·수질의 안전관리, ② 농

산물 생산시 화학비료, 농약 및 미생물의 오염관리, ③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이력)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농업인들은 식품안전성이 떨어지는 농산물보다 차별화된 GAP농산물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GAP기준은 WTO에서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기준의 선진농법인 GAP제도를 도입하고자 2003년도에는 약용작물 5개 품목(당귀, 황기, 구기자, 작약, 맥문동)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단계(Farm)부터 최종 소비단계(Table)에 이르는 축산물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위생·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육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04.7.29)하여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육단계에서는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자 적정 사육밀도 유지, 환기·온도 관리 등 사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교육하는 한편,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서 잔류위반 농가를 색출하고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실무작업단(T/F)을 구성·운영하여 HACCP 적용지침을 마련하



는 등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도축단계에서는 '03.7.1일부터 시행된 HACCP 전면 의무적용에 따라, 대 상도축장에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성실히 운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시·도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HACCP 운용이 미흡하거나 미적용 도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함으로써 도축장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또한, 가공장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납·학교급식·단체급식소 그리고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HACCP 적용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HACCP 적용 확대를 기하였다.

<표 2-2-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2004.12.31 기준)

도 축 장				축산물가공장		
계	소·돼지	닭	오리	계	식육	유(乳)
127	88	37	2	175	143	32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위생적으로 도축·처리·가공된 축산물이 보관·운반·판매 단계에서 병 원성미생물 등에 의해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자와 종업원이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영업자가 그 준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작성·운용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였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실제 그 내용이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및 살모넬라균 등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수거검사와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선택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추진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기술서기관 이상진)

###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품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도에는 138품목 60천건의 농산물을 조사하였고 이중 770건이 잔류농약기준 초과 등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안전성 조사의 범위를 재배환경 및 병원성미생물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재배토양, 농업용수, 농업자재 247건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농업용수 1건, 농업자재 2건 등 3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생식채소류, 퇴비, 지하수 149건에 대해 살모넬라 등 미생물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대장균은 검출되었으나,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는 검출되지 않았다.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60천명의 생산자와 22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업무에 소비자 참여확대를 위해 농소정협의회를 13회 개최하여 농산물 안전성 실태조사를 302건 실시하고,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조사를 4,547건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농림부, 농진청, 산하기관, 농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5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수립된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대책은 중장기 농산물 안전성 대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최정록)

####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GMO표시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감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GMO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2004년 482명의 상주단속반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GMO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2004년 교육:702천명, 홍보:1,124회)하는 등 GMO 표시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과학적기반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성·정량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등 GMO농산물 표시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19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996년 국내가공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국산의 경우 226개 품목, 수입산의 경우 176개 품목(HS4단위)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결과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2004년 96.1%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직적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단속기법 및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부정유통 신고망을 구축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8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표시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강경란)

####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2회(수출국·국내도착) 소독 및 검사(233건 35천톤)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36개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232개소 401개)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19두)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81명) 등을 통해 19천건(53천톤)을 검색하였고 이중 탐지견 검색건수는 4.6천건(11톤)으로 총 검색실적의 24%를 차지하였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15개국 23개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300천부)를 배포하였고 검역전광판(50개)·캠페인(월 1회 이상)·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2,348명)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107천두)를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연 53회)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9,725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311천호)에 대해 소독(연 21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216개소 453명)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15개 시·군)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년 주기의 발생우려를 깨고 '02년 6월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은 '04.6월부터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우 1세 이상의 암소(단, 도축용 암소는 제외)에 대해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한육우의 유·사산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6~7월, 11~12월)에 전화 문진검사를 실시하였고, 감염율이 3% 이상인 시·군(21개소)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2회 400천부)하여 축산농가 교육시 예방수칙 등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부루세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검사대상을 확대('03년 : 발생농장·30두 이상 사육농장 → '04.6월 : 가축시장 거래 암소 → '04.11월 : 다발지역 일제검사)하였고 또한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를 색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 부루세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완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는 2003년 72건 발생이후 2004년 9건 발생으로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2-2-2>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99	'00	'01	'02	'03	'04
돼지콜레라	1,683 (5)	-	-	406 (13)	5,866 (72)	779 (9)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 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을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항체가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조옥현)

###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3%,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청장년층의 쌀 전업농 참여를 촉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자금 상환 기간을 당초에 20년 균분상환에서 15년에서 30년까지 연령별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청장년층에 대한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2004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8,128ha 3,092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560ha 1,840억원, 농지임대차가 5,507ha 1,215억원, 농지교환·분합이 61ha 37억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쌀 전업농수, 2004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촉진되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914천호 중 9.3%(85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이 전국 벼 재배면적(984천ha)의 28.7%를 담당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3ha이상 생산 농가가 44천호로 이중 쌀 전업농이 36천호(82%)를 차지하였다.

<표 2-2-3> 2004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4 계획(A)		2004 실적(B)		집행율(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7,688	309,212	8,128	309,212	100
농지매매	2,770	183,992	2,560	183,992	100
임대차	4,868	121,505	5,507	121,505	100
교환분합	50	3,715	61	3,715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이재욱)

###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여 벼를 재배하고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연령이 63세이상 69세이하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지급상한은 재정범위를 감안하여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4,789ha 14,100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650ha 1,315백만원, 임대이양이 4,139ha 12,313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57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028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80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38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38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1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2-2-4> 2004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3 계획(A)		2004 실적(B)		집행율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5,254	14,100	4,789	14,100	100
사업비	5,254	13,628	4,789	13,628	100
운영비	-	472	-	472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조성근)



##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연간 2~3만ha 규모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 국고 50%, 지방비 30%, 농업인부담 20%이던 보조율을 지방비 및 농업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19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농업인부담을 없애고 국고 80%, 지방비 20%로 하여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봄마무리 사업까지 총 소요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1993년 가을착수사업부터는 사업비 상승 억제를 위하여 시행면적 기준으로 예산단가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지원하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였다.

1995년 가을착수분부터는 예산단가의 10%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방식을 제한적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수준을 다소 향상시켰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쌀재고량에 대한 문제제기와 경지정리가 90% 이상 추진되어 개발여건이 불리한 일부 잔여지구들에 대한 낮은 사업효과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경지정리는 '04년까지 추진 후 마무리하고 잔여지구중 50ha이상 대규모지역 9천ha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경지정리사업은 쌀뿐만 아니라 채소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 자급향상에 기여하였고,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일련의 영농과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2004년 봄에 2003년 가을에 착수한 1천ha를 마무리하여 최종 2004년까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의 추진실적은 논면적 1,127천ha의 64%인 720천ha로

&lt;표 2-2-5&gt;

##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2004봄까지	2005이후
사업량(천ha)	1,127	800(915)	720(826)	중단
- 진흥지역	770	665(760)	634(726)	
- 진흥지역밖	357	135(155)	86(100)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 )은 논면적에 농로, 용·배수로 등 시설부지를 포함한 구역면적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서 국고 4조6,454억원, 지방비 2조2,894억원, 농업인부담 2,711억원 등 7조 2,059억원을 투자완료하였다.

2005년은 60년대부터 정부주요시책으로 추진된 일반경지정리사업이 2004년부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달성한 추진실적 및 각종 성과등을 자료화하여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및 각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을 추진중에 있다.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박중훈)

##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에 경지정리된 지역중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 농지이나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지 규모를 3천평 규모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를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1.5~4m를 3~7m으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표 2-2-6>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사 업 량	164	92	4	68

주 : 봄마무리 기준임. '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최근 쌀 산업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당초 개발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재정비하고, 수리시설 개량만으로 영농여건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4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1조8,044억원, 지방비 4,614억원 등 2조2,658억원을 투자하여 92천ha를 완료하였다.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박종훈)

#### 다.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연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받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밭에서 마을, 양파, 양배추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시설 유지 관리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밭관정 시설이 100%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주민 유지관리조직 미구성 또는 미흡한 운영, 농업인의 밭관정 이용시설 사용 미숙 및 고장시설물 방치 등으로 용수이용시설(관정)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받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에는 밭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받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 등 품질이 우수한 밭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4까지	2005계획	2006년이후
사 업 량	719	110	64	5	41
사 업 비		25,794	14,585	1,272	9,937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김동권)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인데 따른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사 업 량	35	15.1	1.3	18.6
사 업 비	37,071	15,377	1,340	20,354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박중훈)

마. 배수개선사업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2004년에는 2,167

억원을 투입하여 약 5천ha를 준공함으로써 '04년까지 총 대상면적 18만8천ha의 68%인 12만8천ha를 완료하였다. 최근 기상변화로 강수량이 증가되어 침수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은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lt;표 2-2-9&gt;

##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사 업 량	188	128	1	59
지하배수	47	3	-	44
사 업 비	43,252	22,592	2,165	18,495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김동권)

## 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lt;표 2-2-10&gt;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		%		%		%
공사관리수리시설	8,769	100	5,423	61.8	84	1.0	3,262	37.2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07	51.9	1	0.5	98	47.6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971	29.6	56	1.7	2,257	68.7
저수지준설(백만m <sup>3</sup> )	102	100	41	40.2	3	3.0	58	56.8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2004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흥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4,036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3,200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343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49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100억원을 투입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김일환)

####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대규모 농업용수개발로 경북 성주, 전북 동화 2개 지구에 154억원을 투입하였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는 113개 지구에 3,187억원을 투입하여 8개 지구 3,983ha를 준공하는 등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총논면적	개발대상면적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1,127	1,100	878	3	219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김길영)

##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평야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22지구 28만3천ha를 추진하여 그중 금강·평택·계화도 등 15지구 16만2천ha를 완공하고 7지구 12만2천ha를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이며, 2004년에는 국고 918억원, 농지관리기금 2,280억원 등 총3,198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지구 등 7지구를 계속 추진하였다.

&lt;표 2-2-12&gt;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계	22지구	283,227	80,567	45,063	3,200	32,304	
준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행중	7지구	121,560	66,800	31,296	3,200	32,304	
	금강Ⅱ	43,000	6,540	3,389	400	2,751	'89~'06
	미호천Ⅱ	4,430	2,912	2,180	70	662	'89~'08
	홍보	8,100	3,812	2,285	220	1,307	'91~'10
	영산강Ⅲ-1	13,160	7,072	3,616	430	3,026	'85~'06
	영산강Ⅲ-2	7,840	4,279	1,863	400	2,016	'89~'10
	영산강Ⅳ	16,730	7,429	480	180	6,769	'01~'07
	새만금	28,300	34,756	17,483	1,500	15,773	'91~'11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토목사무관 전경구)



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을 자동화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용수절약 및 물관리비 절감 등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2004년도에는 12개 지구에 국고 64억원을 투입하여 4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표 2-2-13>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		%		%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371	100	7 (15)	1.9	2 (10)	0.5	362	98.1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김일환)

### 3. 농업전문인력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 개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차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업경

영인 육성사업은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은 창업농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45세 미만의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2) 2004년도 추진상황

2004년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148명을 선정하고 농업종합자금으로 총 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1,125명을 선정하고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기술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2천만원~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동 자금은 100% 국고융자로서, 창업농 자금은 연리 4.0%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 (3) 평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2조2,93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3,477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표 2-2-14> 2004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경 종	축 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1,125	696	429

자료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농업사무관 양주필)

## 나. 농업법인육성

농업법인육성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의 육성 필요에 따라 1970년대 작목반 및 1980년대 기계화영농단을 1990년 농업법인으로 법제화(농어촌특별조치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 폐지,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 등 여러 형태의 변천 과정을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 산업기능을 포괄하는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의 중심체로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의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협업조직으로 현대적 경영환경에 적응하도록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은 타산업분야의 자본, 기술, 인력이 자유롭게 진입하여 농업분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영농조합법인은 1991년 25개소를 시작으로 2004년에 5,49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990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2004년에 1,06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인적 단체이므로 의결권은 1인1표제이며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출자 및 농지소유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농지, 현금,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합자(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2인 이상), 유한(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3인 이상)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물적 단체이므로 의결권은 출자지분에 의하며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인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3/4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표 이사 및 집행이사 1/2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농업법인 지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세제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업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업이외 소득은 출자조합원당 1,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분리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교육세 감면으로써, 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은 면제하고 농업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둘째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개별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휴폐업 상태에 있는 법인 등이 다수 발생하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출자금·자기자본 최저한도 및 운영실적 기준 마련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나 여전히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 (1) 개 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농업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24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새로 선발하여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는 등 1999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173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였다. 특히 선발된 신지식농업인들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홍보용 CD를 제작하여 이들의 노하우와 신지식기술 등이 확산되도록 배포하였다.

—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신지식농업인 육성 방안

지식기반사회의 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확대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경영컨설팅 우대, 해외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 등 간접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미래의 농업세대에 대한 신지식농업인 농장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신지식농업인 경영체 견학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양성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농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영상물 및 우수사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을 지식농업의 확산 주체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이호재)

라. 여성농업인 육성

(1) 개 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정책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의 14,422천명이 2004년에는 총인구의 약 7.1%인 3,41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이 2004년에는 1,761천명(농가인구의 51.6%)으로 감소하였다.

&lt;표 2-2-15&gt;

##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2004
전체	14,422	10,827	6,661	4,032	3,591	3,530	3,415
남성 (%)	7,164 (49.7)	5,415 (50.0)	3,279 (49.2)	1,972 (48.9)	1,748 (48.7)	1,715 (48.6)	1,654 (48.4)
여성 (%)	7,258 (50.3)	5,412 (50.0)	3,383 (50.8)	2,060 (51.1)	1,843 (51.3)	1,815 (51.4)	1,761 (51.6)

자료 : 통계청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이와 같은 농가인구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가인구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도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 즉, 「여성농업인력의 주류화」의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2000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 2001~2002년간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을 완비하여 독립법률로 발전시켰다.

## (2) 주요 추진시책

## (가)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는 농업·농촌발전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인구의 52%에 달하고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

성·지원사업이 계획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정도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2004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목표는 변화된 농업환경에 걸맞은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도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관련기관 주관으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32,000여명,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전파하는 영농기술교육 64,000여명, 축산 및 환경분야 전문농업경영교육 312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농과계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서 11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현장여성농업인 또는 관련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전문교관을 양성하고자 농림부 소속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교관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도력개발과 직업능력강화과정으로 나뉘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씩 총 6회에 걸쳐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력개발과정은 표현력, 기획서 작성 등 기획력 강화훈련과정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합리적 의사결정, 리더와의 관계 등의 리더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능력강화과정은 농업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과정의 농업상식과 작목별 전문분야, 자녀교육, 가족건강, 회의진행 등의 교양과정으로 진행된다. 2002년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데 이어 2003년 22명, 2004년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장의 여성농업인 교관요원으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lt;표 2-2-16&gt;

## 연도별 여성농업인 교육현황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보화교육 (농림부, 농협)	7,680	21,450	24,325	26,491	31,893
영농기술교육 (농진청, 농협)	36,533	30,594	30,801	55,603	63,531
전문농업경영교육 (농업연수원, 농과계대학, 농협)	1,059	789	787	490	431
교육시스템구축	-	교재개발 (4종)	여성농업인 교관반 (24명/6회)	여성농업인 교관반 (22명/6회)	여성농업인 교관반 (19명/6회)

## (나) 각종 위원회 및 협동조합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관점이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농업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997년 5.1%에서 2001년 30.2%, 2002년 35.8%, 2003년 35.9%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4년 말 현재에는 신설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 저조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되어 19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262명 중 85명의 여성이 위촉되어 32.4%의 여성 위촉율을 보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여성조합원 비율은 ('01) 19.6% → ('02) 21.2% → ('03) 22.6% → ('04) 23.6%, 여성대의원수는 ('01) 1,924명 → ('02) 2,225명 → ('03) 4,167명 → ('04) 4,886명, 여성임원수는 ('01) 94명 → ('02) 181명 → ('03) 207명 → ('04) 237명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 (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은 생활공간과 경제활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해주는 곳이 드물고 교양·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성관련 시설이 전국에 약 350여 개소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운영 목적이 다르고, 이들 시설 대부분이 도시 및 도시인근에 설치되어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농이나 자녀교육, 문화욕구 해소 등 쾌적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각종 상담사업과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 지도,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사회교육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개 지역(충북영동, 충남서천, 경북안동, 경남진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2002~2003년중에는 각도별 2개소씩 총 18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였고 2004년도에는 운영 개소수를 전국 27개소로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표 2-2-1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4	300	18	850	18	855	27	1,378

\*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 정착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자 개발된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농피해를 줄이고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사이의 기간 중 30일 동안 출산 농가의 농사일을 대신 해주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시범 첫째인 2000년에는 68개 시·군에서 실시하여 731농가, 2001년 87개 시·군의 1,700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하였고, 2002년에는 163개 시·군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여 2,500여 농가에서 이용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촌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2003년 2,833농가, 2004년 3,370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200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될 계획인 바, 지원 단가 현실화, 이용기간 및 이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사업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표 2-2-18>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2001		2002		2003		2004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0,347	3,422	1,692	550	2,452	778	2,833	892	3,370	1,202

\*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 (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지 소유규모 1.5ha 미만인 농어가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이며, 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 시행중인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월 지원단가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수준인 평균 약 102천원 수준이며, 지원방법은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4년은 사업 첫 해로서 월 평균 27천명에 대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202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다.

<표 2-2-19>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실적

(단위 : 천명, 억원)

사 업 명	인원	지원액	비 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27	202 (101)	국고 50% 지방비 5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과

#### (바) 여성농업인 정책연구 사업추진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개발로 성(性) 인지적 농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고자 여성정책담당관실 출범과 함께 여성농업인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2002년간 매년 3개 과제 연구를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여성농업인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기초자료 생성, 여성농업인정책 중간평가 및 향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1999년도에 이어 2번째 외주용역 과제로 수행하였다.

2004년에는 2001년부터 추진한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제2차계획(2006-2010년) 수립의 토대를 마련코자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중간평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성부와 공동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관점(gender-senstive) 에서 농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3) 평 가

2004년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시행 4년차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여성농업인정책 전문가 협의회 구성, 창업농 지원시 여성우대 제도 도입 및 농림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시범실시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에의 여성농업인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농가도우미 이용제도 개선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제도 신규도입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다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권익확충을 위한 자각과 복지수요는 늘어난데 반해 농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게 현실이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채록)

<표 2-2-20> 여성농업인육성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단위	2001	2002	2003	2004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 정보화교육	명	21,450	24,325	26,482	31,893
○ 영농기술교육	명	30,594	30,801	55,603	63,531
○ 전문농업경영교육	명	789	787	329	312
□ 여성농업인 교육시스템 구축	종	교재개발/4	-		
○ 여성농업인교육 교육방안 연구	회	워크샵 1회	1과제	-	-
○ 여성농업인 교관반 운영	명	수요조사	24	22	19
□ 후계여성농업인육성	%/명	15.3/435	20.6/294	25.1/192	13.1/147
□ 발농사 농작업 기계화 추진					
○ 발농사용 농기계현장 접목시험	종	5	7	4	5
○ 발농사용 농기계개발	종	8	12	5	3
□ 각종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	30.2	35.8	35.9	32.4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 여성조합원	%	19.6	21.2	22.6	23.6
○ 여성대의원	명	1,924	2,225	4,167	4,886
○ 여성임원	명	94	181	207	237

	단위	2001	2002	2003	2004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국민안전식생활교육·홍보	백만	200	200	100	-
○ 도동교류사업	백만	150	145	175	285
□ 여성농업인 단체활동 지원					
○ 농림부	백만	80	90	85	76
○ 농협중앙회	백만	25	95	47	66
□ 여성농업인 전문직업의식 고양					
○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백만	27	10	50	71
○ 여성농업인 표창	명	17	22	26	50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개소/백만	4/300	18/1,445	18/1,454	27/2,356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명/백만	540/350	574/413	73,000/56,200	75,000/63,175
□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시군/명/백만	87/1,692/1,061	163/2,452/2,074	전국/2,890/2,074	전국/3,370/2,403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명/백만	-	-	-	21,000/20,186
□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명/백만	-	-	-	3,187/4,378
□ 여성농업인정책과제개발연구					
○ 농림부	과제	3	4	1	1
○ 농진청	과제	3	5	2	3
□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여성농업인육성법제정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도	-	6	12	14
○ 여성정책반 운영	회/명	1/38	1/44	1/34	1/33

#### 마.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제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분야, 농업투입재분야, 식품가공분야, 유통분야 등에 진출하여 비용절감,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1) 2004년도 추진상황

정부(83억원)와 민간(97억원)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 100억원에 이어 2002년 8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 우수한 기술력과 농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 실현 제 3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6개 팀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농업벤처 활성화시책을 추진하였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바.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 (1) 추진배경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동일한 영농조건이라도 경영체의 기술, 경영능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 및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현장밀착형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기술·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경영여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예·특작·축산분야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유료(자부담 50%)의 전문·상업적 농업컨설팅 서비스기반을 구축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6,550백만원(국고 1,965, 지방비 1,310, 자부담 3,275백만원)을 투자하여 873개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2-2-21> 2004년 컨설팅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 개소)

계	원예·특작	축산	가공
952	140	784	28

그리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에 대한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의 경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토록 보급하였다. 아울러 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과 다른 농가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대외개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농업경영컨설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고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며, 컨설팅 분야도 RPC, APC, 쌀전업농 등을 포함하여 농업전반에 대한 컨설팅 확대로의 기틀을 다졌다.

## (2) 평 가

농촌지도계통에 의해 수행된 농가 경영컨설팅은 60개 품목의 경영표준진단표를 개발보급하고 68천여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처방 및 기술상담·지도 등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민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초기로서 컨설팅에 대한 인식부족 및 컨설팅결과에 대한 확신결여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참여농가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도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81%의 농가 만족도로 농업경영마인드제고 및 건전 경영체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1. 농업관측제도 정착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업관측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등락 폭이 크고 생산액이 많은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생산동향, 재고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기상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미래의 생산동향과 가격을 전망하는 예측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여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통·가공업체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농산물거래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관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14개이던 농업관측 대상품목을 2000년에는 18개 품목, 2001년에는 24개 품목, 2002년 이후에는 26개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의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4년에는 산지정보의 기초자료 수집원인 표본농가(10,961호)와 모니터(1,118명)를 재설계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해외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에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 4개 품목에 대한 현지모니터 20명을 위촉·운영하였고, 북경 및 산동성의 농업경제연구소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제공하였으며, 주요 농축산물 생산국가의 생산·유통 수출체계와 정책에 대한 변화 및 전망 등의 정보교류를 위해 연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최신 관측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토록 하고,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 하였다.

아울러,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의 가공·분석을 위한 품목별·재배시기별



재배면적 반응함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분석모델 등을 보완하고,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On-Line 상에서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높여 나가고, 특히 수요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정보 전용홈페이지(aglook.krei.or.kr)도 구축·운영하였다.

농업관측정보는 매월 수집, 분석·가공한 부류별 관측정보를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정책부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관측보(월보, 분기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모니터,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함과 아울러 농업전문지, 농업관측 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5,000명에 이르는 E-mail 회원에 대하여 매월 E-mail로 관측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앞으로 농업관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DA 및 웹을 통한 산지 정보수집, 소비자패널을 통한 소비자 정보수집, 해외모니터를 통한 해외정보수집 등 관측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분석모델 개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도입 등을 통해 농업관측정보의 활용도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표-2-2-22> 주요농축산물 품목별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채소류(9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3 ~ 12월	1일
과일류(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3 ~ 11월	10일
과채류(6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	"
축산류(5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2, 5, 8, 11월	25일
	육 계	2 ~ 12월	"

(통계기획담당관실 사무관 이경천)

## 2. 산지유통의 거점화·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

'00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등 소비자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산지의 거래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정하여 산지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성장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조직 280개소(3년간 누계기준)를 선정하여 3년거치 연 3%의 금리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조직당 37억원)를 통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동 사업 추진결과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중심으로 마케팅의 규모화, 공동계산 확산, 대형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선진적인 유통방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03년말 현재 개소당 평균 매출액은 약 130억원 규모이며 연간 매출규모는 '01년 이후 매년 약 8%씩 성장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할 경우 2003년 약 130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약 135~140억원대 정도로 예상('05.9월 현재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계산 참여조직수도 2003년 257개소에서 2004년 26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실적도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자금운용기간이 만료된 2001년 전문조직과 신규로 신청한 조직을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여 총 66개 조직을 새롭게 선정하여 1,894억원의 유통종합자금을 3년거치 일시상환 3%저리자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외에 2003년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상위 20% 조직에 35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하위조직은 일부 자금회수 등을 실시하여 산지생산자조직간 지속적인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집하, 예냉 등 수확후 처리, 공동선별, 공동출하의 핵심시설인 산지유통센터 지원은 2004년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전처리 생산 등 상품화시설 보완 36개소 신규 건립 2개소 등 총 38개소에 약 12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산지유통전문조직을 더욱 규모화·기업화된 마케팅조직으로 유도하고 동일 지역내에서는 품목간 중복지원은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에는 공동선별비, 마케팅 지원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집중하되, 공동계산율, 파렛트 출하 등 조직별 유통개

선 목표관리제 실시 등 운영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4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원료기반을 확보하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규격상품화로 발전 가능성, 투자효율성, 예상가동율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경영평가를 통해 원료매입자금, 운영자금, 물류비용지원 등을 차등지원함으로써 경영전문화(독립채산제, 책임경영제)와 함께 규모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 따른 권도 또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출액 등 외형의 성장뿐만아니라 상품화 기술·경영·마케팅 등 운영 소프트웨어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도모하고 의무출하협약 등 구성원간 강한 결속력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독립법인화·책임경영체제·독립채산제등이 반영된 규모화·기업화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사업성과 평가시 독립채산제 및 전문경영인 영입 등 경영혁신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각종 정책자금 차등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지조직의 마케팅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마케팅 경영구조, 매출규모, 전문경영인 영입 등 산지유통조직의 혁신요건에 적합한 산지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정착률을 돕기위한 정책지원도 집중지원하고 특히 '05년부터는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와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 평가통합 및 전문가 평가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산지조직의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지의 근본문제인 생산자조직(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이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업 경영면에서 비즈니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극적이며, 농가도 산지유통인 출하, 개별적인 공판장 출하 방식에 익숙하고 실질적 공동출하방식 참여에 소극적 측면이 우려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정주)

### 3. 농산물 물류표준화(규격출하)사업 추진

농산물 유통비용은 '03년말 현재 22조 8,400여억원으로 소비자 구입액 52조 2,700여억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많은 이유는 농산물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유통단계별로 인건비, 넓은 점포유지관리비, 상인이윤 등의 직접 유통비용이 많고 가공·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감모·청소비, 보관비 등의 농산물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산지유통의 규모화와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 그리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하여 직접유통비용도 줄여 나가고, 또한 농산물 물류비가 전체 유통비용의 32%인 7조 2,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농산물 규모화, 표준규격화, 하역기계화 등의 축진이 필요함에 따라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물류기기 구입지원, 농산물물류기기 공동이용,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에 물류기기 구입지원사업으로 59억원,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으로 6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농산물의 하역기계화율이 2003년도 14%에서 2004년도 17%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으로 2004년도에 5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출하율이 2003년도에 53.7%에서 2004년도에 50.4%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도별 하역기계화율 및 표준규격출하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역기계화율은 2007년까지 25%, 2013년까지는 50%수준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또한 표준규격포장출하율은 2007년까지 60%, 2013년에는 65% 수준으로 높여서 농산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중철)

#### 4. 축산물시장 차별화

개방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수입산 및 국내 축산물 상호간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앞으로 품질과 위생·안전성 등이 확보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소비자 신뢰와 시장차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가축방역, 분뇨자원화 등 당면한 정책적 과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27개 경영체를 선정, 6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현지실사 평가를 통하여 3개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60억원의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10월 21일~23일, aT센터)하여 우수 브랜드경영체에는 정부차원의 시상과 홍보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18개 우수 브랜드(한우 8, 돼지 10)를 선정,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소 유전자(DNA)감별법을 활용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판매단계에서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대량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04.8.4)하여 식육판매업영업자는 음식점의 영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의무화하여 음식점에서 식육을 구입하는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05. 12. 1)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축산물 위생감시를 소비자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전

환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04.1.29)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축산물의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유통기한경과나 무허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2천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김대균, 축산사무관 이상철)

##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가 이루어졌고,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진행 등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 인지도가 상승되고, 일본·중국·동남아 등지에서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한류영향으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식문화 등도 관심이 증대되어 우리 농식품 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동안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5농업·농촌투융자사업, 119조원 농업·농촌 종합대책사업 시행에 의한 시설재배면적 증가 및 기술발달,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농산물의 생산·유통시스템 미비, 수출업체 영세 등이 극복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국가간 식습관 차이라는 전통적 요인 외에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 강화 등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어려움도 있었다.

정부는 2004년 한류영향 등을 수출에 연결시키기 위해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효율적인 유통·수출시스템 구축, 우리 농산물 해외 수요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2,085백만불로 당초 계획액 2,000백만불을 4.3% 초과달성 하였다. 수출액 2,085백만불 중 신선농산물은 551백만불, 가공농식품은 1,534백만불이었다.

####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여러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26개의 기존 원예전문생산단지(일명 수출단지)가 수출단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일부 지적 등이 있어 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훈령)」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신규단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뿐만 아니라 평가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종합평가를 통해 부실단지는 정비하고,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공급기반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였다.

우리 농산물 주 수입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프로그램을 중점 보급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에 대비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컨설팅 실시와 2,367농가에 채소류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1,111농가에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였으며, ISO 취득 지원,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였다.

2004년에 총 93회의 수출컨설팅을 실시하여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외기술지원단도 '03년 6명에서 '04년에는 11명

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해외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해 19개 품목에 425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였다.

#### 다. 효율적인 유통-수출 시스템 구축

WTO체제 출범과 함께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가 농업생존 및 성장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점점 나아지고는 있으나 수출업체·수출규모의 영세성과 불안정성, 수출품목의 비지속성, 시장의 편중성, 수출경쟁력 열세, 수출선도기업 및 수출브랜드의 취약성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 해외 수출시장 개척,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물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포장, 예냉, 검역 등 일관 수출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남 마산, 전남 광양 2개소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건설하였는데 앞으로 수출물류비 절감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인의 고용증대효과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 라. 우리 농산물 해외수요기반 마련 및 조성 활동

중국산 등 저가 농산물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성장세 지속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영세한 농가규모와 수출업체로는 고품질·안전성이 확보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마케팅 마인드 부족 등으로 해외마케팅에 취약한 실정이어서 우리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운용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선진화된 수출농업시스템 구축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해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에 의하여 “Whimori”라는 공동대표브랜드가 개발되었고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파프리카, 국화, 배 등 3개품목에 적용하였다.

국내산 농산물 및 수요여건의 변화와 해외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농산물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생산자간·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시장 개척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판로망 확충을 위해 국제농산물 박람회 참가, 우리 농산물 주 수입국의 대형유통업체에서의 판촉행사, 해외바이어 초청, 한국 농식품 로드쇼 등 해외광고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층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다.

동경식품 박람회 등 22개 주요 국제농산물박람회에 436업체가 참가하여 245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본, 미국 등 20개국에서 419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국산 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일본·미국 등 9개국 65개 대형유통업체 3,489매장에서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3,078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9개국 52명의 바이어를 국내 수출업체에 알선하여 국내 농산물 6,573천불 어치를 수출하였다.

#### 마. 수요자 중심으로 수출자금 지원

농산물 수출의 극대화과 환율하락,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수출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출용 원료농산물 구매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우수농산물 지원자금을 2003년 4,092억원에서 2004년에는 4,109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수출업체에 대한 우수 농산물 자금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규모 및 담보 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업체의 규모화 및 전문화에 기여하였다. WTO(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개도국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농축산물판매촉진비(일명 수출물류비) 256억원을 수출업체·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수출용 농산물 상품화, 국제 농산물박람회 참가, 해외 현지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 해외시장정보 조사 및 수출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에 108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농업기반 구축 및 수출진흥여건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바.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시장요구에 맞춰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 기능·조직을 개편하였다. 종전 1본부장, 3처장, 1팀장에서 1본부장, 10개팀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지역별·시장별로 해외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마케팅 대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농업무역관도 중국상해 농업무역관을 신설하여 종전 5개국 7개소에서 5개국 8개소로 확대하였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강신복)

## 2. 수입관리 대책

###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17개 주요 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연유, 분유 등 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

<표 2-2-23>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1994말까지	1,201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2.7%
1995. 1. 1	172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6
1996. 1. 1	3	포도, 사과주스(2)	94.8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7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4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8.9
2005. 1. 1	—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계	1,452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향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 함으로서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표고버섯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고추장 : 기본세율 8% → 조정관세 45%). 또한 관세화 품목, 즉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녹두, 메밀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땅콩, 메밀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2005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176개), 국내산(145개) 및 가공품(121)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0년까지 972억원을 투자 1~3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마무리하고, 2001~2004년까지 4개년간 442억원

을 투자하는 4단계 동식물검역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검역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농업협상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 1. 쌀 협상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최근 우리나라의 쌀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국내외 가격차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생산기반 정비의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이후에는 6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 외에도 UR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95년 457만석이던 재고는 2001년 927만석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1,005만석이였다.

그러나 대북지원과 주정용 공급 등 재고특별처리를 추진한 결과 2004년 말 재고는 720만석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평년수준만 생산되어도 매년 250만석 이상의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조정 등을 통한 적정재배면적 유지, 소비촉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주정용 공급 등 재고 특별처리도 추진하여 내년까지는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재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과 쌀협상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고,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보완·확충 등을 통해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DDA 협상에서 큰 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 확보도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현행 수매제를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매입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 소비자가 우리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나.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WTO/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쌀의 품질고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정부는 그동안의 증산위주의 정책을 품질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 질소질 비료 사용감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생산·유통 전반에 걸쳐 고품질쌀 생산·유통체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고품질 보급종 종자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과정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감축은 물론 재배관리도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PC 중심의 고품질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물벼 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중 유통되는 포장양곡에 산지·품종·도정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중유통 쌀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 및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최명철)

#### 다. 쌀소비 촉진 전개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재고량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쌀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소비촉진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명축구선수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러브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CF 공익광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미광고로 젊은층과 주부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미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미 홍보는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3년부터는 러브미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농촌체험캠프 실시 등 단기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3년에 처음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쌀 평가는 쌀의 인지도,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5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주요 미질 구성요소인 품위·품종혼합율·식미 등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패널에 의한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켰다.

2004년에는 시·도, 곡협, RPC협회 등에서 6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품위 및 식미는 수확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2003년도보다 다소 떨어졌으나, 품종혼합을 및 소비자만족도는 전년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12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12개 우수브랜드>

- |              |             |                    |
|--------------|-------------|--------------------|
| ① 황금빛노을쌀(충남) | ② 달마지쌀(전남)  | ③ 함초로미(전북)         |
| ④ 한눈에반한쌀(전남) | ⑤ 김포금쌀(경기)  | ⑥ 5℃이온쌀(경남)        |
| ⑦ 임금님표골드(경기) | ⑧ 아산맑은쌀(충남) | ⑨ 동강드림생미(전남)       |
| ⑩ 새만금쌀(전북)   | ⑪ 참진쌀(경북)   | ⑫ 참숯과키토산으로재배한쌀(전북) |

또한 우리쌀 서포터즈 농촌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농촌현장쌀 체험캠프는 대학생중심 리더 캠프와 초중생중심 가족캠프로 구분하여 전국 5개권역별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실시하였으며 농민초청강의, 쌀포스터·허수아비만들기, 영농체험, 가마솥밥짓기, 러브미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지역단위로 특색있는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 홍보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MBC 추석특집·SBS 쌀의혁명 특집방송·KBS “UN쌀의해”관련 설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등 TV를 통한 방송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가단체에 의해 한국인의 식미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쌀 시장개방에 대응, 우리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우리쌀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소비촉진 홍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이재환)

####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수확 후 관리비용절감, 쌀 품질 향상 및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건조·저장·가공 등 전과정을 일괄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8,432억원(국고보조 2,686, 국고융자 2,358, 지방비 128, 자부담 3,260)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639개소를 설치하였다.

RPC의 가공시설 과잉투자 문제가 야기되면서 1999년 이후 가공시설 지원을 중단 및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지원하였다.

2004년도 건조·저장시설의 지원기준은 개소당 총사업비 위성시설 7억원, 증설시설 4억5천만원중 생산자단체의 경우 보조 50%(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민간인 경우 보조 40%(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로 지원하였다.

또한, RPC의 원료벼 매입자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운영자금 5,904억원, 특별자금 3,280억원을 무이자, 1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RPC의 자체매입량을 확대하였다.

- RPC 농가벼 자체매입량 : (2000) 7,048천석, (2001) 7,622, (2002) 8,640, (2003) 9,139, (2004) 10,274,

이러한 결과, 쌀 주산지 중심으로 설치된 RPC는 벼 수확후 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미질 향상은 물론, 유통단계 단축과 유통마진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2-24>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구 분	관행방식 (A)	RPC (B)	증△감 (C=B-A)	절감율(%) (C/A)
처리비용(원/톤)	246,646	162,281	△84,365	34.2
노동시간(hr/톤)	33.7	12.2	△21.5	63.8
양곡손실율(%)	6	1	△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표 2-2-25> RPC 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김제 → 서울, 쌀80kg기준 (단위 : 원)

구 분	최종소비자가격	농가수취가격	유통 마진
RPC유통	176,000(100%)	152,968(86.9%)	23,032(13.1%)
도매상	176,000(100%)	142,296(80.9%)	33,704(19.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뿐만 아니라, RPC는 정부수매량 감축을 보완하여 산지민간유통의 중심체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생산량 3,473만석의 34.2%인 1,187만석(공매벼 제외)을 RPC에서 매입·처리하였는데 이중 RPC가 수확기에 자체매입한 물량이 821만석으로서, RPC 수확기 매입량이 정부수매량 494만석 보다 327만석 초과하고 있다.

한편, 정부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RPC의 공매곡 의존율은 1995년의 62%(총 282만석)에서 2004년에는 10.3%(총 136만석)로 크게 감소 하였다.

<표 2-2-26> RPC유통비율 (단위 : 천석)

년도별	생산량(A)	정부수매량	RPC유통량		산지쌀값(12월기준)
			(B)	B/A(%)	
1994	35,134	10,500	2,462	7.0	105,508원/80kg
1995	32,601	9,550	4,550	14.0	130,670
1996	36,959	8,618	7,107	19.2	136,110
1997	37,842	8,500	7,952	21.0	137,396
1998	35,397	6,445	8,633	24.4	147,660
1999	36,550	6,082	11,248	30.8	155,103
2000	36,742	6,291	10,890	29.6	158,206
2001	38,299	5,753	10,492	27.4	150,100
2002	34,216	5,496	11,589	33.9	159,996
2003	30,911	5,213	12,753	41.3	163,280
2004	34,727	4,937	13,233	38.1	160,54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 RPC 유통량은 자체매입 + 산물수매 + 공매벼 매입 + 농가수탁물량임

반면, RPC의 농가벼 자체매입량은 1995년 140만석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027만석으로 급증하였다.

산물처리시의 경제성과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산농가의 산물출하 희망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RPC들은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하는 한편,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품종을 통일하고 공동 농작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의 원료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유통계열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김완수)

## 2. 쌀생산조정제 실시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유예조건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WTO농업협정문상 허용보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2-2-27> 쌀생산조정제 지원실적 및 '05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사 업 량(ha)		26,357	24,648	24,864
사 업 비 (국고보조)	계	80,492	76,657	79,123
	보 조 금	79,683	75,850	78,303
	관 리 비	809	807	820

\* '03, '04년은 실적

2003년은 26,357ha, 2004년은 24,648ha의 면적이 약정이행 되었으며, 2005년도는 24,864ha의 사업량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산조정제 사업성과는 매년 25~26천ha의 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음으로써 70~80만석의 생산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영국)

### 3.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품·흉의 차가 크고,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에 대해서는 재배의향 파종실적, 작황, 가격동향 등 농업관측 정보를 조사하고 동 관측자료를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심의 분석한 후 농업관측월보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전산정보화하여 이용자들이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표 2-2-28>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218.9	60,994	586.6	390,786	740.0	563,402	848.0	665,718	775.5	776,807	911.3	828,310
정부수매 비 추	8.9	17,914	57.5	24,909	14.6	18,534	26.4	24,609	1.7	2,512	0.7	1,093	-	-
고 추	3.5	15,204	-	-	-	-	-	-	-	-	-	-	-	-
마 늘	1.1	1,602	14.5	16,759	14.6	18,534	16.0	21,993	1.6	2,489	0.7	1,093	-	-
양 파	4.3	1,108	43.0	8,150	-	-	10.4	2,616	(96톤)	23	-	-	-	-
민간수매	42.3	8,805	76.6	18,566	45.6	20,848	56.8	25,028	44.0	25,333	37.8	23,564	33.3	21,538
마 늘	20.2	8,093	14.1	11,566	14.9	14,079	17.8	17,123	18.7	19,556	17.7	18,010	12.8	16,386
양 파	22.1	712	62.5	7,000	30.7	6,769	39.0	7,905	25.3	5,777	20.1	5,554	20.5	5,152
고 추	-	-	-	-	-	-	-	-	-	-	-	-	-	-
정부출하 조 정	22.8	1,753	3.8	217	28.4	1,404	56.8	3,765	60.7	7,873	-	-	89	4,572
계약재배	-	-	81	17,302	498	350,000	639	510,000	740	630,000	737	752,100	789	802,20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또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 8,022억원을 조성하여, 2004년에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양파, 대파·고추·당근 등 노지채소에 대하여 산지농협과 농업인 간에 597천톤을 계약재배하고,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토마토 등 시설채소 192천톤에 대해 출하약정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성출하기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켰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주요 과수에 대하여 계약출하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04년 사업비는 2,653억원으로 '03년 사업보다 251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도 전년 158천톤에서 '04년에는 161천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참여조합에 대하여 최소 사업신청의 물량의 상향조정(100톤 → 200톤), 사업 부진 조합의 사업대상 제외 등 사업 추진 요건을 강화하여 과실계약 출하사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농가의 경영안정도모와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04년도에도 단감을 과수 자조금사업 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전년도 975백만원에서 '04년에는 1,582백만원으로 607백만원을 확대지원 하였다. 특히,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은 (사)제주감귤협의회를 중심으로 '03년에 이어 '04년도에도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여 생산자(단체)의 고품질 과실의 출하의식 제고와 더불어 '03년이어 '04년도에도 감귤의 가격이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최낙현)

#### 4.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돼지고기는 '97년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생산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산지가격이 낮을 때는 수매비축 하였다가 높을 때 방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가 '04.4.1부터 도축장

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돼지로부터 의무적으로 거출하고 있는 양돈자조금(두당 400원)의 100%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조성된 자조금은 등·안심, 후지 등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를 통한 부위별 수급안정을 위해 TV·라디오 광고, 이벤트 실시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2-2-29>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쇠 고 기	5,438	7,414	8,284	9,127	9,419	8,744
돼지고기	2,539	2,474	2,572	2,604	2,378	3,406
닭 고 기	2,602	2,356	2,528	2,149	1,854	2,481
계 란	926	774	981	858	865	1,179
우 유	538	603	611	608	586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가격임

양계는 사육수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수매비축, 노계전문 도계장 시설보완자금 지원, 신문광고·요리강습회 개최 등을 통한 소비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닭고기는 계절적 수요변화, 짧은 생산주기, 사육농가들의 입·출 용이성 등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 및 협회를 통한 닭고기의 내수·수출 촉진, 입식차제 등 민간 수급 조절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TV광고 위주의 소비홍보 사업을 라디오광고, 지하철광고, 신문·잡지 광고 등으로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맛대맛' 등의 기획프로그램을 방영하여 광고효율을 제고시켰으며, '여름철해변 돼지고기 축제' 지원 등 시의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수급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양계는 닭고기·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 체계 확립 및 구조적 가격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부분육 유통을 확대하고, 계란의 품질을 포함한 등급제를 확대하여 가격 및 품질차별화를 유도하였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신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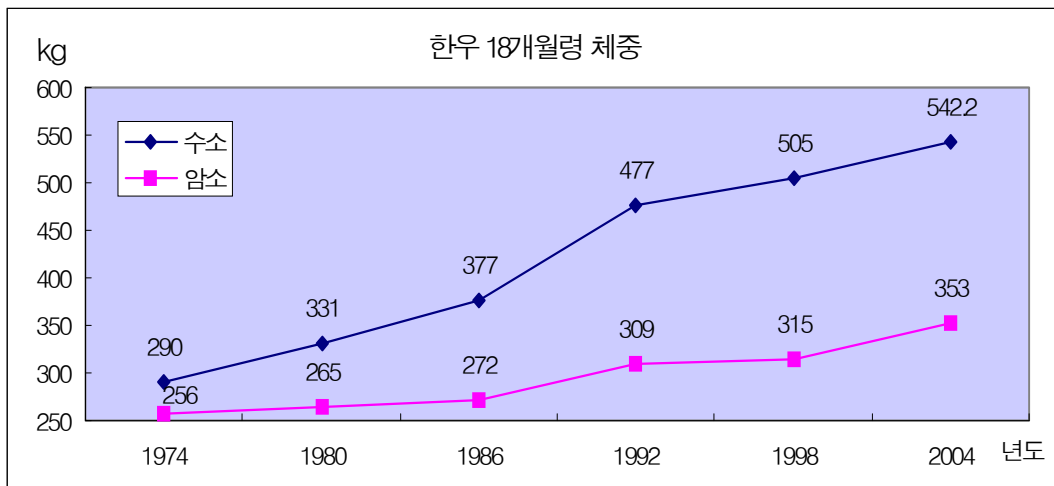
## 5. 가축개량 활성화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2004년에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 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한우개량은 중장기 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개량농가의 등록우를 대상으로 우량 암소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계획교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을 추진한 결과, 작년도 실시한 한우개량추세조사에서 보듯이 한우 수소 18개월령의 체중이 542.2 kg로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는 1974년 이후 연평균 8.8 kg, 2001년 이후 연평균 10.1 kg씩 증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도 가축개량 성과를 보면 <표 2-2-29>과 같다.

<그림 2-2-1>

한우개량 추세도



&lt;표 2-2-30&gt; 2004년도 가축개량 성과

축종	형질	2000	2004			
			목표(a)	실적(b)	b/a(%)	
한우	18개월령 비거세우 체중(kg)	510	550	542.2	99	
	거세우 등심면적(cm <sup>2</sup> )	80	86	83	97	
젖소	초산우 산유량(kg)	7,200	7,720	8,019	104	
	초산우 유지율(%)	3.6	3.6	3.8	106	
돼지 (요크셔)	일당증체량(g)	961	962	1,073	110	
	등지방두께(mm)	12.3	11.8	11.8	100	
	사료요구율	2.25	2.20	2.17	101	
닭	산란계	산란지수(개)	285	292	320	110
		사료요구율	2.33	2.29	2.05	112
	육용계	6주 육성율(%)	98	98	98	100
		6주 체중(g)	2,195	2,229	2,544	114

※ 자료 : 2004 가축개량관련자료(축산연)

그러나 소규모 한우 개량농가의 경우 관리대상 등록우의 이동이 잦고, 그 유전능력 조사 및 기록에 관한 기초자료도 관리가 부실하거나 오류가 많아 이를 개선하여 유전능력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작년 부터 한우 개량농가의 참여기준을 호당 등록우 2두 이상으로 높여 관리를 내실화 하였다. 2004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24,070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126,049두 중 기록관리가 되는 81,704두에 대하여 관리조합에 관리비 2,75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72,690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53,829두에 대한 조사사례비 2,692백만원을 개량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31두와 보증씨수소 12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45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411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

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소 개량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소에 대하여 경영혁신과 한우 정액가격을 현실화 하고, 수지개선을 통해 사업소에 지원되는 축산발전기금의 결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젖소개량은 낙농가 3,922호에 암소 177,369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110,434두에 대한 검정비 총 2,054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질병 때문에 북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되어 새로운 보증씨수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작년 젖소 정액 공급실적은 이미 확보된 보증씨수소 18두에서 생산한 국내산 정액 449천두분을 낙농가에 공급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젖소개량은 지속되어 2004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두당 1,649kg 더 높게 나타났다.

○ 2004년도 국내 젖소 두당 평균산유능력 추이(305일 기준)

- 검정농가 : (2002) 8,761 → (2003) 8,899 → (2004) 8,935kg
- 일반농가 : (2002) 7,017 → (2003) 7,102 → (2004) 7,286kg  
                   + 1,744                   + 1,797                   + 1,649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검정사업 위주로 추진하였다. 종돈업은 개량 촉진과 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2003년 12월 26일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종돈업체가 종돈과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종돈혈통증명서나 번식용 씨돼지혈통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시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의무화 하여 개체 추적·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돼지의 육질 개량을 위하여 종돈업체·종돈검정소와 정액처리업체가 보유한 종돈 5천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증후군 유전자(PSS) 검사를 실시하여 물돼지 발생 유전자를 지닌 종돈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고, 종돈의 육량형질 이외에 육질평가를 위한 검정기준 보완하였다. 그리고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40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



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40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은 양계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도 가축개량사업의 자금 지원실적은 <표 2-2-30>와 같다.

<표 2-2-31> 2004년도 가축개량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4 실적		2005 계획		'05/'04 대비(%)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① 한우개량		15,758		18,923	20.1
○ 개량농가육성	천두	5,473	천두	6,710	22.8
- 조사사례비	54	2,691	60	3,000	11.8
- 관리비	82(126)	2,753	80(130)	3,600	30.8
- 검정우(♂)	6	29	-	110	3.8배
○ 한우정액공급	1개소	10,285	1개소	12,213	18.7
② 젖소개량	천두	5,650	천두	7,473	32.3
○ 유우군검정	113(177)	2,127	140(180)	2,374	-
○ 젖소정액공급	1개소	3,523	1개소	5,099	44.7
③ 돼지개량		361		380	5.3
○ 돼지검정등	39천두	157	50천두	185	17.8
○ 검정시설장비	1개소	204	1개소	195	△4.4
④ 닭개량		267		230	△13.9
○ 닭검정	40천수	140	44천수	210	50.0
○ 검정시설장비	1개소	127	1개소	20	△84.3
⑤ 종축등록		216		399	84.7
○ 종축등록등	1개소	186	1개소	55	△70.4
○ 품평회·박람회	2건	30	4건	344	11.5배
⑥ 신기술보급등		47		46	2.1
합 계		22,299		27,451	23.1

※ ( )내의 한우는 전체 관리대상두수이며, 유우군검정은 자체 사업분이 포함됨  
(축산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염순)

## 6. 우유수급안정대책

원유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04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6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2만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5, 가공시유 26, 유제품 31)하고 나머지 34만톤을 분유로 가공하여 전년도 보다 잉여량이 5.5%감소하였으며, 낙농진흥회의 경우 61만톤을 집유하여 49만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톤은 용도별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잉여량이 전년도 보다 40% 급감하였다.

\* 전국 분유 가공량 : (’01) 30만톤 → (’02) 50 → (’03) 36 → (’04) 34  
 진흥회 잉여량 : (’01) 20만톤 → (’02) 31 → (’03) 20 → (’04) 12

### < 우유 수급상황 >

	'01	'02	'03	'04
- 생 산 :	234만톤	254	237	226
- 수 요 :	305	309	304	311
· 시 유 :	157	150	163	161
(백색시유)	(140)	(131)	(139)	(135)
· 유 제 품 :	148	159	141	150

\* 유제품 수요량은 수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여 포함된 수치임

집유일원화를 통한 수급조절 효율화를 위해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였으나, 집유일원화율이 27%에 불과하고, 낙농진흥회는 가공·판매 기능이 없어 유업체 계약량 이외 잉여량을 정부 재정에 의해 단순 처리하는 등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집유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발전 중장기대책 방안을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반영(’04.2.23)하였다.

생산자, 유업체대표 및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집유체계 직결전환 및 기준원유량 조정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낙농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낙농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에 원유가격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자측과 유업체측의 합의에 의해 원유 기본가격을 13% 인상('04.9.14)함으로써 최초로 민간 자율에 의해 원유 가격을 조정하였다.

한편,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목장, 3대 가족소품 등의 이벤트 및 인터넷을 통한 우유 테마송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용 학습지도서를 개발하였으며, 국산 유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면역활성 발효유 개발 등 6개 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기술 교육을 3개교(중부권 2, 남부권 1)에서 실시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송광현, 행정사무관 이범민)

##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04.11.11일 쌀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이 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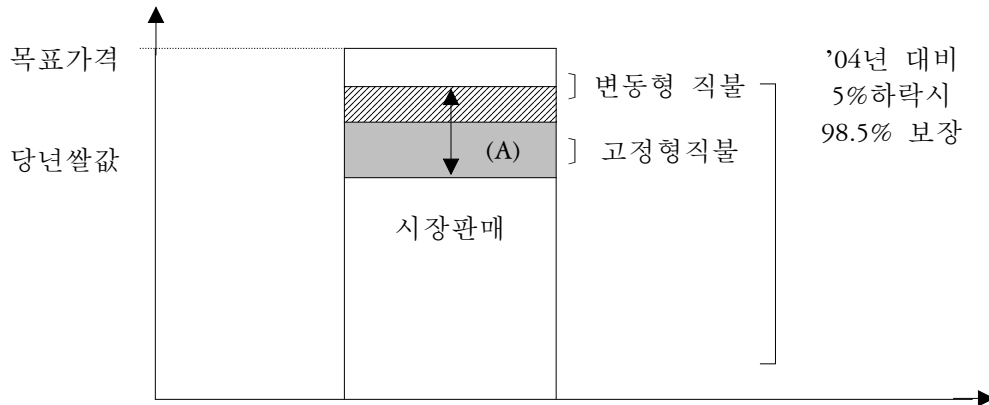
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인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05.7.1부터 시행하였다.

'05.7.1부터 시행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일반농법과 친환경농법과의 소득 차이분을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WTO협정에 따라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지난 2002년도 도입된 이후 쌀값 안정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질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수확기(10월~익년1월)평균가격을 감안해 정하며,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은 '01~'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만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직불금은 그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형직불금은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60만원을 벼 재배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 지급한다. 예컨대 2004년 산지쌀값 162천원 대비 5% 하락하더라도 산지쌀값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목표가격대비 98.5% 수준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으로 계획영농이 용이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상당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접지불 금액(A)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보전수준(85%) >



※ 목표가격 : 170천원/80kg, 3년단위 변경

※ 대상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소득정책과 사무관 유창상)

#### 나.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까지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 영농이행단계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

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을 ha당 524천원 지원하도록 하 되, 농가당 최소 1천m<sup>2</sup>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 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불금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 시행전인 1999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약 14% 줄어들었으며, 농약 사용량은 논벼는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등은 증가 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논·밭 각각 인증수준별 인센티브 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유기인증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이다.

이로인해 밭단가는 저농약인증은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 천원이고, 논은 논농업직불금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인증은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했다.

2004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논·밭 모두 2003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03년 30억원에서 '04년 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 논·밭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논 단가도 대폭인상하여 예산을 114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표 2-2-32>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ha, 호)

	1999~2001	2002	2003	2004
지 원 액	17,121	2,757	2,988	4,507
사업면적	31,208	5,274	10,459	12,827
농 가 수	54,939	6,589	12,195	14,520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윤영렬)

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산간·오지·도서지역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주민의 소득이 낮고, 교육·의료·문화 등의 여건도 취약하여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이들 지역의 농업기반이 우선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 기능도 함께하고 있으며, 2005년은 2004년에 이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중 경지율(22% 미만) 및 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를 기준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초지로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었다.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400천/ha, 초지는 200천원/ha으로 이중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였으며, 농가당 지급규모는 하한면적은 0.1ha,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다.

직불금 지급시 마을에서는 보조금의 30%이상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에 활용토록 하였으나 일부지역에서는 10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농가는 폐비닐·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제초작업 등 농지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사업 3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표 2-2-3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단위 : 천ha, 백만원)

			2004년	2005년
사 업 량			31	31
사업비	계		11,852	12,714
	보조금	소 계	11,638	12,494
		국 고	8,147	8,680
		지방비	3,491	3,814
	관리비(국고)		214	220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읍·면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직불제가 정착되면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유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가.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추진

#### (1)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희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7.2)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 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10.31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 지원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3.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2) 부채대책 내용

### <2004 농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①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수준 → 1.5%) 및 상환기간연장(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② 2001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 ③ 2001대책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 ④ 2001대책으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상환기간연장(3년거치 7년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⑤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5%, 7조원)
- 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연이율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04지원 2,000억원)
-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중전 20%)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 정당시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중전 30%)

## (3) 부채대책 추진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부채경감대책 중 농업인의 신청이 필요없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2001지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2004.3.5일자로 일괄 조치하였으며, 시행초기에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농업전문지에 광고게재, 조합별 프랑카드 게시, 리후렛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6,000부) 부착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신청기한을 당초 2004년5월31일까지에서 2004년12월20일까지(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신청은 2004.12.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일선 현지점검,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5월29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지침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총부채 1억원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초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이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3개 읍·면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소에서부터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004년 9월 30일에는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추가 지원과 관련 그동안 신청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채경감대책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2003말 대출잔액~1999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2000~2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 까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를 전업농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에서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000만원이상인 농업인에서 2,5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농업인 신청일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에서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향후 1년내

<표 2-2-34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2004.12.31일 현재)

(단위 : 천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A)	신청 현황		지 원 결정액	지원액 (C)	비율(%)	
		건수	금액(B)			(B/A)	(C/B)
정책자금 상환연기	80,409	422	79,801	46,877	36,448	99.2	45.7
2004상호금융대체자금	66,500	512	73,731	43,502	35,057	110.9	47.5
연대보증해소자금상환연장	4,526	14	3,303	2,937	1,877	73.0	56.8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5	1,987	1,840	1,266	99.4	63.7
계	153,435	953	158,822	95,156	74,648	103.5	47.0

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에서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2.1.1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에서 2001.1.8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심사·지원이 이뤄지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박정훈)

##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1)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변동의 차가 크고, 특히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어 농업경영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해 나가고자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 (2) 추진 경과

1999년 9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도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0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3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 (3) 추진 실적

2001년에 사과·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실시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02년 시범사업품목을 복숭아·포도·단감·감귤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에는 시범사업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과·배에 대해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2004년에는 과수 6개 품목에 대해서 전국적인 본사업

으로 확대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에 보험실시 전품목에 대해서 본 사업화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농업인의 재정여건을 감안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가입을 쉽게 하였다.

- 국고지원율(순보험료) : ('01) 30% → ('02) 50 → ('03) 50 → ('04) 50  
 (운 영 비) : ('01) 50% → ('02) 70 → ('03) 80 → ('04) 90

또한, 2002년도에 자연재해 범위에 호우를 추가하고 보험료 분할납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태풍기준을 최대풍속 14m/sec · 최대순간풍속 20m/sec에서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로 완화하고, 보험료 할증 · 할인제 도입, 초과보험가입시 가입금액 감액 및 보험료환급제도 도입, 단감 태풍낙엽 피해추가, 사과 · 배의 과수보상 추가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사업초기로서 농업인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평균 18% 선을 유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2-35>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대상품목(*주1)		사과 · 배	사과 · 배 · 복숭아 · 포도 · 단감 · 감귤	좌동	좌동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8,204	18,620	16,521	24,866
	가입면적(ha)	4,114	10,992	11,001	17,546
	가입률(%)	17.6	18.3	15.2	18.2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30	50	50	50
	운영비(%)	50	70	80	90
	국고지원액	2,377	8,590	16,224	37,803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411	6,953	10,149	3,350
	보험금	1,380	34,796	49,944	13,587
	손해율(%)	45.8	434.5	290.3	42.3

\* 주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 · 배(2003), 복숭아 · 포도 · 단감 · 감귤(2004)

그간 농작물재해보험은 2002년 태풍“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등으로 약 2만여 농가에 보험금 997억원을 지급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재보험사업에 참여한 삼성·현대 및 해외재보험자들은 2002년“루사” 피해로 큰 손실을 입고 2003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철수 하였으며, 2003년 단독으로 보험인수한 농협 또한 태풍“매미”로 큰 피해를 입어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4년도에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원·보험개발원·민영보험사 등 관계기관과“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를 적극 구성·운영하여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국가재보험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신설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2004.12.28일 국회 통과) 하여 앞으로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가재보험제도 :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한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보험 책임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제도(재보험사업)를 말함. 즉,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와 같은 거대재해 발생시 거대재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국가에서 보장하여 주는 제도임.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조강제)

####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점차적으로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고 지원예산도 2004년 대비 45.1% 증가한 2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36>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P)
소	7.0	7.2	7.6
돼지	43.4	49.9	55.1
말	2.1	1.9	2.5
닭	17.4	22.3	23.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2005년에는 공제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닭·오리의 가금공제에 평·메추리를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가축공제상품 다양화 등 가축공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2005.5월~2006.2월)이다.

(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박홍식)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농업재해지원은 농작물 및 농림시설물의 피해복구지원과 생계지원을 위한 이재민구호 등 간접지원의 두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구지원단가 인상 등 재해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농업인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여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됨으로서 피해농가의 복구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 및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작물 대과대, 가축입식비, 농경지 및 농업시설 복구지원 기준단가 현실화와 농경지 및 농림시설의 보조율 상향조정 및 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지원 철폐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2003년도에는 과수 및 화훼류 8개 품목의 대과대 단가를 3~323% 인상하고, 수리시설 26종의 복구지원단가도 1.2~8배 인상하여 현실화하였다.

2004년도에는 과수 및 화훼류 2개 품목의 대파대 단가를 7.9~18.7%인상하고, 농림시설물 등 9종의 복구지원 단가도 최대 156.8% 인상함과 아울러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과수시설 등 과수재배시설의 복구지원 단가를 신설하는 등 재해지원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서기관 김후동)

##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국민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자연환경 선호,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거점



농촌관광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마을은 공모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마을별 사업추진계획 평가 및 전문가 현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2003년까지 88억원(국고 44, 지방비 44)을 투입하여 44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64억원(국고 32, 지방비 32)을 투입하여 32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도에는 입문과정, 지도자과정, 전문가과정 등 1,08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촌관광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나, 도시민 회원화 및 대기업과의 1사1촌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의 토고미마을, 친환경농업과 체험·농산물 판매와 연계하고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 문당리마을, 마을주민, 출향인, 귀농 예술인이 협력하여 농촌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이 조화된 '부래미'라는 특화된 브랜드를 창출한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마을 등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과 농업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신문·방송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초등교사·학생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04년도에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사회적 운동인 민간주도의 1사1촌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2003년 11월 개최된 한·칠레 FTA 체결과 관련 '경제 4단체와 농민단체간 간담회'에서 논의 되었고, 2003년 12월 11일에는 대통령, 경제5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여 '농촌사랑공동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는 '1사1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2004년 5월에는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6월에는 경

제5단체와 농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협력 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2004년 말까지 총 2,473건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으며, 농촌마을방문,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농림부(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아름마을), 해양수산부(어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산촌개발사업) 등 관계부처의 역할, 공동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각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도농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관광 컨설팅, 교육, 홍보업무 등 도농교류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농업기반공사내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2004년 4월)하여 운영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종민, 사무관 전영미)

## 2.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84년부터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2014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온 사업이며, 사업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98이후 IMF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입주업체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망 확충과 수도권내 입지부족 등으로 지자체나 기업체로부터 농공단지를 찾는 수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매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신규추이 : ('99) 1개소 → ('02) 4 → ('03) 11 → ('04) 12 → ('05) 10  
2004년에는 농공단지 신규 12개소를 포함하여 30개소에 302억원을 지원하

여 '04년까지 305개소를 완공하였으며, '04년말 현재 농공단지의 분양율은 98.2%, 가동율은 90.2%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37>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구 분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양율(%)	98.2	94.2	95.7
가동율(%)	90.2	84.7	89.5

자료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4.12)

또한 2004년도에는 농공단지의 종류를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되, 지역특화업종 비중(업체수, 면적기준)을 3/4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특화단지 조성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한도를 10억원 이내에서 2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중현)

###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2004년도에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신규건설은 최소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가능성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업체 중 회생 불가능한 부실업체는 조기 퇴출하고 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운영활성화(시설개보수, 현대화, 운영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품질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 홍보능력이 부족한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의 홍보물 제작지원, 포장(용기)디자인개발, 직거래장터 행사 등을 통하여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lt;표 2-2-38&gt; 농산물가공산업 추진계획(2004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가공공장 건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판매· 홍보	합 계
	신규	시 설 개 보수	소계			
용자	개소수	52	1	6	221	227
	지원액	15	2	17	916	933
보조	개소수				-	-
	지원액				27	27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우양호)

##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농촌 복지·교육·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

DDA협상 진전, 쌀 재협상,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2년 이후 제정을 추진하여 왔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04.2.16), 제정·공포('04.3.15, 법률 제7179호)되어 '04.6.6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시행령도 제정·공포('04.6.5)되어 '04.6.6부터 시행되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특별법의 시행으로 농산어촌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200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된 농어촌 특별세를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 분야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제정 이전인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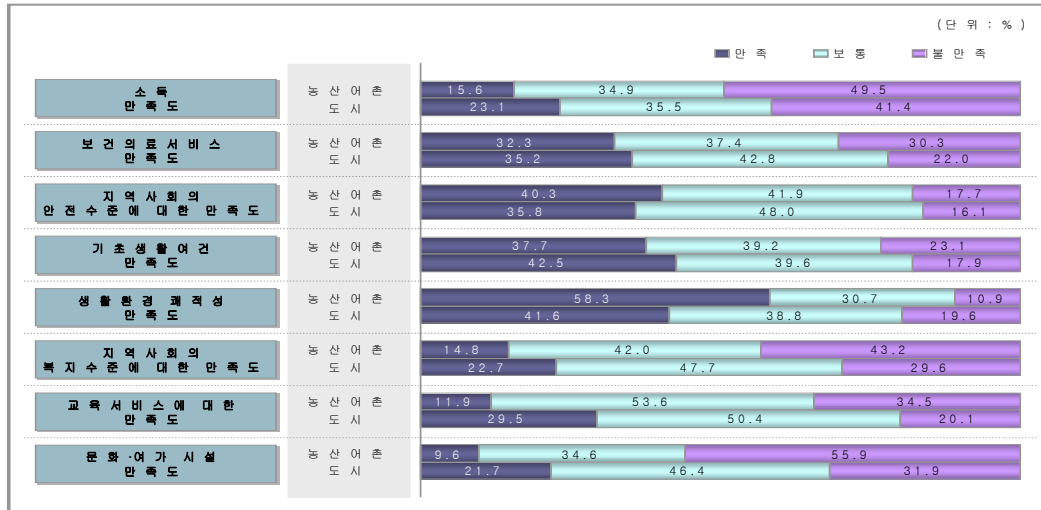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안('04.6.21) 및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추진방안('04.7.2)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농업기반공사·농협중앙회 등의 전문가로 T/F 팀을 구성하였으며, 지자체(시·도), 연구기관, 학계,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실태조사 방법 및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을 확정하였고,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04.8~'04.11월까지 5,000가구(농산어촌 3,500, 도시 1,50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농산어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시설, 교육, 복지,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쾌적성,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확정 통보(2004.9.21)하였으며, 시·도, 시·군 업무담당자의 교육도 실시하여 업무담당자들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방안을 설명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협의회 및 복지·교육·지역개

<그림 2-2-2> 농산어촌의 삶의질 실태조사 결과 종합



발 분야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2004.12.20)를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15개부처)과 농업인단체 대표, 농촌문제 전문가등 25명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위원회로 출범 (2005.12.8)하였으며, 동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이 되어(2004.12.8) 농산어촌지역의 복지·교육·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이 완료되었다.

(농촌정책과 서기관 한종현)

## 2. 농특세 연장 추진

UR협상으로 인한 농·어업부문의 피해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0년간 15조원을 농어촌에 지

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DDA협상, FTA 확산으로 농업·농촌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소 미흡했던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투자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공감대가 전국민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 2004년도 만료되는 농특세를 2014년까지 연장 조치하여 향후 10년간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농촌 발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표 2-2-39> 2005~2014년 농특세 사업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소 요	%	비 고
합 계		200,100	100	
농 어 업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소 계	93,151	46.6	
	○농어업인 연금	11,02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1,470		
	○농어촌의료서비스	4,9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13,000		
	○농업인 재해공제 및 보험	11,762		
	○영유아자녀 양육비	2,595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어가도우미	1,428		
	○농어촌복지여건개선 등	26,920		· 위원회 인정사업 : 5,000
농 어 촌 교 육 사 업	소 계	30,929	15.4	
	○농어촌학생급식비 및 학자금	4,522		
	○농어촌교육여건개선	24,000		· 위원회 인정사업 : 24,000
	○농어업인 직업훈련	140		
	○농림수산계학교지원	1,367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900		
농 어 촌 지 역 개 발 사 업	소 계	76,020	38.0	
	○농촌마을종합개발	50,340		
	○녹색농촌체험활동	840		
	○농공단지조성	4,100		
	○조건불리 직접지원	8,640		
	○어촌종합개발 및 국고여객선건조	3,670		
	○산촌종합개발	2,733		
	○지역개발관련 인프라구축 등	5,697		· 위원회 인정사업 : 5,000

### 3.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국 면지역중 오지·도서·무인면을 제외한 정주권개발 대상면과 광역시 자치구중 준농어촌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을 정비하고, 면지역내의 중심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마을 정비는 물론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마을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755개면과 15개 자치구에 대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 199개소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향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785개 면과 15개자치구에 대하여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2단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30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면당 3~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30억원(국고 100%),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구당 2~3년에 걸쳐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에는 총예산 2,631억원(지방양여금 2,346, 지방비 5, 용자 280)을 투입하여 152개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마을내도로정비 211km, 상수도 15개소, 하수도 65km, 마을간연결도로 110km,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125개소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은 신규 7개 지구를 포함한 42개 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조성을 추진하여 2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계속시행지구 21지구는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민 및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2개소를 착수하였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3년말 33.0%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 산재된 자연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부분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2-2-40>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전 국		48,824천명	43,633	89.4	
도시	대도시(광역시)	23,053	22,744	98.7	98.0
	중소도시(시)	16,431	15,946	97.0	
농촌	읍 부 지 역	3,903	3,152	80.8	52.9
	면 부 지 역	5,438	1,792	33.0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3)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에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였으며, '04년도에는 748억원을 지원하여 440개소를 개발하므로 2004까지 4,751개소를 완공, 1,032천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이성홍)

다.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으로 가꿈과 동시에 농가 부녀자의 가사노동을 절감시켜 주기 위하여 추진한 「부엌개량+목욕실 설치」 사업은 농가당 490만원의 농특회계 자금을 연리4.0%,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488농가가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 시설, 작업대 설치 등 입식부엌으로 개선하여 가사노동력을 절감하고 동선을 절약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가족간 가사노동 분담의 계기를 조성하였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은 마을 및 농가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주거공간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입하여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합리적인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농촌주거생활의 가치를 향상은 물론 쾌적성과 편안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5마을 28호의 민박농가를 대상으로 다용도 공간 설치 등 수납공간계획에 의한 주택내부 리모델링 등 생태 환경 조성, 문화생활·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친환경화장실은 농업인들이 들판에서 일을 할 때의 생리적인 불편을 덜어주고, 재래식 화장실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수질오염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88개소에서 설치하였다. 실태조사결과 설치 장소는 마을 공공장소 57.5로 가장 많았고, 들판에 설치 31.1%, 기타 지역에 설치 4.7% 수준이었다. '부엌개량+목욕실설치' 사업은 '04년에 완료를 하고 '05년부터는 지방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또한 '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 재량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친환경 생활양식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전태마마을이 조성되는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생활지도사 김희순)

#### 라.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열악한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농업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140개 마을에 70억원을 지원하여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등의 시설과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마을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연간활용일은 건강기구실은 평균247일, 찜질방은 평균 152일이었다. 차제에 건강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운영비 절감형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회원제 등 자부담 권장, 소득사업시설 병행설치 등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충당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82명(4.16일)을 대상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연찬회를 추진하였고 사업평가를 위해 50명(12.22일)을 대상으로 '04 활동실적 및 사업 성과, '05년도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계화가 어려운 분야의 농업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향상 및 농부중예방과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을 40개 시군에 추진하여 총 4,424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자세를 위한 작업대, 중량물 운반개선을 위한 수확차 등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구를 보급하였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사업은 오이, 버섯재배농가를 중심으로 6개소 60농가에 지원하여 수확물의 선별, 포장, 출하작업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를 13개소 142호에 수확운반차, 딸기선별대, 원예용장갑 등을 보급하여 작업능률 향상, 작업자세 개선, 피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농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지방 자체적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106개소, 마을공동쉼터 237개소, 들판작업 휴게소, 농작업보조구시범촌 등 설치하고, 농작업 보조기구 28,470점, 농작업피복장비 161,416점을 보급한 결과 작업능률 향상, 작업자세 개선, 피로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자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농작업보조구 보급,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 등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 환경개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농업인 생산적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주산단지의 유해 작업환경과 무리한 농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모델시범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농작업 재해관리 및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생활지도관 오승영)

### 마.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2002년부터 시작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마을단위 시범사업으로 '02년부터 '03년까지 조성한 27개소에 더해 '04년에 18개소를 추가로 지정 육성하여 총 45마을을 전국적으로 선정 육성하였다. 사업비를 개소 당 1억원씩 2년간 지원(개소 당 2억원)하여 마을별로 고유의 테마를 발굴, 마을개발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발전을 위한 현지 연찬회(2회 182명)와 관련 세미나, 마을 운영자 교육, 업무담당자 워크숍, 현장 컨설팅, 평가회를 개최하여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관계자들의 사업추진 능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2004년 신규로 지정된 18마을의 홈페이지와 동영상 제작, 지원하였고, 포탈사이트(www.go2vil.org) 방문자수 100만 돌파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실시하였다. 홍보물은 가이드북 및 리플릿을 14,000부 제작, 배부하였다. 제1회 취미여가박람회를 비롯하여 관련 박람회에 4회 참여하여 “테마마을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테마마을 집중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도시민 초청 테마마을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를 총 46회 1,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 처음 지정하여 육성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은 275%, 사업소득은 244%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45마을 전 마을을 대상으로는 올해 총 137,215명의 도시민이 테마마을을 다녀갔으며, 프로그램 운영, 민박 및 농산품 판매로 2,163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부, 농협에서 주관한 제3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3개 마을이 수상하였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녹색관광마을에도 테마마을이 13마을 선정되는 등 성과가 높았다.

2005년엔 신규로 21마을을 선정 육성하고 2010년까지 시군 센터 당 1개소씩 총 160개소를 시범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생활지도관 김은미)

####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 추진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70년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조성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촌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의 축소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축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쇠퇴와 인구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서비스산업의 쇠퇴를 가져오며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다시 지역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80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43%인 1,600만명이었으나, '90년 26%로 줄어들고 '00년에는 20.3%인 938만명으로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80년 1,083만명에서 '00년에는 403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표 2-2-41> 읍·면지역 인구 추이(1980-200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전 국 (A)	37,436,315	43,410,899	46,136,101
동 부	21,434,116	32,308,970	36,755,144
읍·면부(B)	16,002,199	11,101,929	9,380,957
구성비율(B/A)	42.7	25.6	20.3

\* 자료 :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최근에는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시장 경제규모를 상실한 면소재지 상권의 퇴조와 함께 주거는 농촌의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은 인근 도시에서 향유하는 생활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소득향상, 주5일근무제 도입, 국민관광형태의 변화 등의 대외적 여건변화로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도시근교지역은 전원주거단지개발, 농촌관광진흥, 체험활동의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 등 농촌과 농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농촌현실 속에 기존의 식량증산과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농촌지역개발은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쾌적한 전원주거공간, 농업체험공간, 국토보전공간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에 따른 개발수요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권이 같은 3~5개의 농촌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확충, 특성화 개발 및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영농권 등이 동일한 마을을 권역단위로 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게 개발유형을 설정하여 종합개발하는 상향식 지역개발방식을 지향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10년동안 1,000개 권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04년도 사업대상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예비계획 검토, 현지조사, 사업계획설명회 등을 거쳐 '04년도 사업착수대상지 16개 권역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20개 권역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사회 각분야의 저명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3회) 하였

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초 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워크숍(324명 참석)을 실시하고, 지역개발 주체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대표 합동 워크숍(326명 참석)과 사업권역별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재수)

## 5. 농촌의 교육·의료·정보화 등 생활여건 개선

### 가. 복지지원 개선사항

정부는 '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의 사회보장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04년도에는 농어민 건강보험료의 경감 확대 및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다 하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는 '03년까지 농어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납입보험료의 22%를 경감 지원하여 왔으나, '04년부터는 우리부에서 8% 추가지원을 하여 총 3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또한 '04년 7월부터는 시지역중 녹지지역,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게도 지원을 추진하였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04년 6월까지 최저등급(220,000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였으나, '04. 7월부터 표준소득월액 12등급(440,000원) 소득이하의 보험료의 50%를, 12등급 소득 초과는 12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최고 151,800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보상수준을 올해 1,000만원에서 '05년에는 1,5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199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담당하여 오다 2004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되어 지원하고 있다.

1인당 한 학기 지원금액을 2000년까지는 100만원, 2002년 150만원, 2003년 200만원, 2004년부터는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까지 지원실적은 201천명, 2,637억원이다.

<표 2-2-4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1994~1996		1997~2003		2004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40	401	135	1,637	26	599	201	2,637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농촌의 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에 편모농업인에 이어 2002년도에는 편부농업인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2003년도에는 인문계를 포함하여 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90년 사업시행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0ha 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임업인·어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고, 2004년부터는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까지 확대하였으며, 2004년도까지 총 1,602천명, 6,86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3>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1999	상 동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포함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2001	편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2	편부·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3	인문계 포함 전 고교생까지	상 동
2004	상 동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	상 동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표 2-2-4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1990~1992		1993~1996		1997~2004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626	148,179 (148,179)	400	173,806 (57,466)	576	364,060 (109,319)	1,602	686,045 (314,964)

주 : ( )내서는 국고지원액(1990~1992 100%, 1993~1996 1/3, 1997년이후 30% 부담)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 11개 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하고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지원실적은 총 33천명, 190억원이다.

&lt;표 2-2-45&gt;

##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1986~1992		1993~1997		1998~2004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9,446	4,135 (827)	6,235	3,050 (610)	17,042	11,825 (2,281)	32,723	19,009 (3,718)

주 : ( )내서는 국고지원액(20% 부담)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농촌사회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 제10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 가. 기본골격 및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간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농업협상은 2004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각 협상기구 의장단이 선임되어 협상준비 체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협상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 수립을 목표로 향후 협상일정을 확정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하여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을 합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4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 국내적 사정으로 상반기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당 기간동안 DDA 농업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를 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하여 각국

의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고관세 품목의 관세율은 대폭 감축하되,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내보조 분야는 무역왜곡적 보조가 큰 국가가 더 큰 감축 의무를 지도록 하며,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모든 수출지원조치를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별회의 과정에서 각 그룹들은 자국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과 공동으로 각국의 민감품목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적 관세감축방식 채택과 관세상한 및 의무적 TRQ 증량에 반대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특별회의를 거쳐 2004.6.30일 농업위원회 의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그동안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2004.7.16일 기본골격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후에는 각국의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배포된 초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각 그룹 및 그룹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4.7.30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회의를 통하여 드디어 2004.8.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2004년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 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동 기본골격의 합의는 DDA 협상이 출범이후 첫 합의를 이룬 것으로 지금까지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감안, 7월말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상황에서 도출된 것으로, 미국과 EU의 기본틀 합의에 대한 의지와 파국은 면하자는 개도국의 협조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지연되었지만 일단 향후 협상의 지속 여건을 마련한 첫 번째 합의라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농업을 비롯하여 비농산물, 서비스, 무역원활화에 국한된 이번 기본틀은 많은 구체적 쟁점들을 추후 세부원칙 협상단계로 유보시켜 놓아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진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번 합의과정에서는 특히 칸쿤 각료회의를 통하여 결속이 강화된 G-20의 주요국인 인도와 브라질이 합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이 선진국의 보조금에 대한 비판, 고관세에 대한 대폭 감축 주장 등 공세

적인 입장을 보여 미국, EU와 대립하는 협상구도를 나타내었다. 최종 협상 단계에서 이들 나라와 미국, EU 및 케언즈 그룹의 대표인 호주가 주요국 그룹(G-5)을 형성하여 협상 분위기를 주도한 것도 금번 합의과정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기본골격이 합의되기까지 개최된 4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국그룹인 G-10의 일원으로서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상한 및 의무적 TRQ 증량 저지에 집중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으로서는 개도국의 특별품목과 개도국 우대 긴급수입 관세제도 확보 등에 치중하였다. 특히 기본골격 초안 제시에 앞서서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G-10 각료들이 공동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G-10그룹 입장반영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고, 7월말 집중적으로 벌어진 협상에는 농림부 차관이 협상대표로 제네바 현지에서 파견되어 직접 협상에 참가, G-10(수입국 그룹) 공동기자회견 및 주요국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문제,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별도처리, TRQ 증량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G-10 수입국그룹, 개도국 그룹 등과 공조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G-20(수출개도국 그룹)와 미국의 관세상한 설정요구를 저지하고 추후 평가과제로 명시하게 되었고, 민감품목의 자기선정 원칙, 특별품목에 신축성 부여를 확보하는 등 G-20나 미국 등의 강한 주장을 완회시킨 성과가 있었으며, 수입국 및 개도국의 입장도 일부 반영되도록 하였다.

동 기본골격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면을 모두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많은 핵심 쟁점들을 향후 협상과제로 넘기고 있어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유·불리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며, 국내보조분야에서 종래의 감축대상보조(AMS)외에 최소허용보조(De minimis)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요인이나 감축 과정에서 일정수준의 신축성이 인정되었고, 신규로 블루박스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핵심쟁점들이 향후 후속 협상과제로 유보되어 앞으로의 세 부원칙 협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특히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율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던 관세상한 설정 저지,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TRQ 증량의 최소화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SP)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 등이 향후 협상에서 주안점을 둘 분야들이다.

2004년 하반기에는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세 차례의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DDA 농업협상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 등이 논의되었고,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농업보조금의 구체적 기준,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나. DD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대외적으로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이해관계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고 각계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동향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였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매 협상시마다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왔고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농업통상정책협의회 및 현장출장 등을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DDA 농업협상이 당초 협상일정을 넘겨 계속 진행됨에 따라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협상과 관련한 농림부내의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DDA 농업협상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신설하였던 1급 상당의 고위직(농업통상정책관)을 200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한편, 통상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본부와 해외 협상담당자로 배치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상정책협의회·통상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를 자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 2.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대응

### 가.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의 의미

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쌀의 관세화 유예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국들과 그 조건을 협상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만일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다면 이해 당사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으며, 쌀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해서 WTO에 계산 근거와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 나라가 제출한 쌀의 관세가 정해진 계산지침에 따라 바르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관세화에 따른 우리의 양허수정안이 바르게 고쳐졌는지에 대해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검증(certification)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것은 협상과는 다른 성격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관세화 유예 연장의 의미를 갖는다.

※ 쌀의 관세(상당치) 계산은 1986~1988년 3개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하되, 국내가격으로 대표적인 도매가격을, 국제가격은 실제 수입가격을 사용토록 되어 있다. 수입가격이 없을 경우 인접국의 수입가격이나 적절한 수출국의 수출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쌀 협상이 쌀의 관세화 유예를 향후에도 계속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쌀의 관세화는 실질적인 협상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관세화는 쌀 협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협상 없이도 가능

한) 선택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쌀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쌀 협상(관세화 유예) 결과 쌀 시장의 추가 개방 폭이 관세화시 예상되는 추가 개방 폭 보다 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쌀 협상은 우리나라의 쌀 시장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하는 양자협상이며, DDA 농업협상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협상이다. 그러나 쌀 협상은 DDA 농업협상과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쌀을 관세화할 경우 WTO에 제출될 쌀의 관세는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관세감축 방식에 따라 낮아지게 된다.

#### 나. 관세화유예의 조건

우리나라가 이해 당사국과 양자협상을 하여, 그 결과 상호간에 관세화 유예 연장에 합의할 경우 관세화유예가 연장됨. 이때 두 가지 제약요인이 수반 (농업협정문 부속서 5(B) 8항)된다. 첫째는 쌀 협상은 2004년 이내 종결되어야 한다.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2004년 내에 시작해서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해당사국에게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should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10년간(1995년~2004년) 관세화 유예의 결과로 기준기간쌀 소비량의 1%에서 시작하여 4%(20만 5천톤)까지 MMA를 증량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추가적”이란 표현으로 인해 향후 유예 연장시 MMA는 4% 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이란 표현은 이해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란 의미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 다. 대응방향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를 기본으로 한 우리의 입장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엄두에 두고 있는 상대국 기대수준 간에 차이와

협상 참가국간에도 입장과 요구조건에 차이가 있어 모든 상대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일안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국의 유예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 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쌀 협상은 농업인,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토대위에서 추진하되, 쌀 협상과 함께 쌀 산업대책도 여론수렴을 통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박희수)

### 3. 한·칠레 FTA 추진

####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칠레는 우리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적으며 남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FTA의 첫상대로 선정되었다.

2001년까지 양측간에 농산물시장 개방수준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교착상태를 보이던 협상이 2002년 2월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다시금 협상이 발동되었다. LA에서 개최된 고위급협에서 양측은 협상재개를 합의하고 양측은 수정된 양허안을 2003년 2월과 7월 각각 교환하였다.

5차 협상은 2002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칠레에서 개최하였는데, 양허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국은 협상의 조기진전을 위해 협상의 핵심분야인 양허안에 대해서만 별도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허안 별도협상이 2002년 9월 11일부터 13일,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2차례의 별도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양허안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6차협상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농산품 및 공산품 분야에서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일부 미결쟁점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였다.

2002년 10월 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금융투자와 정부조달 분야는 추가 실무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양허안 관련 미결쟁점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여 이를 칠레측에 통보하였으며 칠레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한·칠레 FTA가 타결되었다.

2003년 2월 15일 Lagos 칠레 대통령 방한시 양국 외무장관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2004.2.26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후 2004.3.2 양국이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04.4.1자로 FTA협정이 양국간 공식 발효되었다.

최종 타결된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과 신선사과 및 배는 FTA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포도는 11월~4월간에 적용되는 관세를 향후 10년간 균등철폐하고 5월~10월간에는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관세가 높거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DDA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맨더린, 자두 등의 품목은 소량의 TRQ를 제공하고 관세인하 문제 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한 품목중 국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7년~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기로 하였으며,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협정문과 관련하여 우선 양국은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SG : safeguard)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제도는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는 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에 제한이 없어 부패성 있는 농산물에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제3국산이 칠레산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축산물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여 칠레에서 도축된 것만을 칠레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 양국은 WTO/SPS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현재 싱가포르, EFTA와는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어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아세안·캐나다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 멕시코와는 예비협약 또는 공동연구를 종료하였고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로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 등이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 철)

#### 4. 남북농업협력 추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 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으로 북한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가. 정 부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중 정부차원의 지원액은 총 7억 3,593만달러로 전체 대북지원액의 63.4%를 차지한다. 정부는 1995년 쌀 15만톤, 2000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 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는 등 2002년까지 쌀 85만톤, 비료 41.5만톤을 지원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장기 저리 차관형식으

로 쌀 40만톤을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북한에 비료 30만톤을 무상지원하고 쌀 40만톤을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WFP, UNICE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간접지원방식으로 옥수수 등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간 인도적 지원은 적십자사와 남북경추위를 창구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2004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425만톤에 비해 1.4%증가한 431만톤으로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WFP, WHO, UNICEF 등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대북지원 채널을 통해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완화 및 남북관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한 반면, 개혁개방 및 남북경협확대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농업협력사업 추진은 미흡하였다.

#### 나. 민간지원단체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분야별 농업지원 및 기술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부터 2004년 말까지 북한에 총 4억 2,477만달러를 지원하였다. 1999년 2월 10일 이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적십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후 다른 민간단체도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다양해졌다. 2004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억 4,108만달러로 2003년에 비해 100%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이 26%이며 나머지 74%는 개별 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2001년의 경우 적십자사 창구 대 독자창구 비율이 34:66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적십자사 창구를 통한 지원이 소폭 축소된 것이다.

2004년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일반구호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고, 농업복구 37%, 보건의료 22%이다.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농발협, 평화의 숲, 월드비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한국JTS,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나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사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체간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재원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규모사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지만 민간차원의 지원

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에 점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정책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 제11절 한·칠레 FTA비준 후속대책

### 1. 추진배경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04.2.16) 및 양국간 외교서한 교환으로 '04년 4월 1일부터 FTA가 공식 발효되고, FTA지원특별법('04.3.2 국회통과)도 협정 발효일에 동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산물 수입관리 방안 마련 및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지원 기금 설치, 시행령제정, FTA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하였다.

### 2. 지원대책 수립 및 기본 추진방식

정부는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10년의 과수산업 비전을 설정하고, 과수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7년간 1조 2천억원('04년 1,607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품질로써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개방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04.3.31)하였다.

FTA지원대책은 지방농정활성화와 투융자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지방자율사업은 지역여건의 반영이 필요한 과수생산·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제고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사업은 전국 단위로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인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 과원영농규모화 등 주로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율사업은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및 생산단지 조성, 농기계 임대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등 생산·유통 관련 사업을 지자체나 생산자단체가 해당 지역이나 품목의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는 민간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3단계(비공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평가)의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계획을 제출한 생산자 조직의 조직화 및 유통규모화를 위하여 동 조직과 출하협약을 맺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앙추진사업중 폐업지원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농가가 폐원이나 매매를 통해 과수농사를 그만둘 때 지원하며, 폐원시는 3년간의 순수입액(지원단가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복숭아 3,316천원, 키위 4,159천원)을, 매매시는 1년간의 순수입을 지원한다.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융자금을 매매(연리 3%)와 임차(무이자)시 지원하며, 소득보전직불제는 시설포도, 키위에 대하여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시 지원하는데 해당작물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미만으로 하락시 가격차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 3. 지원대책 추진실적

정부는 FTA지원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법적·재정적 지원체계의 완비가 시급하여 FTA지원특별법('04. 3.2), 시행령(4.1), 시행규칙(5.24)을 제정하여 법적체계를 완비하였으며, 법에 따라 FTA지원기금 1조 2천억원을

설치하고, '04 FTA기금운용계획(1,607억원)은 FTA이행지원위원회('04.4.27) 및 실무위원회(5.4)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5.25)에서 최종 확정하여 지원 대책의 재정적 체계도 구비하여 사업시행지침의 확정('04.5.31)과 동시에 FTA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하였다.

과수분야 FTA지원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FTA지원대책(안)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서 확정 등 각 단계마다 시·도, 시·군 공무원, 농업인, 품목단체, 지역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PCRМ 및 지원대책 홍보물 제작·배포, 광고, 기획특집 기사 게재 등을 통하여 FTA협상내용·영향, 지원대책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불안 심리 해소 및 정책홍보를 강화하였다

'04년 FTA과수생산유통지원(지방자율사업)사업은 총 91개의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제출('04.6.20)되었으나 민간 전문평가단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단계 비공개서면평가('04.7.8), 2단계 현장평가('04.7.13-7.16), 3단계 공개평가('04.7.22)를 거쳐 18개 사업계획만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04년 예산 967억원중 408억원(42.2%)만 지원하였고, '04년은 사업 첫해로 지자체별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어 지자체의 사업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지도도 실시하였다.

<표 2-2-46>'04년도 과수 생산·유통지원(지방자율)사업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계	생산시설	기반정비	농기계임대	APC	우량묘목	가공시설
'04년	보 조	22,829	13,663	3,788	846	4,382	150	
	용 자	17,925	16,395					1,530
	국고계	40,754	30,058	3,788	846	4,382	150	1,530

'04년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지원 대상자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폐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4,517ha(1,825억원)로 '04년 예산(247억원)의 8배 수준으로 신청되어 일시 과다 폐원시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하여 '04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하였고, 설문·현지 조사를 곧바로 실시하여 연차별 폐원지원계획을 조정하고, 신청농가가 폐업지원 연도를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폐원예정연도를 신청농가에 통지하였다. 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수경쟁력제고를 위해 선도농 위주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제는 지원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2-2-47> '04년도 중앙추진사업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농가수	면 적	금 액
과원 폐업지원	2,420	573	24,693
과원 영농규모화	310	273	21,400
소득보전직불제	-	-	-

아울러,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여 제3국산 우회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칠레산 농산물 수입급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될 긴급수입제한조치(SG) 구비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칠레산 수입관리 방안도 동시에 마련('04.4월)하였다.

#### 4. 지원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회 의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예산이 남더라도 성공가능한 사업에만 지원하였고, 국회 비준 등의 지연으로 행정적으로 연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체계 정비와 법령에서 정한 절차 수행, 지원대책 수립, 기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연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에 근거한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엄격한 심사체계 마련 등 지방농정 활성화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본토대 구축에 기여하였다.

지역설명회, 토론회, PCRМ, 홈페이지,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홍보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품목조직의 과수담당자 대상 설명회 및 현장지도 병행하여 농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로 인한 영향, 폐업지원 사업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일단 폐업신청을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폐업지원 신청이 접수되었고, '04년은 시행 초년도여서 지자체 및 품목조직의 자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과수분야에 대한 7년간('04-'10), 1조 2천억원의 FTA기금 지원 대책은 FTA/DDA 등 개방화에도 지속가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될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도 '04년과 같이 지역 안배보다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위주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업인 등 관련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며, 폐업지원 사업의 경우 FTA협상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폐원 신청량이 급등한 것으로 볼 때 농가가 폐원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이상혁, 농업사무관 백영현)



### 제3편 2005년도 농정시책

제1장 2005년도 농정방향 ..... 281

제2장 2005년도 주요농정 시책 ... 302

## 제1장

## 2005년도 농정방향

## 제1절 2005년도 농정목표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쌀 관세화 관련협상·DDA 협상·FTA 확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안전·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농산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 여가증가에 따라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첫째, 쌀산업의 체질강화

둘째, 전문 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셋째,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넷째,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다섯째,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섯째, WTO/FTA 농업협상 대응

을 6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2005년도 농정시책방향

6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2005년도에는  
첫째, 쌀산업의 체질강화와 쌀농가 소득안정  
둘째, 농지제도 개선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  
셋째,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 1. 쌀산업의 체질강화와 쌀농가 소득안정

#### 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정부는 2005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농민단체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목표치는 농지의 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와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논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수단도 면밀히 검토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 나. 고품질 쌀 생산·유통 효율화

국내외 가격차가 4~5배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개방 확대 이후 우리 쌀이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길뿐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종합적인 우리쌀 품질경쟁력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재배단계에서는 RPC 계약재배면적을 32만ha까지 확대하여 들녘별로 품종을 통일, 수확후 관리단계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품질관리시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과

품질관리의 주체인 RPC는 운영자금 지원을 차등화하여 경영혁신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평가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것이다.

#### 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정부는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하고, 3년마다 변경하고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60만원(80kg 가마당 9,836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대상 농업인 등록 등을 거쳐 2005년 11월에는 고정직불금을, 2006년 4월까지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라. 공공비축제 도입

추곡 약정수매제가 폐지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는 등 양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공비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물량은 600만석 내외로 설정하고 수확기에 일정물량을 시가로 매입하고, 단정기에는 회전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다.

## 2. 농지제도 개선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

### 가. 농지은행제도 도입

정부는 쌀·DDA 협상이후 농지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면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설립될 농지은행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농지를 매입·비축하고 전업농 등 농가에 임대하거나 매각
-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 농가에 임대
- 부채농가·재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당해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환매권리를 보장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

농지은행은 우선 기존의 영농규모화 사업 담당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게 되고, 임대료 및 수탁수수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조기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7. 21 공포되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도 12. 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나. 산지유통 활성화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에는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산지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브랜드파워를 갖춘 우수한 공동마케팅 조직 45개소를 선정하여 500억원의 무이자 운영자금과 385억원의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전문조직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23개 주요품목에 대해 자조금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후된 농산물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물류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금년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다.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국민의 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

가공 및 외식업체가 농산물의 주요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30억원을 지원하여 외식·전처리 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15억을 지원하여 전통음식 등 우리 식문화의 해외전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수출 촉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식품 수출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커져 왔다.

2013년까지 50억불을 수출한다는 계획하에 금년 수출목표를 23억불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에 개발한 수출공동브랜드 Whimori가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한·일 우정의 해”와 연계하여 한류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Whimori Week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일본내에서 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박람회 23회, 해외관측전 53회 등 해외 마케팅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월 1회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

### 3.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

####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2004년에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이다.

동 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20조 3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복지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금년에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04 : 30%),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연간 152천원에서 224천원으로 확대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대상을 27천명으로 늘리고('04 : 26천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1.5ha 미만 농가에서 2ha미만 농가로 확대한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의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1천개 권역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금년에 우선 36개 권역에 대해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신규로 40개 권역을 타당성 조사후에 확정하게 된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여개소에 대해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농업을 혁신할 계획이다.

(재정기획실 정책기획팀 행정사무관 윤원습)

## 제3절 2005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 1. 2005년 농림예산 편성 방향

2005년도 농림예산은 Top-down 제도 시행에 따라 한정된 자원범위 내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직불제 확충,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복지 및 지역개발과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체질개선 등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비 중심으로 배분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수급안정, 채무상환 예산 등은 축소 편성하였다.

첫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확보를 위해 직접지불 예산을 확대하고 부채대책 등 부담경감을 적극 추진하였다. 쌀협상에 따른 쌀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경관협약체결을 통해 농촌경관자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농가의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출연금 300억을 반영하였다.

둘째,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으며, 2ha미만 영세 농어의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과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인원과 단가 확대 등을 통해 복지기반을 확충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투자촉진을 위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확대 반영하고 쾌적한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확대하였다.

셋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을 신규 도입하였고, 농산물 유통의 내실화를 위해 유통시설 위주에서 물류표준화 및 유통 S/W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FTA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넷째, 양곡수매와 생산조정 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다섯째, 창업농, 쌀 전업농 등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BT와 IT를 접목한 첨단농업기술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방단위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하였다.

여섯째, 생산기반조성부문은 계속지구 마무리를 위한 필요소요를 반영하고 신규착수를 최소화하되, 안전관리·재해예방 및 투자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 2. 2005년 농림예산 규모

2005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9조 8,414억원으로 2004년 보다 4.7% 증가 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2005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B-A)	%	
일 반 지 출	I. 주 요 사 업 비	73,441	81,282	7,841	10.7	
	1. 생 산 기 반 조 성	15,714	15,073	△641	△4.1	
	2. 생 산 및 유통 개 선	5,313	4,992	△321	△6.0	
	3.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5,783	6,415	632	10.9	
	4.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22,509	30,580	8,071	35.9	
	5. 양 곡 수 급 안 정	14,705	14,412	△293	△2.0	
	6. 산 립	7,134	7,713	579	8.1	
	7. 채 무 상 환	2,283	2,097	△186	△8.1	
	II. 기 본 경 비	3,948	4,177	229	5.8	
	1. 인 건 비	3,185	3,368	183	5.7	
	2. 기 본 사 업 비	763	809	46	6.0	
	일 반 지 출 계		77,389	85,459	8,070	10.4
	기 금 전 출 금		16,568	12,955	△3,613	△21.8
	순 계		93,957	98,414	4,457	4.7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고훈수)

## 제4절 농정추진 체계 개선

###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전체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와 우리 농업·농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9년부터 「농·소·정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농소정협력사업은 '04년까지 7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매년 7-8만명의 도시소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농업·농촌 이해증진, 직거래와 일손돕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우리 농산물 및 환경의 중요성 인식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금년 농소정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를 통한 사업 외에 농촌지역의 문화사업과 소비자를 위한 교육분야 등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예산도 작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사업에는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총 41개 단체가 참여하여 도·농교류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 지키기사업 등을 추진하며, 그외 농촌청소년을 위한 농촌지역 순회공연 사업, 미래의 소비 주역인 젊은 엄마와 함께하는 유치원어린이 농촌체험교육 사업 등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농·소·정협력사업은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를 농업인·소비자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정에 형성된 농업인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상생(相生)관계 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표 3-1-2> 2005년 농·소·정협력 지원사업

유형	공 모 사 업			문 화 사 업	소비자교육 사 업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생산현장체험·농촌문화 체험, 일손돕기</li> <li>○ 도시소비자 생산·유통현장체험 및 자매결연</li> <li>○ 숯가꾸기 및 녹색산촌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나무 벼사랑 체험, 초등학교를 위한 농업 이야기</li> <li>○ 선농제향</li> <li>○ 인증농산물 홍보 및 비기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전통떡 지키기</li> <li>○ 농업환경보호, 안전 농산물 소비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순회공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촌체험 교육</li> </ul>
사업량	26개 단체(671백만원)	10개 단체(193백만원)	5개 단체(136백만원)	10개지역(280백만원)	8개단체(220백만원)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 2. 농림사업 성과평가 및 효율성 제고

### 가. 2004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04.4월) 및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04.12월) 내용에 따라 2004년 주요 135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통합, 감액, 폐지 등으로 구분하였으

며,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농작물 재해보험, 영농 규모화, 가축 방역사업 등 88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ii)축산물 도축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iii)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14개 사업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며, iv)농축산경영자금 등 9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로 하였다.

<표 3-1-3> 2004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분 류	대 상 사 업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88)	영농규모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농기계 구입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가축방역, 농작물재해보험, 농림기술개발 등
통 합 (24→8)	① 정보통신환경, 출하지원시스템 ② 산지전문조직지원, 산지일반조직육성, 채소수급안정(2), 과실출하약정 ③ 민간수매(2), 시장출하촉진, 우수농산물(2), 직거래매취 ④ 물류표준화, 물류기기공동이용 ⑤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지원, 축산물 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 지원 ⑥ 가축계열화(2),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판매시설현대화 ⑦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 도농교류센터 * 농기계보관창고는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중단·폐지 (14)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마늘작목전환, 마늘농가경영안정, 화훼수출단지조성김치종합센터, 통합쇼핑몰 운영,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유기축산시범사업, 사료검사장비지원, 축산물자율수급조절, 송아지생산기지조성, 유희지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대규모용수개발
감 액 (9)	농축산경영자금, 지역특화사업, 마늘기계화, 소규모 물류시설, 표준규격 공동출하, 시설현대화, 축산업등록지원, 식육전문처리인력 육성

아울러 농산물 생산·유통에 있어서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형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품목별, 지원내용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지원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매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대구획 경지정리, 배수개선 사업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주기적(3~5년)으로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목표량과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농림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정평가담당관실 사무관 윤광일)

#### 나. 2005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계획

2004년 농림사업 성과평가에 이어 2005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도 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과정을 이행 중에 있다.

2004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새로운 평가체계에 따라 135개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상당수의 사업이 투입 또는 산출지표를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부터는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평가의 통일성, 평가업무 부담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투융자관리계획서의 작성,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기획예산처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1) 2005년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 대상사업으로는 i)경상적인 행정경비, 행사성사업비, 정부내지출, ii)'05년종료사업, '06부터 통합되는 사업, iii)정착에 다년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 등을 제외한 평가의 실익이 있는 주요 재정사업 113개를 선정하였다.

## (2) 평가방법 및 절차

각 사업부서는 소관사업의 평가지표·목표치·사업추진 프로세스 관리계획을 담은 투융자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부서 검토후 농림사업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융자관리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며('05.9월), 사업종료후 사업담당부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평가전담부서에 제출('06. 2~3월)하고,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집중평가 자료 등을 기초로 i)예산편성방향 ii)제도개선사항 iii)개인 성과등급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농림업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06.4월)할 계획이다.

## (3) 평가방법

'04년에는 사업목표, 추진체계에 중점을 두었으나 '05년 사업평가에서는 지원조건 등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예산편성방향은 i)증액 ii)현수준유지 iii)감액 iv)통합 v)중단의 다섯가지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혼합유형을 제시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편성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05사업평가부터 도입하게될 개인 성과등급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공통 체크리스트 중 개인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에 따라 4개 등급(S등급 : 90% 이상, A : 80% 이상, B : 70 이상, C : 69 이하)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표 3-1-4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크리스트와 개인성과관리 항목(계속사업의 경우)>

평가 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크리스트 (가중치)	개인성과관리		
		항 목	가중치	
1. 계획 단계 (3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3.75)	△(신규사업만 적용)	-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75)	×	-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하게 설계되지 않았는가? (3.75)	△(신규사업만 적용)	-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75)	×	-	
	1-4-1.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히 홍보하였는가?	신규 포함	7.5	
	성과 계획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	7.5
		1-6.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5.0)	○	7.5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	7.5	
2. 집행 단계 (30)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	○	7.5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0)	○	7.5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	7.5	
	2-4. 예산절감/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0)	○	7.5	
3. 평가·환류 단계 (4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0)	○	30.0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10.0)	×	-	
	3-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에 활용하였는가? (5.0)	○	10.0	

(재정평가담당관실 사무관 윤광일)

####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개선

금년에는 2004년에 개선·보완한 농정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2004년 한 해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재정집행점검대상 20개 예산사업의 집행상황과 임의지방비 투입실적, 재해대책시설물·축산분뇨처리시

설 등 기지원된 투자시설의 사후관리 실패, 고품질쌀 생산·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대책·수출촉진·유통대책·농업정보화·친환경농업육성·농촌투자유치및농촌관광·농촌교육 및 복지여건개선·농정홍보 등 중점분야별 시책추진, 차별화 시책 및 지방농정현안대처노력 등 4개 분야의 농정업무를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60백만원의 시상금과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였다.

2006년도 농정업무 평가는 평가결과 선정하는 우수 지자체 수를 조정(5개도→3)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감안 하여 현지확인 시·군수를 축소(도별 2~3개 → 도별 2개)하는 한편, 평가사항별 중요도 등을 감안 배점 비율을 조정하고, 예산집행실적 평가대상을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평가지침을 대폭 개선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의 영농현장에서의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 사이버 농정홍보 교육실적을 평가사항에 추가하고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대책과 농업 정보화 추진의 평가항목을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농산물 유통대책 평가항목에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에 추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119조 투융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평가 항목과 기준 등은 변화하는 농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평가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장의)

### 3. 농림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가. 농림행정 제도개선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민원 또는 부조리 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를 Zero-base(원점)에서 일제 정비하고 고질 반복 복합 집단민원 및 잠재적 민원이 내재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림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05.4월)하였다. 그동안 공무원 위주의 제도개선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고객인 농업인단체대표 등 23명이 참여



하는 민관합동 제도개선협의회(공동위원장 차관, 충북대 성진근교수)를 설치 운영하여 ① 민원, 불편사항 또는 부조리 유발 제도·규제 개선업무를 종합조정하고 ② 민원·제안·현장방문 등으로부터 발굴된 과제의 개선여부를 결정하며 ③ 기타 이해관계인과 담당부서간 의견 불일치로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의 조정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민원제도개선 발굴 시스템을 정비하여 민원사항(총무과), 자체 감사결과(감사관실)를 대상으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농림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마당-제안합니다” 코너를 설치하여 on-line상에서 발굴하였으며, 현장농정을 통해 사각지대/소외계층의 잠재적 민원을 발굴하기 위해 2~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3명의 농정상담역 농업인을 위촉(1,040명)하였고 현장체험학습 실시(과장급 이하 전직원 대상) 및 과의 날 행사를 통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농림제도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각 시·도, 산하단체,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언론기관 등(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 업체 등에 장관친서 발송(22,000명) 및 PCRM 고객에 이메일 발송(53,000명), 제도개선 과제 제안 공모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제도개선 과제 제안안내를 위한 팝업창 설치·운영(4.15~5.31)하여 제도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그 동안 정책고객으로부터 다양하게 접수된 제도개선제안을 대상으로 ① 농업경쟁력제고와 영농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 ② 국민들의 안전식생활을 보장하고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농림제도개선협의회(9.28)를 통해 제도개선과제 239건 확정지었다.

개선이 완료된 과제 및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제도개선 제안자에게 검토결과를 회신(우편 및 e-mail 송부, 홈페이지 게시, 유인물 배포-1,000부 등)하였으며, 확정된 과제중 단기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지침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제도개선 추진 성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지난해 58.0점에서 64.3점으로 높아졌으며, 금년 처음으로 자체 실시한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지난해 총리실에서 평가한 48.3점 보다 높은 57.1점으로 나타났다.

(혁신인사기획관실 사무관 윤승우)

#### 나. 농림행정 규제완화

2005년도에는 농림부 소관 모든 기존규제(503건)를 개별규제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존재여부를 검토하고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며 규제방식은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자율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규제정비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년도 규제 정비 주요 계획은 2006년까지 향후 2년간 총 44건의 규제를 우선 집중정비하고 나머지 규제도 정비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중점정비 대상분야는 농지분야로 선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편익증대를 제약하는 이용규제 및 보전규제 등을 중점개선하고 유통·축산분야 등의 규제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규제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분야 규제정비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실시 등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분야 등의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피규제집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통한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현장인식 제고 및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규제정비 개선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의 분야별 추진계획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의 폐지, 상속이농 농지소유상한 예외허용 등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와 농업진흥지역에 소득 및 편의시설을 허용하는 등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의 확대 등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제완화 등 농지분야에 대한 규제정비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 허용, 가축전염병 예방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초지의 부실관리 시정지시 의무규정 폐지, 사료의 품질검사 의무조항 규제개선 등 축산분야의 규제정비를 폭넓게 추진하고 또한, 농산물가공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농수산물 규격화 축진을 위한 명령 폐지 등 농산물 유통분야의 규제완화 등 농림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기혁)

#### 4. 농림조직의 개편

##### 가. 농림부

###### (1) 실무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등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이 집행업무에서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정책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실무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6급 이하 정원의 10%인 11인을 5급으로, 소속기관은 7급 정원의 5%인 21인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하였다.

해외 악성가축질병과 수입식물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검역인력 2인을 증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 각 5급 1] 하였다.

한편, 부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전문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농업연수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받아 농업연수원으로 개칭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강화를 위해 3인(4급 1, 5급 1, 6급 1)을 증원하였다, 아울러 혁신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담당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였고,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 1인(기록물연구사)을 증원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농림부령 제1457호, 2004. 2. 11)>

#### (2)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단행

쌀 재협상 이후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거대경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 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FTA)과」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분야에 과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523호, 2004. 8. 1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81호, 2004. 8. 10)>

첫째, 쌀소득보전기금법 제정·시행과 쌀 재협상 이후 쌀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식량정책국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득정책과 및 소득관리과를 신설하였다.

둘째, FTA가 WTO와 함께 세계교역 질서를 형성하는 축으로 부상하고 20여 개국과의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FTA 농업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FTA)과」를 신설하였다

셋째,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과 홍보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정책홍보팀」, 「정보상황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2·3급)하고 1인을 증원하였으며, 부내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팀」을 신설 하였다.

넷째, 직렬구분없이 능력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될수 있도록 과장급 직위를 복수직렬화하였다. 본부의 과장급 행정단수 직위(감사담당관 등 8개 직위)를 행정·농업 복수직위로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무과장 등 3개 직위), 국립종자관리소(관리과장 등 6개 직위), 농업연수원(5급 행정 1인, 농업 1인) 관련 직위도 복수직렬화 하였다.

(3) 고객 서비스 강화 및 해외 동식물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인력 보강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동·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경 검역기능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 분야에서 농업인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출장소를 증설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선기관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10개 출장소를 증설
- 남북육로개설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고성 출장소를 신설하고 2인을 증원

(4)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06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지난해 추진된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신설·자유무역협정과 신설 등 '05년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 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06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농지은행제도 운영 인력, GAP·Traceability 관리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안전성 조사과 신설·운영인력,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리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연수부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청사방호인력 등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축산물위생감시과·인수공통전염병과 신설·운영인력, 검역탐지견센터 운영인력, 인천공항 검역 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세라·수퍼박테리아 연구 인력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인력 등

(5) 농림부 2006년 직제개편 추진 계획

지난해 실시된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와 최근 각 부처에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팀제·총액인건비제도 등 각종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농림가 설정한 비전, 미션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인사담당관실 서기관 강형석)

## 제2장

## 2005년도 주요농정 시책

### 제1절 쌀 협상 국회비준 추진 및 쌀산업 구조개편

#### 1. 쌀 협상 결과

##### 가. 이행계획서 내용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였다. 이행후 5년차인 '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유예 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관세화 전환시의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 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하고, MMA중 기준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에 국가별 쿼타 배정하기로 하였다.

\*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고, 밥쌀용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 유지하기로 하였다.

### 나. 쌀 협상 검증 및 국회비준동의안 처리

쌀 협상 결과는 WTO 사무국의 3개월 검증기간 동안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타회원국의 유보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사무국으로부터 조속한 인증을 도출하였다.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위해 재경부차관을 단장으로 농림부·기획예산처·외교통상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6. 20)하였으며, 국내홍보, 쌀 산업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대응방향 등을 신속히 결정, 추진하였다.

특히 농해수위, 통외통위 및 고위 당정회의 개최시 쌀 비준동의안 처리 관련 쟁점사항 등을 수시로 설명하고, 광고, 인터뷰, 기자 브리핑, 공청회 및 농민단체 설명회 등을 통하여 쌀 협상결과 조기 비준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다만, 쌀 협상결과에 대한 농민단체·야당의 이면합의 의혹제기로 국정 조사를 실시(5. 12~6. 15)한 바 있으나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음이 밝혀졌으며, 비준동의안이 6. 7일 국회에 접수된 후 정당간 의견차이로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11.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박희수)

## 2. 쌀산업 구조개편

WTO출범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농업협상 이후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DDA·쌀협상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등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가 전환되었다.



또한,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마련('05.7.1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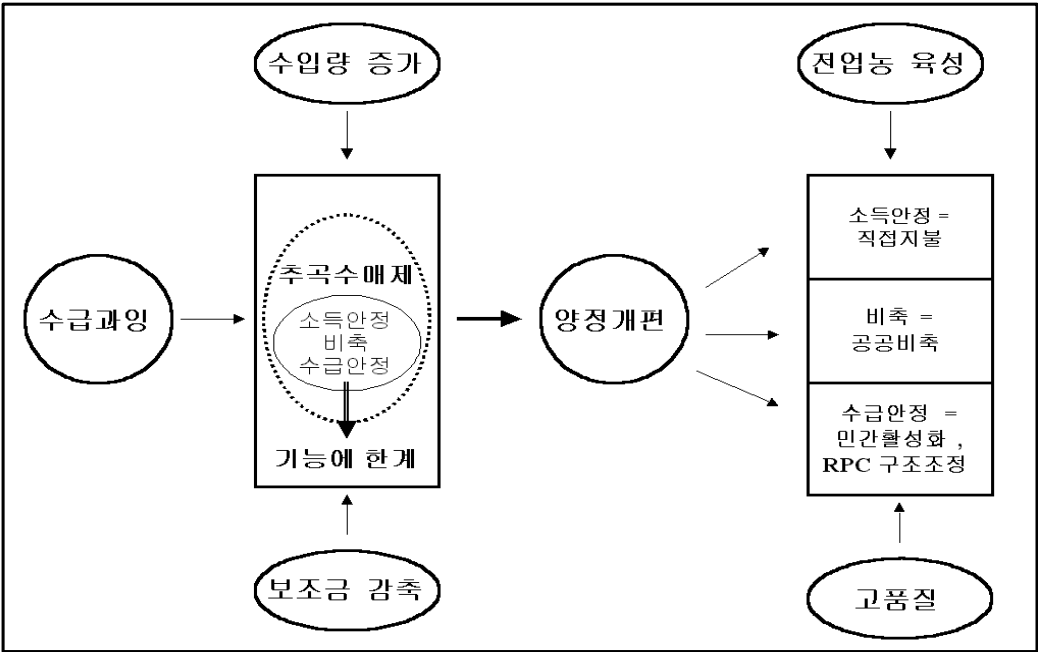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쌀 판별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양곡표시제도 강화 등 시장관리를 통해 고품질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품질벼 종자의 개발·보급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 재배관리 표준화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 산물벼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수확후 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최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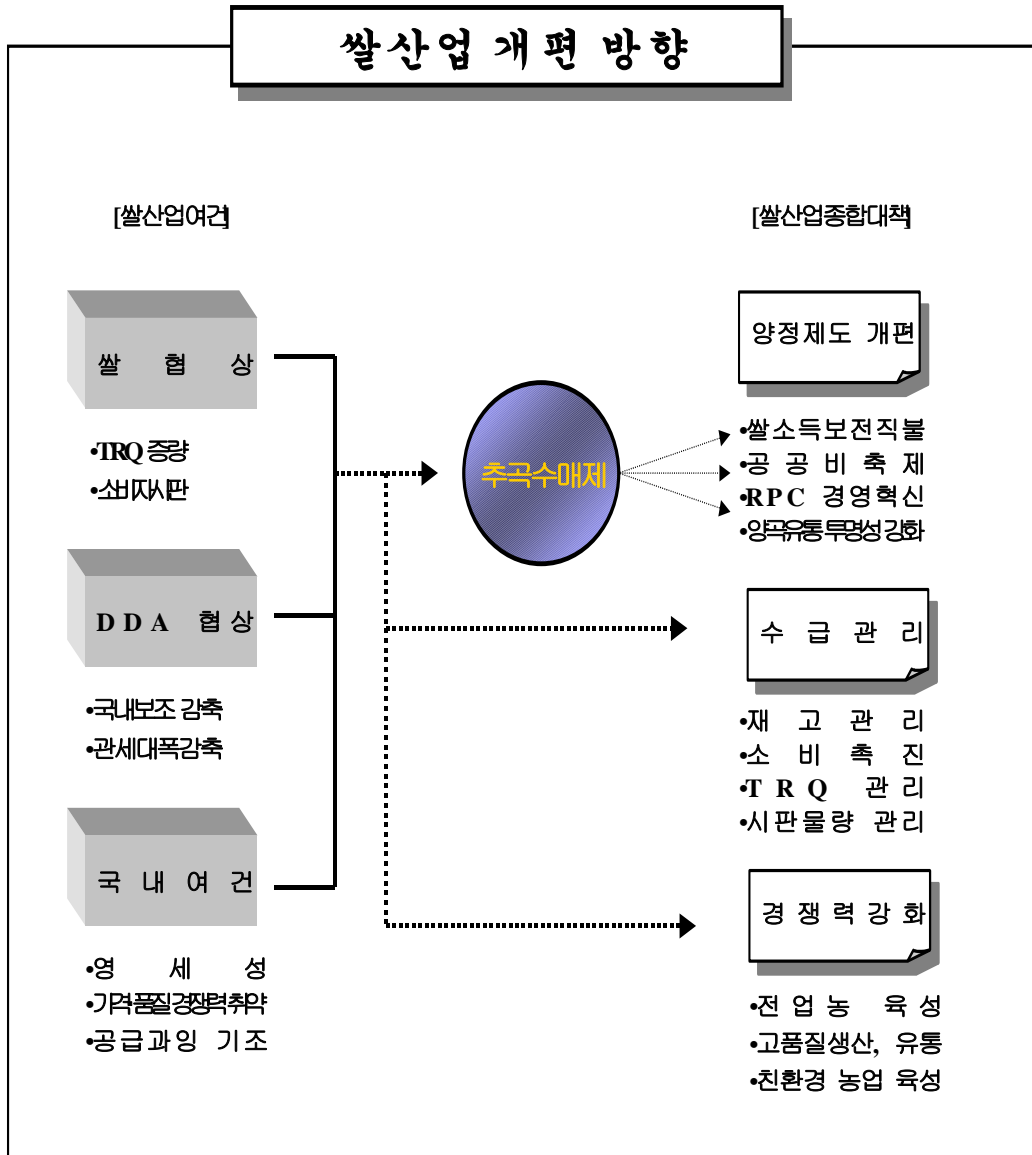
<그림 3-2-1>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 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 ◇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그림 3-2-2>

쌀산업 개편 방향



### 3. 쌀 전업농 육성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199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효율적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 1995년에는 14천호의 쌀 전업농이 선정된 바 있으나 2004년말 현재 85천호로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 집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비농업인, 고령농가,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논·밭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농가는 연리 3.0%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 분할 등의 조건으로 농지매입대금을 상환하고, 임대차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계약기간(5년이상)동안 무이자로 매년 임차료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된 1995년 이후 2004년 까지 3조 220억원의 투·융자를 통해 47천호의 쌀 전업농에게 86천ha(매매 30천ha, 임대 55천ha, 교환분합 1천ha) 논을 유동화 하였다. 그 결과,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논 경영규모가 지원 전 호당 평균 2.0ha에서 2004년에는 4.3ha로 2.3ha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쌀 전업농이 담당하는 경영면적도 1995년에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3%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도에는 28%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이 49세의 청·장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쌀 전업농들은 보유한 농기계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농작업을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 등 지역농업을 실질적으로 유지·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경영체가 다수 출현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우리나라 쌀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본 대책의 목표 및 비전은 2010년까지 지대별 여건 등을 감안,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이들이 2010년 예상 벼 재배면적인 85만ha의 절반 수준을 경영토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대등한 소득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내용은 ① 쌀 전업농의 규모화, 정예화로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②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③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으로 경영내실화, ④ 지역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농지규모 확대를 위한 물량중심의 시책에 치중해 왔고, 양정여건의 변화, 소비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문경영인 육성, 경쟁 가능한 규모화, 소득안정, 품질 및 경영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 쌀 전업농 육성 주요 추진실적('95~'04년)

쌀전업농수(2004년)	호당 경영규모	지원논 면적 및 투융자액		
		면적(ha)	금액(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4,821호</li> <li>– 3.0ha 이상 : 37천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받은 쌀전업농 : 4.3ha</li> <li>– 전체 쌀전업농 : 3.9ha</li> </ul>	계	85,643	3조 220
		매 매	29,451	1조 8,951
		임대차	55,035	1조 715
		교환분합	1,157	517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이재욱, 농업사무관 조성근)

#### 4. RPC 경영혁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의 긍정

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10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2003.11월)하였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등을 차등지원하고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2005년도 RPC 경영평가는 RPC 경영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 310개 RPC(농협 193, 민간 117)에 대해 운영자금 5,094억원을 등급별로 차등지원(A등급 30~E등급 10억원, F등급 지원 제외, 금리 0~2%)하였다.

아울러 통폐합 RPC에 대한 운영자금 우대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 '04년 통합RPC : 연기군(2개소), 정읍시(5개소), 보성군(2개소)

\* '05년 통합추진 RPC : 전북 고창, 전남 함평, 충남 부여, 충북 진천 등

그러나, 수매제 개편, 시장개방 확대 등 양정여건의 변화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시설, 제도 등의 문제점을 종합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RPC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중이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김완수)

## 5.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쌀은 고품질 품종보급 미흡, 재배법의 미정착,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 미흡 등으로 대외 품질,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은 기존 다수확 위주의 품종선택 및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수확후 가공·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외관, 식미 및 안전성 측면에서 외국의 고급쌀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력증진, 품종갱신 및 재배방법과 수확후 관리체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품종 집중도를 증가시켜 고품질 추천품종 재배비율을 95%로 신장(2003년 93%)시켰으며,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130천ha(2003년 125천ha) 재배하였고, 석회·규산질 비료를 618천톤(2003년 738천톤) 공급을 통해 지력증진에 주력하였다. 재배단계에는 질소질 비료 시용량을 표준소비량(11kg/10a) 보다 적은 10.9kg/10a로 감축하고, 이양시기를 3~5일 조기이양 토록 추진하여 품질 향상을 기하였고, 유통단계에서는 RPC 계열화 면적을 289천ha로 확대(2003년 245천ha 대비 18%증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동안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아직 외국의 고품질 쌀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road map을 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유

통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와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본부장 : 차관보)를 설치하고 고품질쌀생산팀 등 6개반의 전담반(고품질쌀생산팀, 생산조정팀, 고품질종자개발·보급팀, 친환경재배팀, RPC계열화, 유통대책팀, 재해예방 및 대책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쌀 품질고급화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330천ha(2005년 151천ha),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량을 371천톤(2005년 200천톤), 규산질 비료 공급량을 150만톤(2005년 70만톤)으로 늘리며, 볏짚 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체보리·호맥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2010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품종 9~10개를 육성하고, 생명공학, 유전자원, 병리 및 해충전문가 등 최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운영하여 고품질 품종 개발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으로 있다.

셋째, 정부 보급종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RPC 보증종자 공급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재배용 정부 보급종 공급(종자갱신을 : 2005년 32%→2008년 50%)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과 고품질 신규개발 품종을 조기 보급(운광, 삼광, 고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정착을 위해 적기이앙, 적정포기수 확보, 적정 물관리,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최소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등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적정시비를 통한 토양검정 서비스 제공(농협 토양진단 센터 361개소), 토양검정실증 시범포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RPC 벼 계약재배 면적을 2005년 32%에서 2010년 50%까지 확대하여 RPC 중심으로 계약재배물량 우선매입 및 가격 차등화로 농가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RPC 산물 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66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50%수준으로 확대하며, 통합 RPC의 경영



정상화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쌀의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포장양곡 표시제를 정착하여 쌀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되어 시중유통쌀 브랜드를 종합평가하고, 품종별 혼입방지를 위해 RPC별로 2~3개 품종의 대규모 단지화를 구축하며, 밥맛이 가장좋은 유통기간 표기, 쌀 품질 검증기반 구축 및 소비를 촉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성신상)

## 제2절 농업 전문인력 양성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력의 급감과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력이 농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50명을 선정,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종전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경쟁력 제고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에 편입·지원토록 개편하였다.

아울러 '05년부터는 농업·농촌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3개시범사업(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대학생창업연수)을 도입하여 우수인력이 조기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조기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농업사무관 양주필)

##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2005년에도 2004년에 이어 농업경영체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기관별로 상이한 농업회계처리방식을 표준화하고, 생물자산에 대한 평가·수익인식 등 품목별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며,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농업경영체에 보급하여 통일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창업단계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①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및 후견인제를 각 1,000명 수준까지 확대('05년 각 100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②한국농업전문학교도 정예인력 양성 핵심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③농대에 영농창업 Track제를 실시하여 농업관련 학교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평균 4,500명의 젊은 인력이 신규로 농업에 정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후계창업농에 대한 자금지원('05년 : 1,000명, 800억원)도 확대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전문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①기존 교육과정을 품목별·수준별 전문과정으로 세분화·전문화하고, ②농업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가 자신에 맞는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Voucher제도(지불보증쿠폰)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③경영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교육과 연계한 자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주도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농업경영컨설팅을 경영·마케팅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컨설팅업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에게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정·심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컨설팅 대상을 농가위주에서 품목별 전문조직과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농업경영체 상호간에 기술, 노하우, 투자정보 및 창업정보 등이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 CEO협의회가 구성·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농업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훈련된 강사를 통해 적극 전파함으로써 농업을 희망이 있고 돈이 되는 전문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규인력 유입도 최대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4년에는 7개국에서 2,000명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체에 배정하여 인력난을 덜어주는 등 농업법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3.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이 보다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업비 지원한도를 농업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에서 농업인 15백만원, 법인 30백만원으로 높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도 원예·특작, 축산분야 경영체,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APC(산지유통센터)·쌀 전업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자부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업체의 전문화·규모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업연수원을 통해 컨설턴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4.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특수농법, IT·BT 등 관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센터별 운영성과를 평가, 차등 지원하여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05년도에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가 모두 수도권에 배치된 점을 감안, 권역별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정 받은 창업보육센터 중 농업분야로 특화가 가능한 보육센터를 영호남지역에서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투자조합을 통한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 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5. 여성농업인 육성

##### 가.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및 지위향상 촉진

##### (1)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실시

2005년도에는 급속하게 변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신지식·신기술 농업에의 적응력을 키우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비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여성농업인도 정보화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은 농업협동조합(회원조합)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하며 각 교육기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교육대상인원의 40%이상인 22,14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전문 영농기술 및 농기계 조작훈련, 농

산물 가공·상품화·농작업관리·노동경감기술 및 영농신기술 체험교육 등 영농기술교육을 농촌진흥청과 농협을 통해 연간 50,750명 이상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과 초보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마케팅, 정보화, 지역사회역할 등 전문직업의식과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을 숙지하여 현장감 있는 눈높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 전문교육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농업연수원 교육과정중 「여성농업인교관반」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심도있는 프로그램으로 약 30명 1개반에 대해 연 6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정관련위원회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에 따른 여성위원의 역량개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성농정위원반 및 농촌의 환경과 자연을 관광자원화하여 농촌체험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농촌체험가이드반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2)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위원회 등에 여성참여

신규후계농업인 선정은 '04년부터 35세 미만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여성신청자 우대 장치마련으로 여성인력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창업농 신청시 총 500점중 가산점 20점을 부여하여 후계농업인 선정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5년도 정부목표인 36%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의 농협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조합원 가입 홍보·지도강화 및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우선가입을 추진하여 여성조합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나가고, 조합대의원 및 조합임원에 여성진출도 적극 추진하여 대의원 5,500명, 임원 35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유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도중 여성농업인센터는 2004년보다 7개소가 늘어난 3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토록하여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나.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 (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제도이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범위 확대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 중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2.0ha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005년도에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447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단, 5세아는 100%) 수준인 평균 약 12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 다.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 (1)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 시행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를 2004년 여성부와 공동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에 이어 2005년에는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농림사업 중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2)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05.11.5 시행)하여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하에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제고 및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성 및 농업관련단체 교육담당자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정책반」교육을 4박 5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3)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

2005년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에 이어 제 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6년-2010년)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관련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해이다.

2차계획은 1차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도별 순회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채록)

###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2004년부터 시행하는 농식품안전종합대책 농산물분야 세부추진계획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선진적인 안전제도로 도입 추진 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제(Traceability)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05년 8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고, 47개 품목 96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GAP 재배·관리지침을 96개 품목에 대해 제정하였다. 농업인의 실천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사례 연구(프랑스 현지조사), 교관인력 양성(140명) 및 생산자·관리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생산자의 안전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안전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성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성 교육이수를 품질인증 등 각종 인증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시청각 교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추진한다. 안전성 조사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2천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분석실을 거점 지역 출장소까지 확대해 나가,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비한다. 2004년도에는 3개 출장소에 1,79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2005년도에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중심에서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006년까지 계속 실시한다. 2005년도에는 병원성미생물 150건, 생산환경 250건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향후 기준설정 및 관리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다.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친환경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은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우대받도록 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도매시장에서도 우대 분위기가 조성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국 256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으로 강화하고 공표명령제를 도입하며 민간감시 기능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2004년 2,800명에서 2005년도에는 15,000명으로 증원하고 부정유통신고자 포상금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강경란)

####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장관자문기구인 농식품안

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모니터링실적, 리콜실적 등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최정록)

##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육단계에서는 농가들이 동물약품의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을 출하하거나, 가축을 출하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항생제 등이 없는 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음으로써 식육에 유해물질이 잔류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규제검사기간을 늘리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잔류위반농가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도입하여 사육단계의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축종별 HACCP 운용지침의 제정 및 적용모델의 개발·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도축단계에서는 HACCP 운용실태에 대한 시·도간 교차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HACCP 사후관리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고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또한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축검사원제도를 도입하고,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물량을 확대하는 등 도축단계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납·학교급식·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판매단계와 집유(集乳)단계에서 적용할 HACCP 지침을 제정하고, 그 준수를 원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과 과거에 위반사실이 있는 업소,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과 어린이 기호 축산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촉인원 확대, 감시수당 인상 및 감시기법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민간감시체계의 구축에도 적극 힘을 계획이다.

끝으로, 식육판매업소의 신규 개설요건 강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기관 변경, 중요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 및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등 그간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고, 식용란에 대한 위생검사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산물위생과 기술서기관 이상진)

### 3.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정부는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DB화하여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2004.1월)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였다. 2004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23개 브랜드를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그 중 9개 브랜드를 참여 브랜드로 선정하고 30개 연계 사업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 각각 10개씩)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www.mtrace.net)를 개설하고 10월부터 생산단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차를 두고 도축·가공단계는 12월부터, 판매단계는 2005년 2월부터, DNA동일성검사는 3월부터 각각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전 단계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관기관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귀표·라벨프린터·귀표리더기 구입비, DNA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 : '04년 14억원 → '05년 4억원)하고, 참여업체 운영비 및 판매장 홍보용 터치스크린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동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 및 중앙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브랜드전('04.10월), 우리농엑스포('04.11월), 시범사업 시연회('05.3월), 국제혁신박람회('05.5월), 국제축산박람회('05.8월)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면은 첫째,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둘째,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DNA 동일성검사 실시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셋째, 소비자,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인식이 높아져 소비

자는 안전한 이력관리 식품을 찾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별화된 식품을 생산하며,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력관리 식품을 취급함으로써 지정판매장(당초 10개 → 11월말 현재 28개) 및 판매량의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실시에 대비, 우수 브랜드 외에 지역단위를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참여대상의 확대(9개 브랜드 → 14개 브랜드, 3개지역)를 통한 문제점 발굴 보완, 개체식별번호(귀표)를 이용하는 각종 정책사업간 정보의 연계, 철저한 개체관리를 위한 귀표관련 문제점 개선, 한우 유전자(DNA) DB 구축 및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보완해야 할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8년도 전국단위 실시를 목표로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는 2007년까지 사전에 완비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행정사무관 박상연)

#### 4.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2004년 수립한 “축산물브랜드 육성계획”에 따라 2005년에도 생산자단체 중심의 규모화·조직화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축산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① 농가 또는 브랜드경영체가 품질의 균일성, 위생·안전성, 규모화 등 브랜드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브랜드경영지침서를 발간·보급할 계획이며, ② 농가를 조직화한 생산자브랜드 중 브랜드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2005년 : 932억원),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2005년 : 300억원)을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주관하에 축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지

침을 마련하여 “우수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④ 사양, 경영, 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브랜드 전문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브랜드경영체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브랜드경영체의 생산실태, 유통, 브랜드경쟁력 마케팅활동 등 경영자료를 자가입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⑤ 이와 함께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브랜드를 발굴 시상하고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물브랜드육성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13년에는 한우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50%(현재 25%), 돼지는 70%(현재 45%)가 브랜드화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축산업구조를 전업농 중심의 대규모 브랜드 경영체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이상철)

## 5. 가축개량 추진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과 DDA 타결 후 시장개방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업을 국민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하고 생산성을 높여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축의 생산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육 마리수와 분뇨 발생량을 줄여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개량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1) 한우개량

한우개량은 그동안 체중 증가에 역점을 두어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왔으나 고급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과정에서 수소 위주로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암소 유전능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 계획이다. 금년에는 한우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관리조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는 한편, 2004년 5월 20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T/F팀) 운영을 통해 검토·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우개량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5월중에 마련한 「한우개량사업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대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를 도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고능력 암소를 사육하면서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육종농가 10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적정 두수(80천두 수준)를 유지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한우 개량농가의 소득 보전효과 등을 고려, 농가당 최소 보유두수를 등록우 기준으로 3두를 유지하되 혈통·이동 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자체 조직혁신과 경영개선으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면서 우량 정액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칩소, 흑소 등의 육종 연구·보존과 기술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 (2) 젓소개량

젓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

율을 2010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하여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보조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젓소 보증씨수소의 검정 및 유전평가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증씨수소 선발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3) 돼지개량

돼지개량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종돈업혈통서 발급제도를 보완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종돈의 능력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종돈검정소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인접지역에 질병이 잦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이전하여 첨단 검정장비를 갖춘 현대시설로 신축을 검토하여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종돈의 육질검정·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돈 수출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현지 세미나 개최 및 바이어 초청을 통해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동물유전자원현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FAO에 제출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닭 개량 등

닭 개량에 있어 종계는 대부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인데 반하여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계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오리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오리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종오리를 개량대상 가축에 추가하고, 종오리업을 등록대상 종축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외 축산 관련 기자재와 우수 종축의 비교 전시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제4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림 3-2-3>

젖소개량 체계도



<그림 3-2-4>

돼지개량 체계도



(축산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염순)

## 6.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업 등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광우병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이후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8.25일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표 3-2-2>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국 내	외 국	비 고
구제역	'00.3월발생('01.9.19 청정국) '02.5월발생('02.11.29청정국)	'04~'05년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등(20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상재
BSE	비발생	'03년 캐나다, 미국 발생으로 총24개국(수입금지 34개국)	후진국 발생의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03.12~'04.3(19건발생)	'03.12~'05.10(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터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22개국)	동남아 상재
돼지콜레라	'03년 72건 '04년 9건 '05년 10월 5건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14개국)	동남아 상재

그 주요내용으로 광우병·소부루세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차단 및 발생시 신속대응,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활발한 국제 교류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일선 방역인력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다.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04.1월부터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유럽 등 22개국)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03.12.10~'04.3.20간 10개시·군(7개시·도) 총 19건이 발생하여 392농가 5,285천수를 살처분·매몰하였고,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유입 가능성이 높은 '04.11~'05.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정밀검사(107건, 5,970시료), 공항·항만 휴대품 검색 및 여행객 소독, 해외 여행국 등에 대한 홍보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과거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강화, 오리 혈청검사(893개소, 20,278건) 및 철새 분변검사(24개소 3,970점)를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을 추진하여 동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입 가금육 검사 및 공항·항만에 대한 검색·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집중관리지역의 닭·오리 임상관찰 및 철새·털새·오리에 대한 예찰을 확대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등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BSE 발생국(24)과 위험국(10) 등 34개국산 BSE 관련제품 수입금지와 함께 BSE 관련제품(HS code 680개)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하고 발생국가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96년부터 국내산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1년부터는 OIE기준(99두/30개월령 100만두)에 비하여 10배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3-2-3> BSE 검사현황

년도별	'96~'00	'01	'02	'03	'04
검사두수	3,043두	1,094	1,179	1,038	2,323

사료에도 '01년부터 반추가축에 육골분 사용을 금지하였고, 교차오염 방

지를 위하여 반추 동물사료와 비반추 동물사료의 생산라인을 분리하였으며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성사료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실태 지속점검, 동물성사료 혼입여부검사 강화 및 제조라인이 1개인 사료공장의 라인구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30개소, 개소당 30억원),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05)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24개월령 이상 폐사 소 및 기립불능 소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을 집중 검사하되 연차적으로 BSE 검사물량을 증가('05년 3,000건, '06년 5,000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원을 BSE 표준연구소로 육성하고 BSE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BSE 연구실(7명)을 신설하고 BSE 연구실험실(100평)을 확보('05)하는 등 BSE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BSE발생에 대비하여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소를 진단하고 BSE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보조원 100명을 배치하였고('05), 특정위험물질(SRM)처리를 목적으로 '07년까지 LPC 등 10개 도축장에 SRM 제거 시설을 설치('05년 2개소)할 계획이다.

③ 소 부루세라병의 경우 쯏소는 '00년이후 감소추세인 반면, 한육우는 '04년부터 증가추세로 한우의 발생증가는 지난해부터 다발지역 일제검사, 거래암소 검사 의무화('04. 5월 : 가축시장 거래소, '05. 3월 : 도축용 암소, '05. 6월 : 자연종부용 수소, 수집상·중개상의 사육 소 정기검사) 등으로 그 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가 색출되었기 때문이다.

&lt;표 3-2-4&gt;

연도별 발생동향

년 도		'00	'01	'02	'03	'04	'05. 10
전체	건수	271	131	110	172	711	2,206
	두수	1,249	754	845	1,088	5,383	15,022
쯏소(건/두)		266/1,198	127/684	105/662	110/498	116/1,282	129/1,823
한우(건/두)		5/51	4/70	5/183	62/590	595/4,101	2,077/13,199

④ 또한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05년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 완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부여 등 특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위험국가(중국·몽골 등) 중심으로 병원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하여 건초소독, 실험실 검사(10월말 현재, 135건 16천톤) 후 반입,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주기적 점검(138개소, 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19두)을 집중투입하고 신발소독(233개소 399개) 실시, 외국인 연수생(26천명)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322명)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 신속하게 발생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위험분석 실시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위험분석모델 개발 및 세계적인 위험분석기관에 관계관을 연수시켜 체계적인 위험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⑥ 최근 가축방역업무의 폭주 등으로 현장 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국 시·도에 방역인력 232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금년 8월 현재 218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또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방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와 관련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심사중에 있고 공익수의사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06. 13억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익수의사 인건비 등 추가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공익수의사를 선발, 군사교육 및 직무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여 방역업무 등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김태용)

##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WTO/DDA 협상 등 대내외적인 낙농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낙농업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도록 우유 수급관리 체계를 개편함과 아울러 향후 관세를 감축 등으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등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목표를 원유의 수급균형 유지를 통한 경영 및 시장의 안정,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 성장의 실현, 품질·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두고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원유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낙농조합 단위의 직거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낙농조합 중심의 생산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 집유체계 개편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계획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05년부터 여건이 되는 지역이나 유업체부터 직결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 단위의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본부 운영, 깨끗한 목장 관리지

침 제정 등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산 시유와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우유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송광현, 이범민)

## 8. 친환경 농업 육성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농법에서 벗어나 국토환경보존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까지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사용량 대비 40% 절감하기 위해 자재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조를 2005년 7월1일부터 완전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을 통해 적정시비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키토산·목초액·천적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해나가며, 합성농약 사용대체를 위하여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비를 금년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비중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1,50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2005년까지 74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정착하기 위해 환경민감지역 등에 시·군단위 대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금년중 기초조사와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

여 인증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재 5종류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3종류로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물에 무항생제를 신설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업자도 인증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년으로 되어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신설 등을 통해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한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혁신

####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마케팅의 규모화, 푸드체인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4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280개를 선정하였고 APC 213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기업화된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 9개를 최초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05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15개)에 대해 농가조직화정도, 사업규모, 브랜드화, 전문경영, 향후추진계획 등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1~2개씩 농업회사법인인 농산무역 등 9개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였다.

<표 3-2-5>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계	합병조합 (1)	전문조합 (1)	연합판매조직 (4)	영농조합법인 (1)	농업회사법인 (2)
9개 조직	순천농협	대관령 원예농협	안성(지역조합주도), 나주·합천(군지부주 도), 햇사레(도간 연합)	신지식한국 농업영농조 합법인	(주)논산수출물류 센터, 농산무역

2005년도 첫해의 경우에는 기존 산지마케팅조직을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혁신요소를 구비한 전문화·규모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을 시범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기존 산지유통조직은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퇴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제사업출자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함으로써 조합간 연합사업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마케팅자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 대해서는 중기·저리(3%, 3년이내)의 원료구입자금, 무이자인센티브(경영자금), 홍보 및 브랜드 개발 지원(조직당 20백만원이내), 공동선별비 상향조정지원(기존 30~40%→40~50), APC 시설보완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이 농산물품질관리사등 유통전문인력 고용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고,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유통문제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조직중심으로 품종통일 및 재배관리, 생산이력관리, 농산물수출, 수급조절 등을 일관 관리할 수 있어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정주)

#### 나. 공동선별비 지원확대 등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1984년부터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포장화율이 ('94) 66.3% → ('98) 75.1 → ('04) 85.4로 꾸준히 상승하여 포장화율이 정착되어 왔다. 포장화율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02년부터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균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공동선별비지원은 ('02) 24억 → ('03) 34 → ('04) 50으로 확대되었고, '05년에는 8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포장재비 지원에서 공동선별비지원으로 전환하고 '06년에는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장재비 지원도 표준규격 포장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규격 포장출하율이 80%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20%낮추고, 표준규격 포장출하율이 30%이하인 품목은 국고지원비율을 40%높이고, 표준규격농산물을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비율을 5%가산하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였다.

'05년도에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규모는 총 163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등을 전체사업비의 30% 수준인 5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말 현재 50% 수준인 표준규격출하율을 2008년까지 60%, 2013년 65%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종철)

## 2.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농산물 유통비용은 '03년말 현재 22조 8,400여억원으로 소비자 구입액 52조 2,700여억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물류비는 전체 유통비용의 32%인 7조 2,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농산물 물류혁신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적정가격을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을 2005년 11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물류 혁신위원회(위원장 차관보,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단체 등 22명) 구성하여 '2005년 3월과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소비자·운송·산지 TF팀을 구성하여 농산물 물류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3월부터 월 1회 논의하였다.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여론수렴 등을 걸쳐 마련할 농산물물류혁신 종합대책은 저비용·고효율 농산물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가격 경쟁력을 강화 하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또한 신 유통흐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규제개선·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를 2005.

3. 14일 구성하여 9월말까지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며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5월과 6월에 개최하였다.

도매시장의 청소비절감과 소비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4.1 전국의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주대마늘 반입을 전면 금지 하였으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제로 선정하여 KDI에서 연구를 수행('05.4~8) 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종철)

### 3. 농식품 수출확대

2004년에 환율하락, 유가인상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부는 농식품 수출 사상 처음으로 20억불(2,085백만불) 시대를 열었다. 2005년에도 수출목표를 23억불로 책정해 놓고,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일본·중국·동남아 등의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수요기반 확충, 수출증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수출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원예전문생산단지(일명 수출단지) 활성화로 수출농산물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원예전문 생산단지 관리지침(훈령)”에 따라 단지 수를 늘리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부실단지는 정리하고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며, 정부·학계·민간·수출업계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둘째, 2004년도에 도입한 공동대표브랜드(Whimori)의 품목별 매뉴얼 제작·홍보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뉴얼 제작은 민간전문가,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수출농가 및 업체를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셋째, 수출컨설팅을 강화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2004년까지는 해외기술지원단을 주로 일본에서 초청하였으나 이를 화란, 미국, 중국 등으로 초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변화에 대응한 컨설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으로 가공식품 수출 컨설팅을 신규로 도입하고 ISO, HACCP, GAP 등 국제인증 관련 컨설팅도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신규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개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2004년도 19개품목 425백만원을 27개 품목 70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품목은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되 해외바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농업무역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은 식습관이 다른 해외시장을 무대로 우리 농산물과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중국·동남아 등의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첫째,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장금에 출연한 양미경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농식품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일본 아이치엑스포 행사장내에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김치, 인삼 등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 농식품 세계화를 위해 식문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명요리학교·레스토랑과 공동으로 한식요리를 개발·보급하고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김치 퓨전요리를 개발하여 시연·시식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셋째, 선별적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이다. 수출업체 수출 실적,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박람회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바이어 박람회에 대해서는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시음·시식, 개별 수출업체 홍보 등을 통해 업체간 상담·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 박람회는 요리시연, 문화공연과 연계하여 한국산 농식품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넷째,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 농식품 판촉전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2004년도 26회 1,052백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53회 1,500백만원

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증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원체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 농축산물판매촉진비(일명 수출물류비) 수혜대상을 10만불 이상 수출업체에서 15만불 이상 수출업체로 조정하고, 신규품목 수출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수출실적 하한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2004년까지는 품목별로 수출액도 10만불이상이어야 수출물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10만불이하가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강신복)

#### 4.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 및 친환경직불제 시행등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다품목 소량 생산, 생산과 소비의 제약,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위해 일반 농산물의 경매방식과는 다른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유통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안전식품에 대한 욕구(Needs)가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초기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직거래 중심에서 전문 유통업체 및 대형할인점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농업인이 정성들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단체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6개 기관 391백만원)하였고, 농업인 교육 중 최초로 바우처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경상대학교 등 4개 대학과 환농연 등 5개 기관에서 교육(130백만원)을 실시하였다.

5월부터 11월까지의 도시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농소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9개 단체에서 참여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량 수요처 발굴을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 코너”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4년 170개소이던 전문판매코너를 2005년에는 20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확기 친환경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친환경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김기훈)

## 제5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 1. 직접지불제 확충

#### 가.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과거 시장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효과가 크고 생산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연차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하여 현재 8종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표참조). 농업구조조정이 끝난 선진국과 달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개방피해에 대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병행하여 추진해야하는 우리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EU 70%, 미국 36%, 일본 13%, 01년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차적으로 직불제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농업투융자재정의 23%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 나. 2005년도 추진현황

2005년 직불제 예산은 8,638억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11.9%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종전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각각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하고 양자를 쌀소득등보존직불제로 통합하였다. 개편과정에서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 4ha면적 제한과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부담금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식재·관리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도입하였다. 지원단가는 170만원/ha이며, 사업예산은 6억원이다. '04년에 시범도입한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모니터링과 사업홍보 등 시범사업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 다. 향후 추진 계획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에 의거 앞으로 2013년까지 직불제 예산을 24조원 수준(농업재정의 23%)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6년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현행 60만원/ha)하여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본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과 밭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업등록농가 900호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계속하며,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단가는 '05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청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량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09년)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직불제 신청서식의 통일적 전산화를 추진(1차사업 '05~'07년)하고, 직불제의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운영기관의 설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정책과 행정사무관 조백희)



<표 3-2-6>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구 분	경영이양 (1997)	친환경농업 (199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2005) *	
			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
목 적	· 영농규모화 촉진 · 은퇴농업인 소득안정	· 환경보전	· 논외의 공익적 기능 유지	· 쌀값하락에 따른 소 득보전
대 상	· 63세이상 72세이하 경영이양하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실경작자	· 실경작자
사 업 규 모	8.3천ha	11,385ha,	998천ha	998천ha
대 상 농 가	2.1천농가	6천농가	· '98~'00까지 논농 업에 이용된 농지 를 경작하는 자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
요 건	· 경영농지 매도시 · 5년이상 장기임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 비료·농약 적정사 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질 경우
단 가	- 매도289.6만원/ha (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분할지급) · 임대 : 297.7만원/ha	· 79.4~52.4만원/ha · 지급 0.1~5ha	· 60만원/ha(진흥·비 진흥 평균)	· 목표가격과 당해년 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차액의 85%
'05예산	286억원	69억원	5,988억원	1,376억원

\* 논농업 직불제는 고정직접지불금, 쌀소득보전사업은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변경

구 분	쌀생산조정제 (2003)	친환경축산직불 (2004)	조건불리지역 (2004)	경관보전직불 (2005)
목 적	· 생산감축을 통한 쌀수급균형 도모 · 쌀 재협상시 입지 강화	·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 농업의 다원적 기 능 유지 · 지역사회 공동화 방지	·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유지·도시민의 여가 수요 부응 및 농촌 지역 사회 활성화
대 상	· 실경작 농업인	· 친환경축산 프로 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 오지면중 구분지 표를 적용 선정한 법정리 거주 실경 작자	· 독특한 지형을 나타내 는 농경지 및 전통 적 특성이 남아 있 는 농촌마을
사 업 규 모	26천ha	· 한우 200호, 젓소 300, 돼지 400, 닭 100	31천ha	470ha
대 상 농 가	76천농가	900농가	35천농가	-
요 건	· 약정체결 농지에 3년간 벼,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	· 프로그램 이행 여 부 점검 및 이행 기록 장부 기장, 발 생분뇨 환원	· 마을협약 체결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 마을별로 경관보전 계획을 수립, 협약체 결 및 협약내용 준수
단 가	· 300만원/ha	· 기본 : 1,300만원/호 한도 · 인센티브:200만원/호 한도	· 밭 40만원/ha · 초지 20만원/ha	· 170만원/ha
'05예산	791억원	58억원	123억원	6억원

## 2. 농의소득 기반 확대

### 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2005년에는 32개소에 472억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공단지에 특산물 가공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술경영지도, 판로확보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7>

###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분	추진목표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사업량(개소)	400	305	32(9)	86
사업비(국고,억원)	7,572	5,905	472	1,195

주 : ( )는 완공지구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종현)

##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가.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기금설치·운용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2004년 제도개선 T/F로 결정된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공포(2005.1.27)하고, 동법시행령을 개정(2005.5.13) 하였으며,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평가요령을 새롭게 개정(2005.5.24)하였다. 또한, 재보험기금의 운용을 위한 운용조직을 구성(2005.4.1)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기금운용규정(2005.6.4)을 제정하였다.

### 나. '05년 보험사업추진 및 국가재보험 약정체결

2005년도에는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그동안 손해

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제해왔던 보험요율을 보험원리에 따라 현실화 함으로써 인상된 농가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순보험료의 61.2%를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도 24,866농가보다 11.8% 증가한 27,805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17,546ha)도 15.9% 증가한 20,330ha을 보험에 가입(가입률 대비 23.4%) 하였다.

<표 3-2-8> '05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원)  
(05.3.31 기준)

구 분		2004	2005	증감(%)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24,866	27,805	2,939(11.8%)
	가입면적(ha)	17,546	20,330	2,784(15.9%)
	가입률(%)	18.2	23.4	5.2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50	61.2	11.2
	운영비(%)	90	100	10
	국고지원액	37,803	52,761	14,958(39.6%)

\*주1) 기금출연금 300억원 별도

또한,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2002년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던 삼성·현대·동부 등 민영보험사의 재참여를 유도하여 2005년6월 재보험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사업안정기반을 구축하였다..

\* '05년 국가재보험제도 주요 약정내용

- 거대재해(손해율180%초과손해) : 국가가 전액부담
- 통상재해(손해율180%이하손해) : 농협 등 민영재보험자 부담
- 참여민보사(인수율) : 삼성,동부(24%),현대(16),코리안리(8),LG,동양(1.5)

다.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2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2005년도에는 농업인·기획예산처·보험개발원·민간보험사 등 보험전문가들로 제2기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국가재보험제도 등 보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등 앞

으로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다.

또한, 수도작(벼) 도상연습 시행방안 등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2005. 6~2005. 12)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보험화 가능한 품목부터 연차적으로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가축공제, 농업인안정공제 등 유사사업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농작물 전반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조강제)

#### 4. 농가부채 경감대책

##### 가.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7.2)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10.31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 지원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3.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나. 부채대책 내용

##### <2004 농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①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수준 → 1.5%) 및 상환기간연장(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② 2001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 ③ 2001대책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 ④ 2001대책으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상환기간연장(3년거치 7년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⑤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5%, 7조원)
- 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연이율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04지원 2,000억원, '05지원 3,000억원)
-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20%)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30%)

### 다. 부채대책 추진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부채경감대책 중 농업인의 신청이 필요없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2001지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2004.3.5일자로 일괄 조치하였으며, 시행초기에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농업전문지에 광고게재, 조합별 프랑카드 게시, 리후렛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6,000부) 부착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신청기한을 당초 2004년5월31일까지에서 2004년12월20일까지(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신청은 2004.12.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일선 현지점검,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5월29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지침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총부채 1억원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초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이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3개 읍·면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004년 9월 30일에는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추가 지원과 관련 그동안 신청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채경감대책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2003말 대출잔액~1999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2000~2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 까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를 전업농 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에서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000만원이상인 농업인에서 2,5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농업인 신청일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에서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2.1.1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에서 2001.1.8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심사·지원이 이뤄지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04년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에 따른 부채경감대책자금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당초 대출기간은 2005년8월31일까지였으나 농민단체, 대출취급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에게 한하여 2005년10월31일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였다. 농가부채대책 지원자로 선정된 농업인중 기존의 연체자금해소 및 각종 서류 미비로 인해 2005년8월말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2-9>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2005.9.30일 현재)

(단위 : 천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신청 현황		지 원	지원액 (C)	비율(%)	
	(A)	건수	금액(B)	결정액		(B/A)	(C/B)
정책자금 상환연기	80,409	422	79,801	47,802	40,106	99.2	50.3
2004상호금융대체자금	66,500	513	73,731	45,335	37,894	110.9	51.4
연대보증해소자금상환연장	4,526	14	3,303	2,938	2,057	73.0	62.3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5	1,987	1,910	1,635	99.4	82.3
계	153,435	954	158,822	97,985	81,692	103.5	51.4

#### 라. 향후 추진계획

'04부채경감특별법에 따라 금년 9월말까지 8.2조원의 자금에 대해 금리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였다. 다만, 그간 수차례의 부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회생자금을 상설 지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은 농지·시설등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자기농지와 농업시설을 장기 임대받아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중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내년에도 2,000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반복적인 상환기간 등 부채대책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집중도래하는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대책에 의해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을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채대책을 추진하더라도 농업인의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농가부채대책으로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 투융자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규모화·친환경·고품질 농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 복지 정책과 농촌지역개발에도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박정훈)

## 제6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가. 수립배경

대외적으로 DDA협상 진행,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대내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로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과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의 취약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UR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 등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농규모화 등 농업내부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는 정책적 관심부족과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이 결여되어 있음을 뿐만아니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평균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농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04.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나. 추진경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04.6.6)된 이후 15개부처에서 부처별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복지·교육·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2005.1.21)하였다.

상기 기본계획(안)의 심의·확정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2005.1.25)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5.2.1)가 개최되어 기본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교육부문의 통학버스 증차, 농어촌 교원 해외연수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005.2.22)를 개최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보완하였으며, 두 차례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005.2.25, 2005.4.1)에서 논의하여 검토·보완한 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제2차 심의(2005.4.16)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2005.4.21)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농촌 발전계획중 농의소득 분야와 농촌정책 분야를 보다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 해오던 농산어촌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처음으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체계화한 중장기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5년도 시행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005.6.20)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2005.6.22) 하였다.

또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라 각 시·도, 시·군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 체계(Feedback system)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말까지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가방안이 수립되면 동 평가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단」도 농업인 단체 대표, 전문 연구기관, 대학교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조사” 및 “도시와 농촌의 삶

의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등 2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는 앞으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다. 주요내용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등 도시근로자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건소 시설·장비보강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등 여성과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의 대입특별전형비율을 확대(3% → 4%)하며, 중심학교 위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등 교육단계별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농림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우수교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주택 신·개축 자금 용자조건 개선, 초고속 통신망 구축,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농산어촌에 중 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소도읍 및 면소재지를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은 생활권역 단위로 종합개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향토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를 향토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단지로 육성하는 등 향토산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체험관광마을 확충, 1사1촌 운동 확대 등 도·농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상기 4대중점 추진과제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통해 향후 5년간 20.3조원을 집중 투융자 함으로써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상의 투융자계획 재원을 살펴보면 총 투자 규모는 20조 2,731억 원으로 국비가 11조 5,527억원(57%), 지방비가 8조 1,659억원(40.3%)이고, 민자등 기타는 5,545억원(2.7%)이다. 이중 국비 11조 5,527억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상의 재원 7조 6,862억원(67%)과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조 8,665억원(33%)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복지 부문에 3조 4,226억원(16.9%), 교육 부문에 3조 1,473억원(15.5%), 지역개발 부문에 11조 2,480억원(55.5%), 복합산업 부문에 2조 4,552억원(12.1%)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부문별 연차별 투융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0>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투융자계획('05~'09)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05-'09 합계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투자소요	24,860 (14,895)	28,140 (15,101)	35,854 (18,981)	41,960 (23,938)	46,101 (27,117)	50,676 (30,390)	202,731 (115,527)	15.8 (19.1)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 선	2,149	3,380	6,362	7,071	7,29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 ( ) 내는 국비지원 규모

(농촌정책과 서기관 한중현)

## 2.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 가.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40%를 경감하고 있고, '06년 이후에는 50%까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표준소득월액 12등급(440,000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224,400원을 지원하였고, '06년도에는 13등급(480,000원) 소득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3등급 소득 초과는 13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259,2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경우에도 사망공제금의 보상수준을 현재 1,500만원에서 '06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촌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28개군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인력 배치 및 시설 장비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보건소 등의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 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농촌의 여성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들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05년도에 신규로 100개소 설치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현실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등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05년부터는 영유아가 있는 2.0ha 미만 농어민에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영유아가 있는 모든 농어민에게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어가도우미의 지원기간 및 단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라.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을 '05년 100개 마을 육성하였으며, '06년도에는 30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도 '05년도에 56개소 설치하고 '06년부터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구성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마. 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27천명에게 621억원을 1·2학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서기관 김영준, 사무관 김낙신, 한철수)

### 3.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2004년 32개 마을에서 2005년에는 47개 마을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조성된 마을의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역량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여 마을의 운영 및 경영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기화(입문)과정, 리더십과정, 사업주체별 특화과정 등 4개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인원은 2004년도 1,000명에서 2005년도에는 1,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1촌 전문가시스템’은 마을과 전문가간 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개발, 갈등중재, 주민교육,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마을운영 전반에 관한 자



문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가는 매월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하고, 전화·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05년도에는 40개마을과 40명의 전문가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산어촌체험박람회,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 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부터 농협과 기업·단체 등 민간주도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1사1촌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를 포함하여 농협, 농업기반공사,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무역전시관에서 2005.4.27~5.1 기간중에 농산어촌체험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박람회 관람 인원은 당초 목표 50천명을 초과한 68천명이 다녀가는 등 도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농산어촌체험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흥미있는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농업·농촌문화와 가치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도농상생 공감대 확산의 기폭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간·지역간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농촌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7~8월 두 달 동안 농림어업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나의 농촌문화체험기’를 공모하는 한편, 도시·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교환 방문하여 문화체험 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토록 도농생활체험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교류의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도농교류 촉진법’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33㎡이하의 주말주택 및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종민, 사무관 전영미)

#### 4.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초창기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지역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을 병행 실시 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단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3단계(구상·중간·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05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범위 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 및 활용가능여부, 지역주민·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예비계획의 검정성 및 파급효과 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신청한 권역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조사팀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는 권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에는 총 645억원을 투입하여 40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20개 권역에 대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와 지역전문가 등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도록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성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견지하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재수)

####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의 성과로 농업생산성과 소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생활환경개선 부문도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780개면(구)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 1단계 완료에 이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800개면(구)에 대한 2단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도시민 및 도시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에는 총 1,946억원(국고 1,916, 지방비 29)을 투자하여 338개 면에 대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51개 지구를 추진하여 16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 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그간에 추진되어온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주로 관 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마을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주택용지 조성 후 분양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입주민의 의견반영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에 우선 분양함으로써 인하여 주택건축 등 기존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입주예정자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이 농촌에 들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조성 등 메뉴를 다양화 하여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도 농촌에 함께 정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 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4년까지 50호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94~'04)사업 4,751개소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부터는 소규모 자연마을(20~50호)을 중심으로 제2단계('05~'14)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4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 개발, 7,751개소의 농촌 자연마을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개발 지원할 목표로 추진중이며, '05년도에는 589억원을 투자하여 346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표 3-2-11>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4까지	2005계획	2005이후
사업량(개소)	7,751	4,751	346	2,654
사업비(억원)	12,951	7,851	589	4,511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이성홍)

## 5.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제1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보화 기반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농업인들의 정보화 이용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농업인들의 정보활용도가 미흡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농업정보 콘텐츠 제공 및 정보화 교육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 농림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정보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 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에 중복문제 발생가능성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시·군·시도·농림부에서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조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업무경감과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농림행정의 혁신을 목적으로 구축중인 사업이다.

'04년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AgriX추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사업 이전에 구축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04.11 ~ '05.4). 시범사업을 통해 일선 시도·시군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05년도에는 직접지불제 사업군과 산지유통관련사업 등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신청서식 표준화 및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5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서식 표준화를 통해 공통서식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기본DB를 구축하고 정책기초자료 제공, 사업대상자 관리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off-line에서 on-line(사업신청-대상자선정-사업이행-자금집행)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별도보고 없이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도 이에 따르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AgriX를 통한 기대효과는 반복·중복처리 비효율제거 등 행정비용 절감 등 약 32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이력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조규표)

####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품목중심의 컨텐츠 및 도시지역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관련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을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도시지역 이용자와 함께 꾸며가는 컨텐츠도 제공할 계획이

다. 살아있는 농업정보 공유를 위해 동호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 품목중심으로 활동중인 동호회를 기반으로 정책담당자, 관련기술담당자, 유통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동호회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67개 주요 품목에 대한 경락가격 분석정보와 유통전문가의 시황·전망 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출하시기와 시장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농림 소속(유관)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농림분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분류·제공하여 농업인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4년까지 총 1,706농가에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기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인 홈페이지 모음 사이트를 개선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여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농산물 품평회를 겸한 시상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재를 기초·중급·전문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집중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공모과정) 개발을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통한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추진하였다. 교육기관 평가 및 교육강사 등에 대한 인증제 시행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교육이수 후 사후관리기능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재택·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 콘텐츠 확대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2개 농업계 대학에서 실시해 온 농업정보119 서비스는 농업정보 119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방문교육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문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lt;표 3-2-12&gt;

##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2	2003	2004	2005(P)
총 계	444,946	241,356	71,271	73,199	59,120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 활용)	145,099	97,596	20,126	20,445	6,932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62,516	28,512	12,843	13,182	7,979
전문교육 (농업경영정보)	16,776	11,688	2,379	2,039	670
농업정보119서비스	80,390	43,102	13,098	13,190	11,000
이동버스교육	9,256	5,388	2,090	1,230	548
생산자단체(농협) 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32,760	32,760	-	-	-
정보화선도자	53,063	1,374	9,897	16,292	25,500
자체교육(농협, 기술센터)	33,900	9,750	10,838	6,821	6,491

자료 : 농림부 투용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 라. 농림지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2000년 구축·운영 이후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 및 기능개선을 통해 일평균 4,800건의 접속건수와 총 14만여 건의 지식이 누적되어 농림공무원의 지식 습득 및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정착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외부로부터 KMS의 실효성을 인정받



아 '04년 중앙부처 정보화수준평가지 우수(A)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속도저하 등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점차 떨어져 노후화된 KMS 관련장비(9대)를 향후 5년간 지식증가율 및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소형급 운영장비를 중형급 DB서버, 웹서버 등으로 교체하고 스팸메일 차단, PC원격관리, 일괄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용량,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회의 자료관리, 부서별 공용화일 관리, 감사자료관리, 우선보고관리, 공용차량예약, 다면평가시스템 개발 등 행정과 정책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 기능을 도입한 실국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많은 지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행자부 정부지식관리센터(GKMC)와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지식공유 체제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림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식관리자를 통한 지식의 승인·평가를 통해 명실공히 정제된 지식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업무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림지식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전자정부 인프라가 되도록 추진될 것이다.

(정보화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정호진)

#### 마.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 추진

도·농간의 정보격차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농업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해 2005년에는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은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단위로 PC 5대, 프린터 1대, 위성TV 1대 등 공동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마을주민들의 정보화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에는 2004년과 같이 전국 20개 농촌마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억원에 국비와 지방비를 각 3억원으로 하여 마을당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마을 선정시 2004년에는 도에서 자체평가후 우리부에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토록 하였으나, 2005년에는 시군을 통해 신청한 마을을 도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이를 농림부에 통보토록하여 지자체에 지원마을 선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다.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 홍병기)

## 제7절 농정제도 개혁

### 1. 농지제도 개선

급격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구조개선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농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지제도를 재검토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농지제도 개선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농업계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농지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개정 농지법이 2005.7.21일자로 공포되어 2006.1.22일부터 시행(농지 임대허용범위 확대 관련사항은 2005.10.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참여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적 경영을 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타부문의 자본·기술·인력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여 소유요건중 농

업인의 출자지분을 현행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임차료 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를 허용하였으며, 규모화된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상속농지·이농후 계속 소유농지의 소유상한 예외를 허용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상속은 2ha까지 소유가 허용되며, 이농은 면적상한없이 임대기간동안 소유를 허용하였다.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여 농지처분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식량생산 및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한계농지 등 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촌활력 증진에 활용하고자 전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소득 및 편의 증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부과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선하여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여 농촌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그밖에, 개방에 따른 농지수급불안 등에 대비하고, 농지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2005.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부터는 농가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내용의 개정 농지법은 2006.1.2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농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2. 농지은행제도 도입

쌀 소비감소, 수입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동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이 있으며, 시행은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 7.21일을 개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농지유동화정보 제공”은 7월부터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06. 1월부터는 기능을 확대·보강하여 농촌주택 매물·귀농안내·농촌정주 및 농촌관광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자기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10.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였다.

재해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임대 기간중 환매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06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06년에는 농지은행제도 정착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농지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 3. 협동조합 개혁

#### 가. 추진현황 및 방향

지난해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04.12.31 공포, '05.7.1시행)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등의 농림부 고시를 제·개정하였으며,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설립 규정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세제 감면 방안이 관련법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재경부 및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추진(9월)하여 향후 농업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법 부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신·경분리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나안진회계법인, '05. 5~'06. 4)하여 추진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동 연구과제가 '06. 6월까지 농림부에 제출되면 11월중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예정인 신·경분리추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을 취합 조정하여 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4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

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2006년부터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순자본비율 4%로 강화되는 점을 감안, 경영약체조합에 대한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2004년 1월부터 부실조사와 관련하여 4개팀(2개팀 확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부실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부실규모가 큰 조합 및 합병·계약이전 등으로 퇴출된 조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부실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9월 30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38개 조합 중 119개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62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297명에 대하여 2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하고 48억원은 소송을 완료하였고, 249억원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 나.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개정 농협법에 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상임이사 도입조합 범위를 자산 2천억원 이상으로 규정('07년, 1,500억원이상)하였는데, '04년현재

82개 조합이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도입하더라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 문제도 전·상무 중 1인을 줄이면 인건비 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조합의 재무건전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 납입 확약 총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출자금 확대를 통해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 실익을 제고 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여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개정안으로 인한 기준미달조합은 2년간의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존 1조합 1표방식의 중앙회 총회의결권은 조합별로 조합원 수에 큰 편차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조합별로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격요건에 타 업무의 겸직금지 및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섯째, 조합원들의 동의로 회계장부 등의 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배종혁, 박순연)

#### 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가. 추진배경

기존의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12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나. 기본 정책방향

- (1)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 (2)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내 산·학·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 (3) 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개소당 평균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클러스터 정책과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200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 (1) 사업추진방안 수립

- 가) '04.2.23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시 농정추진 및 지원체계 개편과 지역농업발전전략을 포함하고, '04.3.8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고하였다.



- 나) '04.5.25~10.31 「지역농업클러스터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초청토론회, 현장사례조사, 지역농업 활성화 워크숍, 지방농정과 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다) '05.1.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05.1.1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 시범사업 추진

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한 후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에 총 63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광역지자체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농림부에 총 28개의 사업을 신청하였다.

<표 3-2-13>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유형별 현황

구 분	주도적 혁신주체 구분				특성화 정도 구분			
	대학·연구소	생산자단체	관련기업	지자체	생산·유통	가공	테마	
기	영동포도, 풍기인삼(2)	안성마춤(1)	포천한과(1)	괴산고추, 아산친환경, 서천모시, 장수사과, 정읍순환농업, 임실치즈, 보성녹차, 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9)	안성마춤, 괴산고추, 장수사과, 임실치즈, 보성녹차, 풍기인삼(6)	포천한과, 영동포도, 서천모시, 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5)	아산친환경, 정읍순환농업(2)	
초	경남양돈(1)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4)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 경남양돈(5)			
	소계(18)	3	5	1	9	11	5	2
광역(2)	경북한우(1)			제주감귤(1)	경북한우, 제주감귤(2)			
합계(20)	4	5	1	10	13	5	2	

나) 이에 농림부는 사업부서의 사업성 심사, 실무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및 현지심사,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특색있고 다양한 유형의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발표 <표 3-2-13>한 후 각 사업단별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2005년도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각 사업단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3년간의 농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 또한, 농림부는 시범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이외에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통시설 지원 등 기존의 다른 농림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20개 시범사업단 간 지식과 기술 등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단 총괄책임자협의회」와 사업단의 현안 및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주체(리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라. 향후 추진계획

##### (1) 지속적인 현장애로 해결 및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외부의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클러스터 사업추진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 (2) 중장기 농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수립 추진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연구용역 결과 및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토대로 본 사업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 및 전국적인 농산업클러스터 지도 작성 등 중장기적인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구조정책과 사무관 이정형)

## 제8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적극 대응

DDA농업협상은 2005년 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 개최를 앞두고 동 각료회의시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전개될 전망이다. 7월말까지 5차례의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종 소규모 각료급 회의, 주요국 회의 등을 통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8월 기본골격 합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쟁점들에 있어 아직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가 노정되어 있으며,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한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 등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남은 기간동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roser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7월말까지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으며, 동 초안을 토대로 2005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12월의 홍콩 각료회의시 세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관세감축, 보조금 감축 및 그린박스과 블루박스 기준 등 핵심쟁점별로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상당하여, 의장이 제시한 시한내 얼마만큼의 합의를 이루어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5년 8월 신임 WTO 사무총장의 취임도 협상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여러차례의 협상 결렬로 인해 금번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도 세부원칙 마련에 실패할 경우, WTO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이 예상되며, 주요국들의 협상 진전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미국과 EC 등의 적극적인 협상 진전 노력도 예상되고 있어, 소규모 각료

회의 등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 등으로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 및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던 관세상한 설정 저지,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TRQ 증량의 최소화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SP)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부원칙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공조 활동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G33)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안별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도 협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 협상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협상에 농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부원칙 협상을 위해 품목·정책별 정밀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협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이미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향후 협상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지속할 것이다.

####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확보 추진

DDA 농업분야 기본골격이 개도국 우대와 관련한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정부는 동 지위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비록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자기선정(Self-declaration)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UR협상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개도국 분류문

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적용에 대해 비판하고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등 국제여건상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도국 분류 시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제기가 예상되는 바, 개도국 그룹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는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이나 세부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부원칙이 마련된 후 각국이 C/S(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세부원칙 협상에서 최대한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약과정에서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개도국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일부 선진국들의 개도국 분류기준 객관화 시도를 저지하고 한국농업의 영세성, 개방이후 악화된 여건 등 개도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보강 및 핵심 이해관계국을 대상으로 실무급·고위급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 2.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가.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

북한농업은 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에너지 및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식량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으로 2000년 이후 식량 생산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톤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상호조, 병해충 발생의 감소, 비료 등 농자재의 안정 공급, 수리시설 개선에 의한 농업용수의 안정 공급, 이모작 확대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며 부분적으로는 생산주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식량안보는 호전되었으나 계층간에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도 650만명은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기준)

- '05년도 곡물 총생산량은 '04년 대비 약 5.3% 증가한 454만톤으로 추정  
- 연간 수요량 600여만톤, 생산량 400여만톤 수준으로 매년 200여만톤의 식량 부족
- ※ 최근 5년간 북한의 연평균 곡물 도입량(유상수입+무상지원)이 112만톤임을 감안, 금년에도 110만톤 내외의 곡물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실제 부족량은 10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출처 : 통일부, 농촌진흥청

##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 (1) 정부차원의 지원현황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1995년 쌀 15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9년 비료 15.5만톤, 2000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2001년 비료 20만톤, 2002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 2003년 비료 30만톤,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을 무상지원하였고 쌀 5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내산 쌀의 재

고 부족으로 10만톤은 국내산 쌀을 제공하고 30만톤은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한 식량 이외에도 2001년부터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매년 10만톤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및 농업지원 등 물자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 표 3-2-14 > 연도별 대북 정부지원 현황

연도	지원내용	비고
1995	○ 쌀 15만톤(무상지원)	
1996	○ 혼합곡물 3,409톤(WFP) ○ 분유(UNICEF, 100만달러) 등	
1997	○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혼합곡물 9,852톤 (WFP) ○ UNICEF 등 UN기구 경유 980만달러 등	
1998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WFP)	
1999	○ 비료 11.5만톤	
2000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2001	○ 비료 2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방제지원(WHO, 46만달러) ○ 아동용 내의 150만벌	
2002	○ 쌀 40만톤(식량차관) ○ 옥수수 10만톤(WFP) ○ 비료 30만톤 ○ 말라리아 방역지원(WHO, 59만달러)	
2003	○ 쌀 4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방역지원(WHO, 66만달러) ○ 취약계층 기초의약품 지원(UNICEF, 50만달러)	
2004	○ 쌀 4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WHO, 67만달러) ○ 취약계층 지원(UNICEF, 100만달러) ○ 용천재해 지원(WHO, 20만달러)	

자료출처 : 통일부

## (2) 민간차원의 지원현황

1995년부터 2004년 말까지 북한에 총 4억 2,477만달러를 지원하였다. 창구별 지원액 비중은 국제적십자사 0.8%, 대한적십자사 29.3%, 독자창구 69.9%로 독자창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북지원 초기 민간단체는 독자적인 지원창구를 갖지 못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물품을 기탁하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1999년 2월 10일부터 민간단체는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다양해졌다. 1999년만 하더라도 민간단체 독자창구는 10개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33개로 증가하여 2004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억 4,108만달러(1,661억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은 26%이며 나머지 74%는 개별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2001년의 경우 한적 대 독자창구 비율이 34:66이었던 것에 비하여 3년 동안 한적 창구를 통한 지원이 소폭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7개 단체(7개 사업)에 대해 33.8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던 것이 2004년에는 23개 단체(25개 사업)에 88.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5년 동안 총 29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개별사업과 합동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100억원과 50억 원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lt; 표 3-2-15 &gt;

## 연도별 대북 민간지원 현황

연도	지원내용	비고
1995	25만달러 ○ 담요 8천매(국적경유)	
1996	155만달러 ○ 밀가루, 분유, 식용유(국적경유)	
1997	2,056만달러 ○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2,085만달러 ○ 감귤 100톤,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한우, 젖소, 비닐, 설탕 등	



연도	지원내용	비고
1999	1,863만달러 ○ 감귤 4,436톤, 비료 4만톤 등	
2000	3,513만달러 ○ 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옥수수 등	
2001	6,494만달러 ○ 배 3,150톤, 사과 4,000톤, 감자 5,000톤 (우리농산물나누어먹기운동) ○ 감귤 10,000톤, 당근 4,000톤 ○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2002	5,117만달러 ○ 농업복구 - 농기계수리공장, 국수공장 등(우리민족) - 수정채배 시설지원(월드비전) ○ 보건의료, 일반구호 등	
2003	7,061만달러 ○ 잣나무 묘목 등 35만주(대한적십자사) ○ 남북농발협의 씨감자, 농자재 등 ○ 기초의약품, 의료기기, 병원보수 등 ○ 종자, 비료, 농기계 등	
2004	14,108만달러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학용품, 연탄 등 ○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 보일러, 타일 등 건축자재 ○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계	4억 2,477만달러(5,109억원)	

자료출처 : 통일부

#### 다. 남북 농업협력 위원회 발족

남과북은 2005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농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 회담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쌍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남한의 농림부 차관과 북한의 농업성 부상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여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이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과제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5개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18일부터 19일 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용조

남과 북은 농업분야협력을 기존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지원·협력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당국간의 농업협력 추진방향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 산림복구협력, 농업 과학기술분야협력 등 의미있는 시범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쌍방간에 논란이 된 농업협력 접근방식의 차이를 다소 좁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라.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대비 체계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와 내용면에서도 다양해졌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차관이나 비료지원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농업협력의 목표를 남북한 농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안정과 농업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상호주의원칙을 유지하며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제협력에 따른 유무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북한이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현재의 식량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협력주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협력의 형태를 상업적 협력, 농자재지원 및 기술교류,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은 상업적 협력, 농자재 지원이나 기술교류 등 소규모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농업복구나 개발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농업협력 추진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 주체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수용상황,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조정책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 부록

1. 2004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 389
2. 2004년도 하반기